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고혜진

강신욱·이원진·류진아·김종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 사업단 연구교수

연구보고서 2025-14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주)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002-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14>

발|간|사

이 보고서는 사회보장 제도 확충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의 다양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 양상과 그것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분배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혜진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같은 원의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이원진 연구위원, 류진아 전문연구원과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 사업단 연구교수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기태 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주신 조언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두 분 자문 위원 외에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황선재 교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김새롬 교수 등의 각계 전문가께서 나눠주신 연구 경험과 결과는 이 과제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제의 평가를 맡아주신 세 분의 익명의 원내외 평가위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의견으로 보고서의 질을 한층 제고할 수 있었다. 이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이 향후 우리나라 복지 제도 개선에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본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가설	17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버거운 생활비 부담: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33
제1절 분석 개요	35
제2절 분석 방법	39
제3절 분석 결과	45
제5절 소결	66
제3장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 상대적 임금 격차	69
제1절 분석 개요	71
제2절 분석 방법	77
제3절 분석 결과	79
제5절 소결	108
제4장 어두운 미래 경제 전망: 자산 불평등의 영향	111
제1절 분석 개요	113
제2절 분석 방법	123
제3절 분석 결과	126

제5절 소결	158
제5장 체감 분배를 좌우하는 요인은?: 분배 인식 결정 요인	161
제1절 분석 개요	163
제2절 분석 방법	164
제3절 분석 결과	165
제5절 소결	183
제6장 결론	18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89
제2절 정책 제언	195
참고문헌	201
부 록	217
부록 1 연구 가설 도출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내용 ..	217
부록 2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사례 수	224
Abstract	22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서민과 중산층 기사의 주제 및 핵심어	25
〈표 2-1〉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구성	41
〈표 2-2〉 2023년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47
〈표 2-3〉 3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64
〈표 2-4〉 4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65
〈표 3-1〉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20개 집단	86
〈표 3-2〉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개 집단	87
〈표 3-3〉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하락 폭이 큰 20개 집단	89
〈표 3-4〉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상승 폭이 큰 15개 집단	90
〈표 3-5〉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10인 이상 사업장)	93
〈표 3-6〉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95
〈표 3-7〉 출생코호트별, 연령대별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비교	97
〈표 3-8〉 이전 코호트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	98
〈표 3-9〉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104
〈표 4-1〉 중첩 빈곤 가구(3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137
〈표 4-2〉 중첩 빈곤 가구(12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138
〈표 4-3〉 순자산 분위별 금융/실물자산 보유 현황	140
〈표 4-4〉 순자산 분위별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	141
〈표 4-5〉 중간 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145
〈표 4-6〉 고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146
〈표 4-7〉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150
〈표 4-8〉 미래 가계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151
〈표 4-9〉 연도별 주관적 계층 분포	152
〈표 4-10〉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153
〈표 4-11〉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153
〈표 4-12〉 소득 분포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	155
〈표 4-13〉 자가 보유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2018년 ~ 2023년)	155



〈표 4-14〉 코로나19 전후 소득 분위별 주관적 계층감의 한계효과 차이	157
〈표 5-1〉 분배 인식 소득 모형	166
〈표 5-2〉 소득 분위별 지출 부담 분포	168
〈표 5-3〉 분배 인식 지출 모형	170
〈표 5-4〉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지출 모형 (확률효과)	171
〈표 5-5〉 소득 분위별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72
〈표 5-6〉 분배 인식 임금 모형	173
〈표 5-7〉 노동 소득 분위별 자가 보유 여부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74
〈표 5-8〉 분배 인식 임금 모형(확률효과)	176
〈표 5-9〉 분배 인식 자산 모형	179
〈표 5-10〉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자산 모형 (확률효과)	181
〈표 5-11〉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81
〈표 5-12〉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여유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182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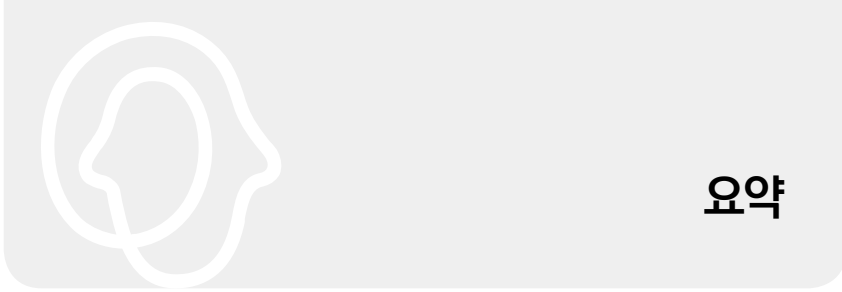
[요약 그림 1] 연구 결과 요약	2
[요약 그림 2] 정책 제언 요약	5
[그림 1-1] 소득 불평등 추이(지니계수 변화)	10
[그림 1-2]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11
[그림 1-3]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인식	13
[그림 1-4]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추이	13
[그림 1-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소득 10분위 배율 (2013~2023년)	14
[그림 1-6]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용인 정도	18
[그림 1-7] 연구 가설 및 내용, 방법 요약	31
[그림 2-1] 2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35
[그림 2-2]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전체 부문 표본	42
[그림 2-3] 복지 부문 표본과 전체 부문 표본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44
[그림 2-4] 소득 및 지출 평균	46
[그림 2-5]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49
[그림 2-6] 지출 지니계수	50
[그림 2-7] 지출 항목 평균	52
[그림 2-8]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	53
[그림 2-9]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1	55
[그림 2-10]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2	56
[그림 2-11] 경상소득 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1	60
[그림 2-12] 경상소득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2	61
[그림 2-13] 고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수준	62
[그림 3-1] 3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71
[그림 3-2]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79
[그림 3-3] 시간당 임금의 10분위 배율 변화	80
[그림 3-4] 집단 구분과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81
[그림 3-5]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 임금 상승률 - 성, 연령대, 학력별	84



[그림 3-6]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임금 상승률 - 사업장 규모, 경력, 산업별	84
[그림 3-7]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구성비 변화	100
[그림 3-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변화	101
[그림 3-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2010~2023년)	102
[그림 3-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지니계수 변화	103
[그림 3-11] 아파트 가격과 임금의 변동(2003년=100)	106
[그림 3-12] 평균 임금으로 아파트(99.9㎡=30평)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107
[그림 4-1] 4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113
[그림 4-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추이 (2013~2023년)	115
[그림 4-3]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10분위 배율 (2013~2023년)	116
[그림 4-4] 중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자산 종류별 격차 (2013~2023년)	117
[그림 4-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 (2013~2023년)	118
[그림 4-6] 소득 및 총자산의 10분위 배율 (2013~2023년)	127
[그림 4-7] 재산소득 및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 (2013~2023년)	128
[그림 4-8] 순자산 저(低)자산 집단의 소득-자산 중첩 빈곤 추이	130
[그림 4-9] 순자산 분위별 부채 규모 및 연체 여부, 자산 대비 부채 비중 변화	131
[그림 4-10] 순자산 1분위와 10분위의 자산 보유 양상 및 자산 규모(2013=100) 변화	134
[그림 4-11]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공적 이전 포괄률	135
[그림 4-12]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 및 공적 이전 포괄률	136
[그림 4-13] 순자산 분위별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43
[그림 4-14] 중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145
[그림 4-15] 상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146
[그림 4-16]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47
[그림 4-17] 부동산 자산이 없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48
[그림 4-18] 부동산 자산이 있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149
[그림 5-1] 5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163
[그림 6-1] 연구 결과 요약	190



[그림 6-2] 정책 제언 요약	195
[부록 그림 1-1] 서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하는 기사 추이	221
[부록 그림 1-2] 최적 주제 수 산출을 위한 모형 비교	2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원인을 탐색한다. 주관적 분배 인식 정체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비 부담 증가, 임금 상승의 정체 및 임금의 실질 구매력 하락,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연구 가설로 세우고, 각 요인이 체감 분배 정체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찾고,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먼저, 선행 연구에서의 함의와 주관적 계층 인식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 서민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한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과도한 생활비 부담과 상대적 임금 상승의 정체, 자산 불평등 심화가 그것이다. 분석 결과는 [요약 그림 1]과 같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배 구조는 계속해서 더욱 평등해지고 있어 사람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비와 임금(노동 소득), 자산 등의 다른 경제적 자원의 분배 현실은 분배 인식의 정체를 반영하고 있다. 각 가설의 검증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무엇보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인으로 보인다. 식비를 중심으로 한 생활비 부담과 임금 상승의 정체 역시 부분적으로 분배 인식의 정체 혹은 악화와 관련되나, 이들도 자산 보유를 경유하여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요약 그림 1] 연구 결과 요약

연구 가설	가설 검증 결과	
	실태 및 추이 분석(2장~4장)	영향 분석(5장)
(생활비 부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가?	부분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의 높은 지출 부담으로 소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높음. -식료품비 이외의 다른 필수 지출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완만하게 완화됨. -소비 평준화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소비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 수준 상향으로 특히 식비를 비롯한 필수적인 소비를 위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났을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충분한 소득 및 과도한 식비 부담이 저소득층과 하위 중간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침.
(상대적 임금 격차) 특정 집단 중 임금이 정제되었는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였는가?	부분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임금 불평등도 완화되는 추세임. -임금 격차 축소의 이면에 임금 상승률이 정제된 집단 존재: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었던 집단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하여 분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불안정 노동의 확대 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분배 인식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정규직 여부는 여전히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함. -임금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 노동 소득자들 중 자가 미보유자의 불평등 인식이 높음. -노동 소득 자체보다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사회가 더 평등하다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였는가? 자산 불평등 심화로 미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는가?	강한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력(금융자산 보유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자산 가구는 코로나19국면에서 순자산 크게 감소함. -소득 빈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의 중첩 빈곤 가구의 규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첩 빈곤 가구 중 자가 보유 가구는 공적 이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음. -자가 보유가 중간소득가구의 주관적 계층감을 견인하는데, 점차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중간소득가구의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보유 및 규모 반영시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강건하나, 가처분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저자산 가구는 금융자산 보유액, 중산층 이상에서는 주택 자산 보유가 분배 인식과 강한 관련을 가짐.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발간된 이후, 불평등 심화의 주요인으로 주목받아 온 자산이 주관적 불평등 역시 좌우한다.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 기제 역시,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되었다(리사 앳킨스, 멀린다 쿠퍼, 마르티즌 코닝스, 2021). 다만, 자산 가격 상승이 소득 하락과 동반된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는 여전히 중산층에서의 소득 하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 자산에 대한 의존성은 더 분명한 것 같다. 노동 소득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높은 사회였던 만큼, 자산 보유의 집중과 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자산 격차, 낮아지는 자산 보유 가능성이 그 어느 사회보다도 정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산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소득 분배 지표와 주관적 분배 인식 간의 큰 괴리(Bavetta, Li Donni, & Marino, 2019)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을 크게 두 집단,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중간 소득자 집단(중산층)으로 나누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먼저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가계 경제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부족한 소득, 자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빈곤층 대상 소득 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 상향과 포괄성 확대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생계급여 상향과 급여 수준 현실화, 재산 환산 방식에 대한 재고를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복지제도와 같이, 단기 유동성

4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지원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운용하는 농식품 바우처와 같은 필수 재화 소비에 대한 바우처 지원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중간 소득 이상 집단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의 가능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을 제안한다. 요원해진 자산 보유 기회가 이들의 분배 인식 정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자산 보유가 가능하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택 자산 보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자산 보유 기반이 되는 노동 소득의 축적이 제한적인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노동 시장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일차적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공공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 등의 신용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중산층을 아우르는 제도로 포괄성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제도의 고용과의 연계성 완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요약 그림 2] 정책 제언 요약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저소득/ 저자산 집단	가계 경제 유동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현금 급여 상향, 급여 수준 현실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지원 제도 확충 -재산 환산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개편 -필수 재화 소비 지원 바우처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중산층 포함)
중간 소득자 집단	자산 축적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공급 확대(공공 임대 확대)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국가 보증 저리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주택 대출시 필요한 계약금 및 대출금 상환에 재정 지원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신용 지원 제도 마련 -취약 근로자 대상 공공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고용과의 연계성 강화: 거주를 요건으로 조세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의 개편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주요 용어: 주관적 불평등, 분배 인식, 소비, 지출, 임금, 자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가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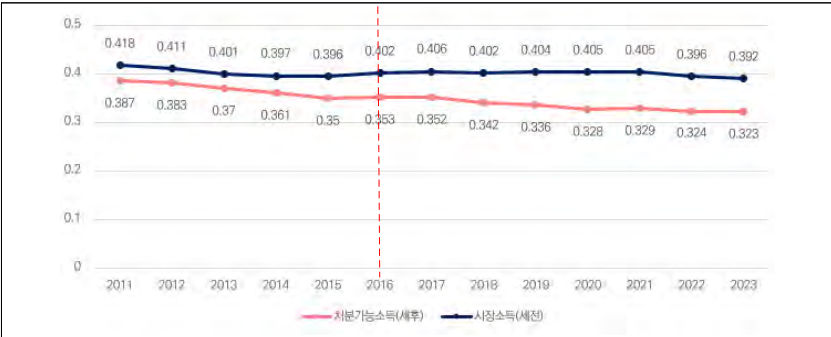
적어도 최근 1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까? 이 연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소득 분배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최근 10여 년에 주목하여, 객관적 지표와 달리, 사람들의 주관적 분배 인식이 정체되어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평등 측정의 주 원천인 가구 가처분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 소비, 임금, 자산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10년간 공적 이전 소득 확대에 힘입어 가구 수준에서의 가처분 소득 분배가 꾸준히 개선되었다(여유진, 2021;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그림 1-1]과같이, 2010년대 들어 국가데이터처에서 공식 발표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행정 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2016년을 전후로 소득 자료 구성에서의 차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소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완화하고 있다.¹⁾ 물론, [그림 1-2]의 상단에서 볼 때, 한국의

1) 2016년 전후 국가데이터처(당시 통계청)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정보를 행정 자료로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 자료 보완으로 소득이 포착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다소 악화된 양상을 보인다(이원진, 정해식,

소득 불평등 수준 자체는 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201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뚜렷하다.

[그림 1-1] 소득 불평등 추이(지니계수 변화)



주 : 0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사회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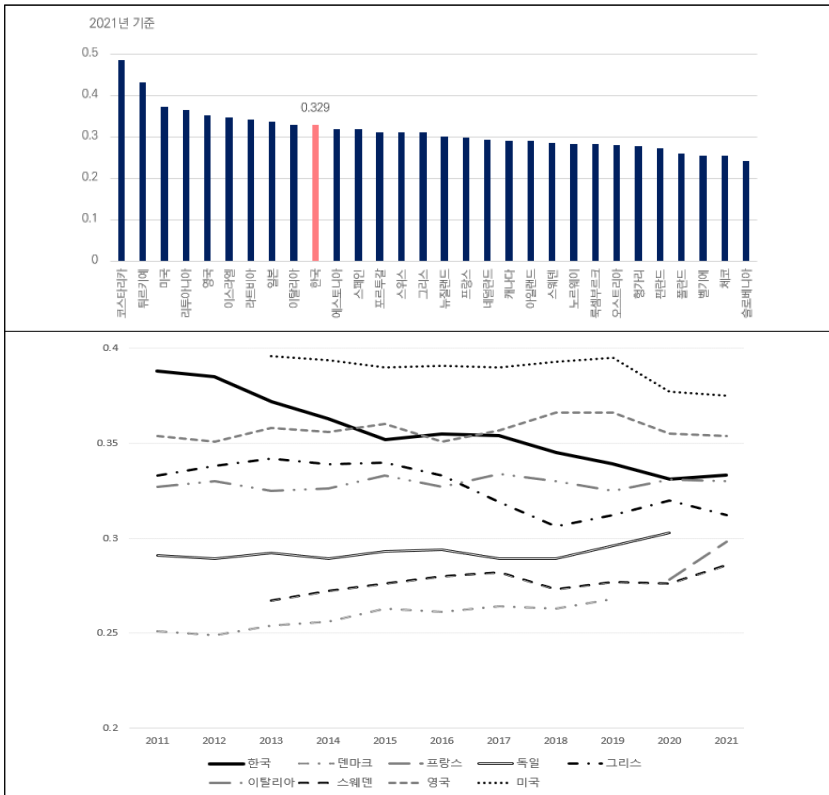
출처: “지니계수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2024. 12. 26.)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4225> 에서 2025년 2월 10일 내려받은 자료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소득 분배 악화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화하였다(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해당 시기 특히 소득 하위 집단에서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고,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쉬이 종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손병돈, 2000; 이정우, 이성림, 2001; 이해경, 김진욱, 2001; 김교성, 2003; 남상섭, 2005; 김낙년, 2012;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2010년대 들어 변화를 보였다. 1인 고령자 가구의 증가와 같은 소득 분배 악화를 추동하는 거시 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전지현, 2019).

개선된 것이다(여유진, 2021;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물론, 2020/21년 팬데믹의 여파로 노동 소득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심화하기도 하였으나(김유선, 2024), 이내 회복하였다.

[그림 1-2]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가처분 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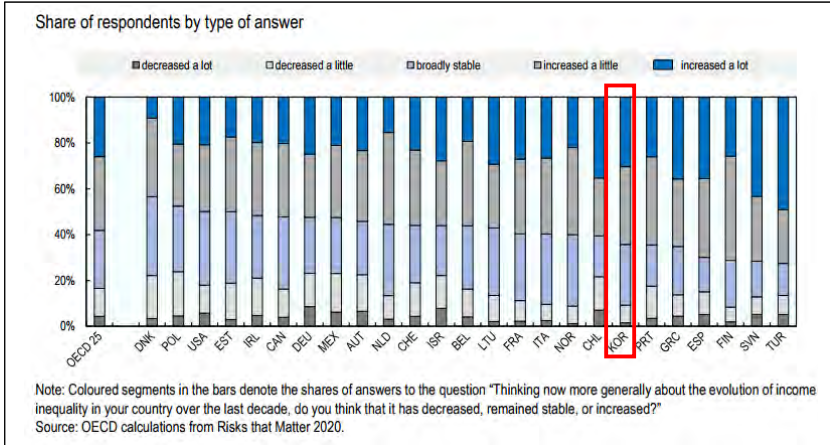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열에 여덟 이상은 고개를 젓는다(조돈문, 2023, p.7). 일례로 「가장 평범한 아픔」에서 저자는 건강 불평등과는 달리, 양극화나 소득 불평등 관련 기사에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현실은 더 심하다”라는 댓글이 으레 따라붙는다고 지적한다(김명희, 2024, p. 246). 실제로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약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약 30%는 매우 심화하였다고 본다. 분석 대상 25개국 중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튀르키예의 다섯 개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화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다. 황선재(2023)에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11점 척도로 구성된 우리 사회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수준에 관한 응답이 더 불평등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그림 1-4] 참고).

일각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분배 양상이 아니라,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의아하다. 우선,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10분위 배율도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인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득 계층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줄곧 80% 이상의 국민이 소득 격차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조돈문, 2023, p. 8). 실제로 분배 지표 개선이 이어졌던, 2018년 전후에도 약 85%의 국민이 소득 격차를 크다고 보았다(정해식 외, 2018). 2024년에도 같아서 소득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92.4%에 달한다(정세정 외, 2024)²⁾.

2) “한국은 소득 격차가 크다”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2024년 조사는 4점 척도(매우 동의, 동의, 반대, 매우 반대)로 구성하여,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간층을 포함한 5점 척도로 질문한 2018년과 차이가 있다. 2024년에 동의와 반대 집단의 비중이 2018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3]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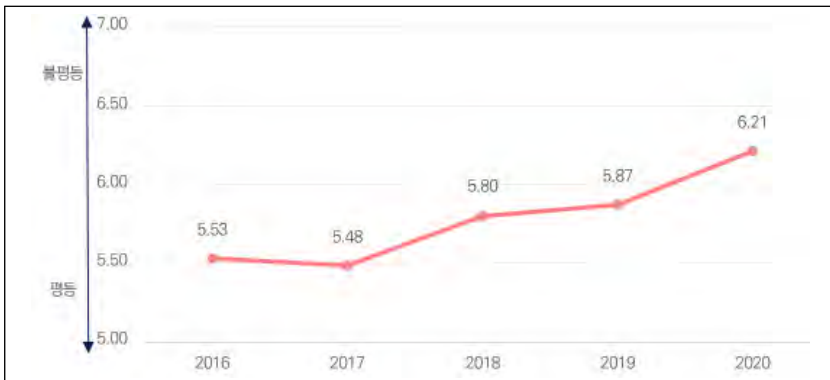
(단위: %)



출처: "Does Inequality Matter?: How People Perceive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al Mobility", OECD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023ed40-en>, p.49.

[그림 1-4]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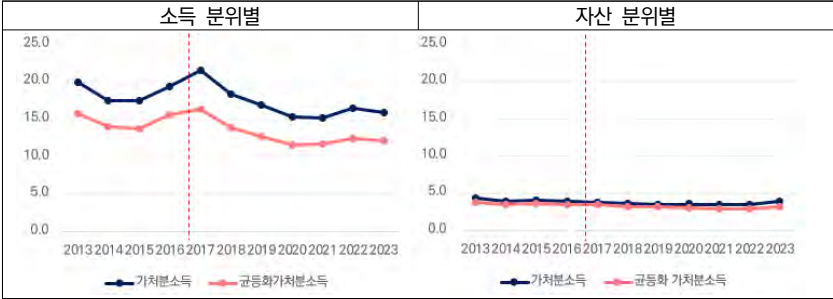
(단위: 점)



주: "귀하는 우리 사회의 소득 및 재산 등 경제력 수준이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11점 척도 응답으로, 0점 "전혀 평등하지 않다", 10점 "매우 평등하다"에 대한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산출한 평균 값이다.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클수록 경제적 수준을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경제적 불평등 인식 추이 및 원인 분석, 2016~2020", 황선재(2023), 한국사회학, 57(3), p.12.

[그림 1-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소득 10분위 배율 (2013~2023년)



주 1: 소득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가처분 소득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자산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가처분 소득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2: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물론, 실제 분배 지표 개선이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로 소득 분배 측정 자체의 부정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그간의 불평등 연구에서는 측정의 원천인 소득 자료의 정확성을 더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일례로 행정 자료 보완 덕분에 근래 객관적 차원에서의 측정이 더욱 엄밀해지고 정확해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현재 정부의 공식 소득 분배 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공식 소득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인 가구를 포함한 한국의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이다. 또한, 행정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에 대한 응답을 보완함으로써 무응답을 줄이고 공적 이전 소득 등의 정확성을 높였다.³⁾

3) 가계금융복지조사 이전에 소득 분배 측정에 활용된 자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석훈과 현진권(200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소득 자료에 부족함은 있다. 김낙년(2020)이 지적하듯이, 행정 자료와 결합을 통해 소득 파악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소득 포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소득 계층별 금융 소득 보유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분배가 과소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만한 소득 관련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자료를 통해 산출한 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소득 누락으로 체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과소 보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모든 시기에 공히 나타나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달리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자료 및 측정이 더 정교해져 온 만큼, 부정확한 불평등 측정 때문에 객관적 소득 분배 지표와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소득 분배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인들이 실제보다 불평등을 더 심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도 하다(Bavetta, Li Donni, & Marino, 2019). 왜 우리는 실제보다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하다고 느낄까?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후술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준동하는 극단적 정치 세력과 그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불안정의 원인으로 불평등의 심화가 지목된다(한정연, 2025.09.15). 경제적 분배의 악화가 곧장 폭력적인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회 내에 배태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교차해 갈등을 증폭시킨다(Stewart, 2000; Cramer, 2003; Kanbur, 2007). 분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경제적 지표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이다(Bottero, 2020, p.13; Duvoux, 2025; Phillips 외, 2025). 더구나 사람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좌우된다.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보다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회 불안의 가능성을 응축하는 것이다(Gimpelson & Treisman, 2018).⁴⁾ 그래서 주관적 분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년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에서 분배 인식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소득 분배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나 분배 인식은 정체 상태에 머무르는 시기여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 간의 차이를 밝히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또한, 기술적, 학술적 노력으로 분배 측정을 위한 원천 자료 및 측정상의 부정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시기여서 해당 문제로 인한 분배 인식과의 괴리에서 자유롭기도 하다. 실제 분석과 관련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집, 보완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이점도 있다. 물론, 인식의 변화가 실제 사회의 변화보다 더디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짧은 시기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관적 인식을 살피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것처럼, 객관적 분배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인 만큼, 분배에 대한 주관적 차원을 설명

4) 실제로 Gimpelson과 Treisman(2018)에 따르면 주관적 지니계수가 사회의 갈등이 극심하다는 응답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더 큰 것은 물론 정적(+) 영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실제 세후 지니계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주관적 불평등 인식이 실제 관측치보다 사회 현상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본다(김동훈, 하상웅, 2020; 우명숙, 남은영, 2023; 이충환, 2015; 조정인, 2014; Brooks & Manza, 2006; Choi, 2019; García-Castro, García-Sánchez, Willis, Castillo, & Rodríguez-Bailón, 2022; Gimpelson & Treisman, 2018; Kim & Lee, 2018; Kuhn, 2019; Trump, 2023; Duvoux, 2025).

하는 다른 요인을 규명하는 데 적합한 시기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의 분배 인식과의 관계 규명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제2절 연구 가설

1. 선행 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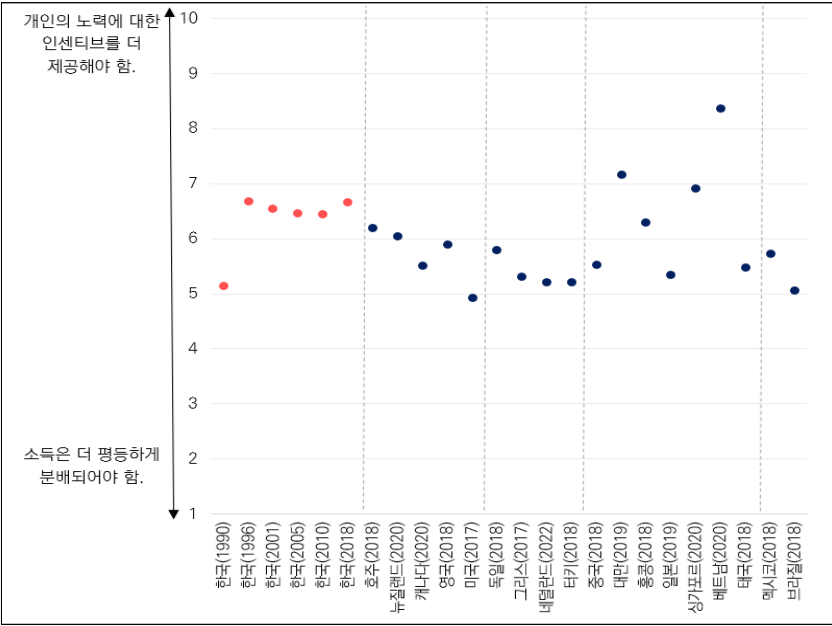
가.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사람들이 사회의 분배 수준을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Gimpelson & Treisman, 2018; Hauser & Norton, 2017; Knell & Stix, 2020). 인식하는 분배의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오차의 정도(degree)와 방향(underestimate vs. overestimate)이 상이하나, 관측된 객관적인 분배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명징하다(Jachimowicz et al, 2023). 사람들은 분배의 수준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는 물론, 분배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Gimpelson & Treisman, 2018). 분배 추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대개 실제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느낀다(Gimpelson & Treisman, 2018, p.17).

이토록 일관되게 사람들이 분배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Willis 외(2022)는 실제 분배 수준이 인지된 그것과 항상 관련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사람마다 불평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꼽았다. 불평등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얼마만큼인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소득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평등에 덜 허용적이거나 혹은 최근 들어 불평등에 대한 허용치가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실증 연구에서도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Du & King, 2022; Tejero-Peregrina, Willis, Sánchez-Rodríguez, & Rodríguez-Bailón, 2025; Trump, 2018).

[그림 1-6]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용인 정도



주: 표본 조사 결과를 모집단 분포에 맞추도록 조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값임.
자료: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6.0.",
Haerpfer, C., Inglehart, R.,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ds.). (2022).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WSA Secretariat. doi:10.14281/18241.24
자료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소득 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어, 불평등에 대한 용인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1-6]에서 세계가치관 조사 최근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용인 정도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한 서구 국가의 국민보다 한국인이 개인의 노력에 따른 소득 차이에 허용적이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보다 2010년대 이후 노력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소득 분배를 측정한 초기 연구자인 안국신(1995)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그는 당시의 소득 분배 개선과 상반되는 국민이 체감하는 분배의 악화를 낳은 불평등의 용인도, 지나친 평등주의 성향과 같은 개인 수준의 인식이나 가치관의 차원으로 치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국신(1995)은 불평등에 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분배가 나빠져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평등도 심화한 것이라고 보았다(안국신, 1995). 사람들이 분배의 개선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진단이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그의 문제 의식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 분배와 분배 수준에 대한 인식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의 인식이 실제 분배의 수준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소득 불평등의 수준을 보여주는 요약 지표에서 포착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 분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분배 개선의 체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다.

분배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다른 경제적 자원에 주목한다. 우선, 이 연구의 주목적은 정제된 분배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나 가치 판단 등이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차원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제도적 변화가 인식을 견인할 수 있지만, 개인의 모든 심리적 요인이나 가치 판단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 사회적 요인보다는 측정 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개인의 심리 사회적 요인과 분배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주관적 요인보다는 객관적 측면, 즉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에 주목하고 주관적 측면과의 관련성 규명은 후속 과제를 통해 다뤄지길 희망한다.

나.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긴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분배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객관적 분배 지표를 고려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의 객관적 분배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로 요약된다(García-Castro, García-Sánchez, Willis, Castillo, & Rodríguez-Bailón, 2022; Du & King, 2022; Trump, 2018; 2023). 또한, 기존 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소득의 지니계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같으면서도,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사뭇 다르다. 예컨대, 국제사회 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자료로 국가

수준의 실제 분배 정도와 주관적 분배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과가 비일관적이다. Gimpelson과 Treisman(2018)에서는 두 요인 간에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García-Castro, García-Sánchez, Willis, Castillo & Rodríguez-Bailón, 2022; Trump, 2023). 게다가 Trump(2023)에서는 관계의 방향성에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비일관적인 결과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다. 상기한 다국가 연구에서는 대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국 내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하여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다. 우선, Hu와 King(2021)는 중국 내 25개 지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지니계수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보였다. 반면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Newman과 Shah Lauterbach(2018)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정적(+)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의 특징적인 점은 거주 지역을 준거집단으로 명시하고 지역의 불평등 수준과 인지된 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이다(Newman, Shah & Lauterbach, 2018).

이처럼 실제 분배 상태와 인식 간에 관계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 분배 지표를 중심으로 주관적 분배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소득 이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이 누락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분배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는 분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소득 분배가 담아내지 못하는 다른 측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가늠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앞서 논의한 것처럼,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분배 지표는 소득의 지니계수에 국한된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소득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적 지위 변화가 사람들이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영역에서의 실제 분배 상태를 측정하고 해당 지표와 분배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관련해서 선행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제한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느낄만한 지점을 귀납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지표에서 포착하지 못한 분배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 한 방법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주관적 계층 인식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인 서민과 중산층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여, 소득 이외에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분배 인식 정체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 가설을 도출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 이유 및 분석 방법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2. 귀납적 증거: 서민과 중산층 관련 언론 보도의 주요 주제

서민과 중산층 키워드로 수집한 언론 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서민과 중산층 관련 주요 주제는 15개로

크게는 경기와 소비 혹은 투자, 금융, 주거 및 부동산, 정치 및 정책, 사회 문화의 여섯 개 영역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성이라는 공통된 맥락에서 논의되지만, 강조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산층'은 사회적 계층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미래에 대한 준비 등 주로 경제적 지위와 중점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반면, '서민'은 일상생활의 어려움, 재난에 대한 취약성, 당면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삶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경기와 관련하여 서민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나 지역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지는데,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동향이 다뤄진다. 또한, 분배와 관련한 내용은 서민 관련 기사에서는 주요 주제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중산층 관련 기사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진다. 한편, 소비와 투자 측면에서 서민과 관련해서는 주로 생활 물가가 다뤄지는 것에 비해서, 중산층 기사에서는 투자 관련한 주제가 다뤄진다. 금융과 관련해서도 각 집단의 기사가 주로 다루는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서민에서는 대출이나 금융 지원 정책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융 범죄가 서민 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중산층 기사에서도 대출이 주요하게 다뤄지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가계부채 인상과 주로 관련되고 연금 등 노후 준비 관련 주제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두 집단에서 모두 주거나 부동산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임대 주택 관련 주제가 공히 나타나는 것과 달리, 서민 관련 기사에서는 담보대출이, 중산층 관련 기사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세금이 주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나 정책 영역에서는 선거철 대통령이나 정치인, 각 정당들이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들 단어를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두 용어 간에 차이가 있다면, 중산층 관련 기사에서 정책과 관련한 담론이 훨씬 더 상세하게 다뤄진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이슈 내에서도 상이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도 서민 기사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공제”가 중산층 기사에서는 핵심어로 등장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서민은 피해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개념화되어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중산층은 '몰락 방지'와 '경제의 중추 유지'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다뤄진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생활비 부담은 계층 구분 없이 주요 관심사로, 에너지비, 식품비, 주거비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계층별로 상이한 정책 접근이 미디어 담론에 명확히 반영되며, 서민 대상은 금융 지원, 중산층 대상은 조세·자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진다. 또한, 금융 관련 주제가 세분화되어 도출된 점은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금융 접근성과 제도적 보호가 핵심 관심사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금융 및 가계부채, 생활 경제 및 물가 관련 담론이 여러 토픽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적 경제 부담이 담론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불평등이나 분배 문제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소득 보다는 생활 물가의 문제나 부채 부담, 자산의 축적 등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인지할 공산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배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분배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 살피고자 한다.

〈표 1-1〉 서민과 중산층 기사의 주제 및 핵심어

구분	서민		중산층	
	주제	핵심어	주제	핵심어
경기	일자리 및 지역경제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코로나, 경기도, SOC, 사업비, 개선편면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 동향	현지시간, 미국인, NYT, 인스턴트, 인플레이션, 워싱턴, WSJ, CEO, 미국인들
			소득 분배	빈곤층, 중위소득, 통계청, OECD, 지니계수, 현대경제연구원, 실질 소득, 처분가능소득, 저소득층
소비/투자	에너지 및 공공요금	휘발유, LPG, 공공요금, 도시가스, 유류세, 전기요금, 난방비	자산관리 및 투자	재테크, 부동산, 자산관리, 자산가, 수익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피케이, 증권사
	식료품 가격	삼겹살, 돼지고기, 농산물, 소비자, 상승률, 기름세, 고등어, 장바구니	글로벌 소비시장 및 해외 중산층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세안, 브랜드, 아시아, 백화점, 브라질, 신흥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구시, 상품권, 캠페인, 상인들, SSM, 골목상권, 공정위, 재래시장		
금융	서민 금융 및 대출 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감원, 신한은행, 사금융, 저신용자, 신용대출, 서민금융, 햇살론	연금 및 노후 준비	이데일리, 개인연금, 국민연금, ISA, 모바일, 퇴직연금, 가입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서민 금융 지원 정책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드림론	가계부채 및 대출	자영업자, 자영업, DSR, 가계부채, 중신용, 중소기업, 저금용, 원리금, LTV, 안심전환대출
	카드 결제 및 소상공인	서민감부, 카드론, 수수료, 카드사, 베이글, 리빙빙, 가맹점, 프랜차이즈		
	금융 범죄	피해자, 변호사, 보이스피싱, 법무부, 경찰청, 대출사기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보험료, 이데일리, 자동차, 새마을금고, 보험사, 모바일, 서비스		

구분	서민		중산층	
	주제	핵심어	주제	핵심어
주거/부동산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가, 임대주택, 임대료,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임대주택 및 주거 정책	뉴스테이, 임대주택, 국토부, 임대료, 경기도시공사, 입주자, 공공임대, 보증금
	부동산 및 주택 담보 대출	부동산, 아파트, dsr, ltv, 주택담보대출, 전셋값, 디딤돌대출, 변동금리, 코픽스	부동산 세금	중부세, 상속세, 보유세, 공시가격, 아파트, 재산세, 다주택자
	정치인 및 정당 활동	한나라당, 민주당, 경남도, 서민재, 국회의원, 홍준표, 무상급식, 새누리당	미국 정치 및 선거	트럼프,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클린턴,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샌더스
정치/정책	대통령 및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친서민, 국민들	대통령 및 에너지 정책	오바마, 난방비, 대통령, 대통령실, 공화당, 윤석열, 예비비, 기도회
	세금 정책 및 세제 개편	법인세, 단뎀값, 소득세, 종부세, 재형저축, 중산층, 주민세, 개정안	세금 정책 및 세제 개편	세계계편안, 개정안, 세법개정안, 지출액, 소득공제, 세무담, 세액공제, 소득세
			교육 및 공약	등록금, 장학금, 당선인, 박근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한나라당
사회 문화 (미디어)			코로나 지원 및 복지 정책	코로나, 한국당, 지원금, 자영업자, 기본소득, 소상공인, 민부론, 재난지원금
	문화 및 예술	사람들, 이야기, 기생충, 서민지, 드라마, 막걸리, 아버지, 할머니	문화 및 예술	유아인, 베테랑, 외국인, 대학살, 관리자, 마크롱, 도우미, 컬렉터, 외국어
			미디어	야세르, 사우디아라비아, 비정상회담, JTBC, 아파트, 머신러닝, 엘리트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3. 연구 가설

선행 연구 검토 결과와 귀납적 증거에서 도출한 함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생활비 부담의 증가이다. 예컨대, 소득보다 물가 상승이 가팔라 생활 수준이 악화했을 수 있다. 또는 필수재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은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민 관련 기사에서 에너지나 식료품비 부담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최근 언론은 물가 상승보다 노동 소득의 증가가 더디다고 보고했다(박재현, 2025.01.30.). 노동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최근의 국내 정치 불안정과 환율 및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김진아, 2025.02.09.),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필수 재화를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되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군의 학자들은 소비 중심의 분배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김기태 외, 2019; 이현주, 2019; Krueger & Perri, 2006; Meyer & Sullivan, 2023). 이 맥락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였을 때 소득 분배 양상과 필수재 소비에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소득의 분배 양상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하는 자산의 영향이다. 영끌, 빚투, 코인 광풍 등 증산층 관련 기사에서도 핵심어로 등장한 바 있듯이, 자산 축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일해서 뭐 하냐?”라는 냉소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문병곤, 2018.01.26.).

20대의 젊은 층이 자산 투자에 열중하는 이유로, 노동 소득과의 관계가 지목된다. 노동시장 입직이 늦어짐에 따라서 노동 소득을 축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그로 인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자산을 쌓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작용한다는 것이다(임성빈, 2021.05.25.).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처분 소득과 달리 노동 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거나, 노동 소득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불평등해서 혹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분배의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에 자산 축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노동 소득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지적된 바 있다(이병희, 황덕순, 홍민기, 오상봉, 전병유, 이상현, 2014). 이 양상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 노동 소득의 불평등이,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 소득 성장세가 더딘 사람들은 이를 더 크게 문제시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산 자체의 불평등이 커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구의 미래 경제 상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Duvoux, 2025).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노동 소득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 소수이기 때문에(Davis & Shorrocks, 2000),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크다(정준호, 전병유, 2016; 이우진, 2018; 전병유, 2019; 정준호, 전병유, 2020;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김지훈, 강욱모, 2021; 김상봉, 김시연, 홍종혁, 2023).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에서도 자산 소득의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다(이성재, 이우진, 2017). 특히, 분배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물을 때, “무엇”에 대한 분포 상태를 질문하는 것인지 모호하고, 이를 함께 묻는 경우도 있다(한국복지패널 등). 설령 “소득” 분배라고 명시하여 질문하더라도,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을

구분해서 답하기보다는 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황선재(2025)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전술한 세 가지 가설을 순차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장은 가설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분배 추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 장에서 다루는 주요 요인이 주관적 분배 인식 형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만한 요인을 추가로 살핀다. 예컨대, 2장의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세부 지출 항목별 분석을 주되게 고려한다. 필수 재화 지출 부담이 소득 분위에 따라 상이하고, 이것이 분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장의 임금 불평등에서는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낮아진 사람들이 분배 개선을 덜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임금의 실질 구매력 및 임금 상승률의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어서 4장의 자산 불평등과 관련하여서는 미래 대응성과 자산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자산 종류에 따라 분배에 대한 인식이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고 보고, 자산 종류별 분석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선 2~4장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요인들이 분배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과 분배 인식 간 괴리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준”뿐 아니라, “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개선”은 한 시점에서의 불평등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내의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개선이 두드러졌던 최근 10년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물론, 인식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시계에서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일관된 자료원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짧은 시계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소득 분배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나, 분배 인식은 계속해서 정체 상태이므로 이 시기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분석 자료와 관련하여, 각 연구 가설을 다루는 데 적합한 여러 자료원을 활용한다. 각 장의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이 분석에서는 가설별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가설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고 이를 망라하는 자료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 역시 현황 및 추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회귀분석을 병행한다.

제시한 연구 가설에 따라, 이 연구는 [그림 1-7]과같이 구성한다.

[그림 1-7] 연구 가설 및 내용, 방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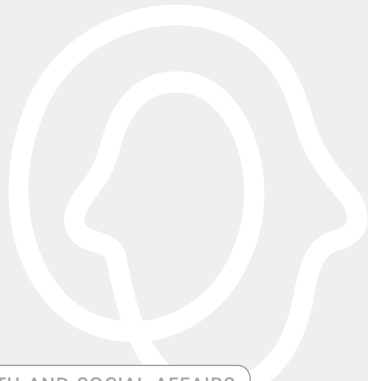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연구 가설	연구 내용 및 방법	
	경제적 자원의 분배 실태 및 추이 분석(2~4장)	분배 인식 결정 요인 분석(5장)
(생활비 부담) 생활비를 감당하 기에 소득이 충분하 지 않은가?	(2장) 버거운 생활비 부담: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분석 내용: -소득 및 지출의 분배 추이, 지출 고려 시 분배 구조 변화 -분석 방법: 기술 분석	-분석 내용: 불충분한 소득, 과도한 식비 부 담이 분배 인식에 미치 는 영향 -분석 방법: 패널 회귀 분석(고정, 확률효과)
(상대적 임금 격차) 특정 집단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었는 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 이 하락하였는가?	(3장)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 상 대적 임금 격차 -분석 내용: 임금의 분배 양상 및 아파트 가격 대비 실질 구매력의 집단별 변화, -분석 방법: 기술 분석, 회귀분석	-분석 내용: 노동 소득, 노동 소득 증가율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패널 회귀 분석(고정, 확률효과)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심 화하였는가? 자산 불평등 심화 로 미래 경제 전망 이 어두워졌는가?	(4장) 어두운 미래 경제 전망: 자산 불평등의 영향 -분석 내용: 자산의 불평등 수준 및 추이,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상 태에 대한 평가 결정요인 분석 -분석 방법: 기술 분석, 회귀분석	-분석 내용: 자산 규모 및 보유 자산 종류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패널 회귀 분석(고정, 확률효과)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버거운 생활비 부담 :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2장 버거운 생활비 부담 :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제1절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지출 부담이 분배 인식 악화의 요인은 아닌지 점검하고자,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의 추이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 분석하는 내용과 분석 방법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2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연구 가설	연구 내용	분석 방법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가?	소득 및 지출의 분배 추이, 지출 고려 시 분배 구조 변화	-분석 자료: 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2023년, ② 농식품 소비정보 DB 2010년~2023년 -분석 방법: ①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② 기술통계: 경상소득 대비 지출 항목별 비중,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경상소득 분위별 지출 항목 비중, 소득 수준별 식료품 지출 수준 등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 연구 배경: 소비 지출 고려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가구의 소비를 고려하여 실질 소득의 분배를 분석한다. 객관적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득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상소득가설에서 가구는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수준에 근거하여 소비를 평탄화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소득보다 소비가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잘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로 측정된 불평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소비 불평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장에서는 우선 최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시기에 소비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가구의 소득을 분석할 때 핵심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김기태 외, 2019; 이현주, 2019; Krueger & Perri, 2006; Meyer & Sullivan, 2023). 국가데이터처가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집계할 때는 경상소득에서 타 가구 및 비영리단체에게 제공한 사적이전지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 소득을 분석하지만, 가구의 실질적인 가용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추가적으로 차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현주 외(2018, p.162)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 또는 의료비를 차감할 때 가처분 소득 빈곤율이 약 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핵심 지출을 차감할 때 소득분배지표가 변화하는 이유는 소득계층에 따른 핵심 지출 부담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 대비 핵심 지출 비율이 소득계층에 따라 유사하다면, 소득에서 핵심 지출을 차감하더라도 소득분배지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핵심 지출을 부담한다면, 소득에서 핵심 지출을 차감할 때 소득 분배가 악화할 것이다. 또한, 시간에 따라 저소득 층의 핵심 지출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면, 시간에 따라 소득 분배가 악화하지 않더라도 핵심 지출을 차감한 소득 분배가

악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핵심 지출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지만(이현주 외, 2018; 김기태 외, 2019; 이현주, 2019), 이와 같은 핵심 지출과 소득 분배의 관계를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출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식비를 차감하지 않은 소득보다 식비를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이 클 것이다.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을 모두 차감하면 흑자액이 도출되므로, 결국 일정 범위의 지출을 차감한 소득의 분배는 경상소득의 분배와 흑자액의 분배 사이에서 결정된다.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핵심 지출과 비핵심 지출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 장에서는 여러 지출 항목과 소득 분배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 데이터인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같이 소비 및 실질 소득의 분배 구조를 분석한다. 첫째, 시간에 따른 소비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한다. 둘째, 지출을 차감한 소득 불평등의 추이를 분석한다. 셋째,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실태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의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접근이 존재한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가구가 자본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보험 기제를 활용하여 소비를 평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보다 소비 불평등 수준이 낮고,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시기에 소비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존재하고(Krueger & Perri, 2006), 심지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위기 시기에도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지만 소비 불평등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eyer & Sullivan, 2013).

국내 상황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약간 다르다. 2000년대 초반 도시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대일(2007)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소득보다 소비 불평등이 훨씬 작았고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추이가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김대일(2015)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2년의 장기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이후 대체로 꾸준히 악화된 반면 소비 불평등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추이를 구분하여 비교하는 접근은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의 괴리를 설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2010년대 이후 최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시기에 소비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면, 체감 분배의 악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주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비 지출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접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 성격이 강한 지출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므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이현주, 2017). 이와 같은 소득 계층별 차등적인 지출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분배를 평가하기 위해, 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의 분배와 지출을 차감한 “가용 소득”(김기태 외, 2019)의 분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득의 10%를 주거비와 같은 특정 지출에 사용한다면, 해당 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과 차감한 소득의 분배지표가 동일하게 계산되고, 해당 지출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의 30%를, 고소득층은 소득의 10%를 특정 지출에 사용한다면, 해당 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보다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고, 해당 지출이 소득 분배를 악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현주 외(2018, p. 165)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차감한 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였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소득의 10%를, 고소득층은 소득의 30%를 특정 지출에 사용한다면, 해당 지출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보다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고, 해당 지출이 소득 분배를 완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소득 분배를 완화한다. 만약 2010년대 이후 최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시기에 주요 지출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증가하였다면, 체감 분배의 악화를 일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분석 방법

소비 및 소득 분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소득이 함께 조사된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때 소득 분배 추이가 달라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 측정의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공식 소득 분배 지표 작성 데이터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⁵⁾ 가계금융복지

조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표본의 절반인 복지 부문 표본에 대해 소비지출을 조사하였고, 2018년부터 복지 부문 표본과 금융부문 표본을 통합하여 전체 표본에 대해 소비지출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2011~2017년 복지 부문 표본과 2018년 이후 전체 표본을 활용하여 소비 및 소득 분배의 추이를 분석한다.

〈표 2-1〉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출 구성을 정리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의 주요 지출을 연간 총액으로 조사한다. 총지출은 크게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로 구분되고, 비소비지출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사적이전지출, 이자로,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로 구분된다.⁶⁾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출을 분석할 때는 다음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간 지출의 총액을 회고적 방식으로 조사하므로, 지출 측정의 정확도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2016년에 경조비의 분류가 변경되었다. 2015년 이전에는 경조비가 소비지출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경조비가 타 가구로의 이전지출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이 장에서는 일관된 조작적 정의를 위해 2011~2015년 데이터에서 소비지출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된 경조비를 소비지출에서 제외하고 사적이전지출에 합산하였다.

5) 가계금융복지조사는 t 년에 $t-1$ 년의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한다. 이하의 서술에서 연도는 소득·지출 연도를 의미한다.

6)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 동안의 주요 소비지출을 연간 총액으로 회고적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출 데이터인 가계동향조사와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출 정보는 가계동향조사의 응답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소득 및 지출을 가계 부가장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지출 조사의 정확도가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가장 방식으로 조사한 지출 내역을 토대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등 지출 항목별 금액을 재구성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식료품비 및 의식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출 항목을 미리 구성한 조사표를 토대로 항목별 금액을 조사한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실질 소득 분배의 구조를 살펴보려면, 소비뿐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된 소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표 2-1〉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출 구성

구분		내용	비고
비소비 지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국민연금·직역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적이전 지출	타 가구로의 이전지출(경조비 포함),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 2011~2015년: 소비지출의 하위항목으로 조사된 경조비를 사적이전지출로 간주하여 가공하였다. - 2016~2023년: 경조비가 소비지출 항목에서 제외되고 사적이전지출에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이자	대출 이자	
소비 지출	식료품비	식료품 및 외식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주택수선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교육비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 등	
	의료비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외래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서비스 등	
	교통비	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등 (자동차 구입비 제외)	
	통신비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등	
	기타 소비지출비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소비지출	- 2011~2015년: 단일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 2016~2023년: 오락·문화/의류·신발/가정용품·가사서비스/기타 소비지출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주: 연도는 소득·지출 연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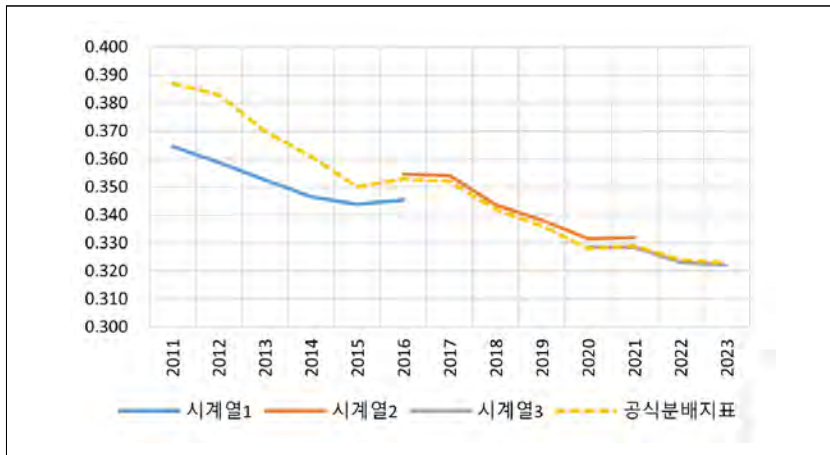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국가데이터처, 각 연도)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셋째, 2016년에 기타 소비지출의 조사 방식이 변경되었다. 2015년 이전에는 기타 소비지출을 단일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오락·문화/의류·신발/가정용품·가사서비스/기타 소비지출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기타 소비지출의

총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타 소비지출의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2016년의 시계열 단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2-2]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전체 부문 표본

(단위: 포인트)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공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 분석: 이 장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기준 지니계수

· 공식: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사적이전지출> 기준 지니계수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 국가통계포털, 소득분배지표(2011~2023년), 2025. 7. 2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DT_1HDA1F05%26vw_cd%3DDMT_ZTITL_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53Bjsessionid%253DBFrlhg7wGNhHdzc2ZUKEjY11AuKFHmBxof8sKOM.esvwas3_S31%26conn_path%3D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ld%3D%26

구체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을 분석할 때는 행정 자료 보완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분석에서 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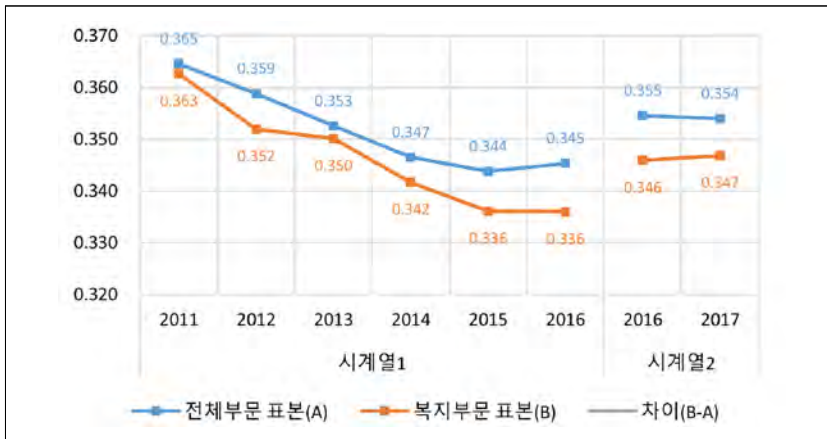
크게 2011~2016년 조사자료 기준 소득(시계열1), 2016~2021년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시계열2), 2020~2023년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 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시계열3)으로 구분된다. 시계열2와 시계열3에는 고용·산재보험급여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작은 차이만 존재하지만, 시계열1과 시계열2/시계열3은 전체 소득의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열이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계열 단절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그림 2-2]에는 이 장의 데이터로 분석한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와 국가 데이터처 공식 소득분배지표 집계 기준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행정 자료 보완 이후 시계열2와 시계열3은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거의 차이가 없었고, 행정 자료 보완 이전 시계열1은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횡단적 차이가 컸지만 시계열 추이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득 및 소비 불평등 추이 분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계열1과 시계열2/시계열3의 단절에는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 장에서는 2011~2017년 복지 부문 표본을, 2018~2023년 전체 부문 표본을 분석하기 때문에, 2011~2017년에 전체 부문 표본이 아닌 복지 부문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3]을 살펴보면, 2011~2017년 전체 부문과 복지 부문 표본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연도별로 0.002~0.009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7년 복지 부문 표본에서 2018년 전체 부문 표본으로 이행하는 시점에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기준 약 0.007 수준의 시계열 단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 분석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표본 사례 수는 <부록 표 2-1>에 제시하였다. 이 장의 모든 분석에서는 가구 내에서 합산한 가구소득·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23년 기준으로 실질화한 후,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값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림 2-3] 복지 부문 표본과 전체 부문 표본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가처분 소득은 <경상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의미한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이 장에서는 다음과같이 소비 및 소득의 분배를 분석한다. 첫째, 소득 분배와 소비 분배의 추이를 확인한다. 소득과 지출을 크게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소비지출로 구분할 때, 불평등의 측정 대상으로 <경상소득>, <경상소득-비소비지출>, <경상소득-소비지출>, <경상소득-비소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소비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여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의 종합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지출의 하위항목별로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선 경상소득으로 측정한 불평등과 경상소득에서 특정 지출을 차감한

소득으로 측정된 불평등을 비교한다. 만약 특정 지출의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해당 지출을 차감할 때 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상소득분위별 특정 지출의 부담을 분석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소비 및 실질 소득 분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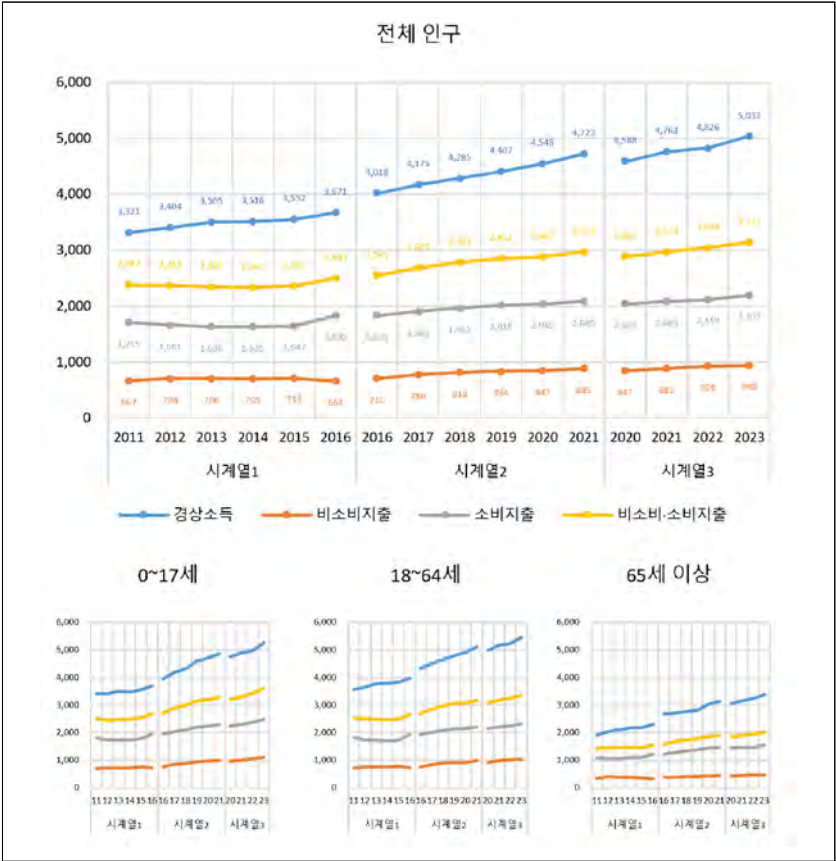
가. 소득 및 지출 불평등 추이

[그림 2-4]에는 우선 소득 및 지출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소득과 지출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2011~2016년에는 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2015~2016년에는 소비지출이 1,647만 원/년에서 1,835만 원/년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2015년 까지 단일 항목으로 조사되었던 기타 소비지출비가 2016년부터 4개의 하위 항목으로 조사되면서 포착률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2015~2016년의 소비지출 증가는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15~2016년의 비소비 지출 감소 역시 실제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경조비 조사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2015~2016년 지출 추이를 해석할 때는 시계열이 일정하게 단절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시간에 따른 추이는 유사하였다.

46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그림 2-4] 소득 및 지출 평균

(단위: 만 원/년, 2023년 실질)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공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표 2-2〉에는 경상소득의 지니계수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보고하였다.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0.344였고,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하면 지니계수가 0.015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경상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즉, 누진적인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 한편, 경상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하면 지니계수가 0.166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경상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전반적인 소비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체 소비지출을 차감하기 전보다 차감한 후의 잔여 소득이 더 불평등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을 모두 차감하면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요컨대, 경상소득의 불평등보다 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불평등이 훨씬 크므로, 이와 같은 효과가 체감 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2〉 2023년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구분	(A) 경상소득	(B)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C) 경상소득 -소비지출	(D) 경상소득 -비소비·소 비지출	(B-A)	(C-A)	(D-A)
전체 인구	0.344	0.329	0.510	0.593	-0.015	0.166	0.249
0~17세	0.318	0.301	0.503	0.626	-0.016	0.185	0.309
18~64세	0.319	0.308	0.478	0.562	-0.011	0.159	0.243
65세 이상	0.398	0.380	0.604	0.664	-0.018	0.206	0.266

주: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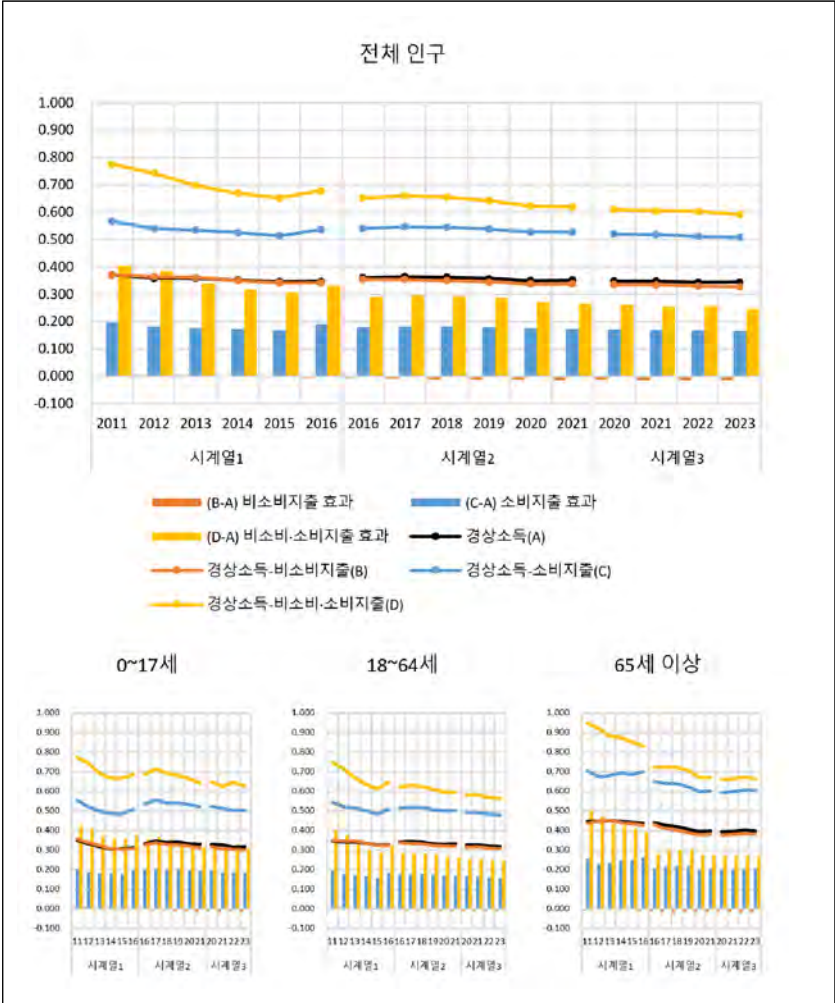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출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그림 2-5]를 살펴보면, 비소비지출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시계열 안정성이 불분명한 2016년을 제외하면 소비지출, 비소비·소비지출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하는 효과는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경상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는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지출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하는 효과가 횡단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 부담이 실제 분배와 체감 분배의 횡단적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시간에 따른 체감 분배의 악화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그림 2-6]에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소비지출의 지니계수를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지출 지니계수는 대체로 2020년까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고, 2020년 이후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시기에 지출 불평등 역시 대체로 감소하였거나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노인의 지출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였다. 즉, 지출 불평등의 추이는 시간에 따른 체감 분배의 악화를 설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지출 차감 소득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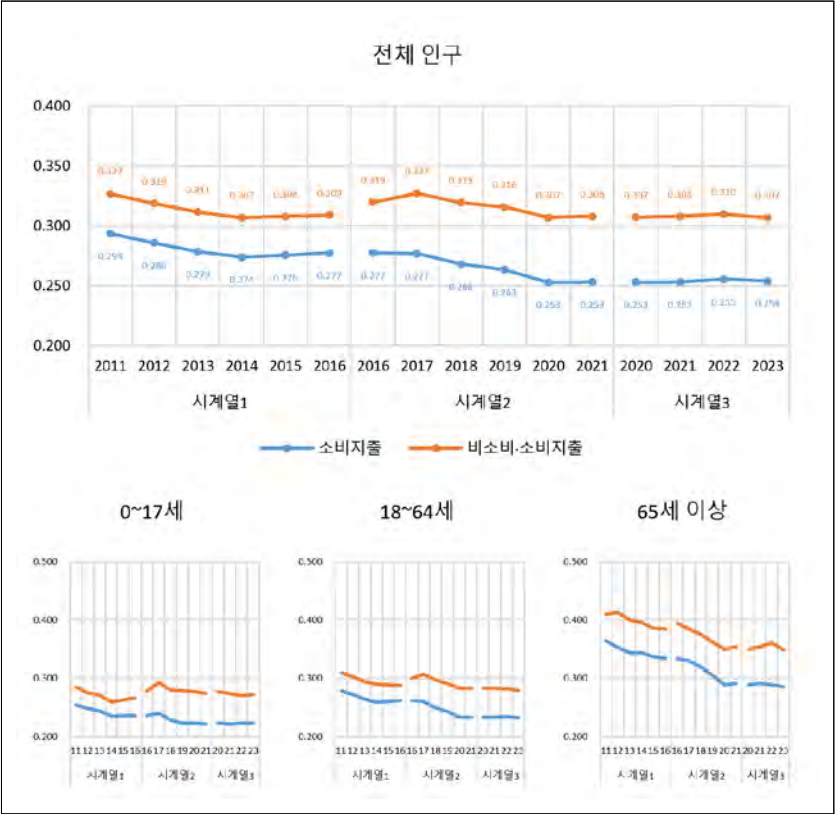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그림 2-6] 지출 지니계수

(단위: 포인트)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공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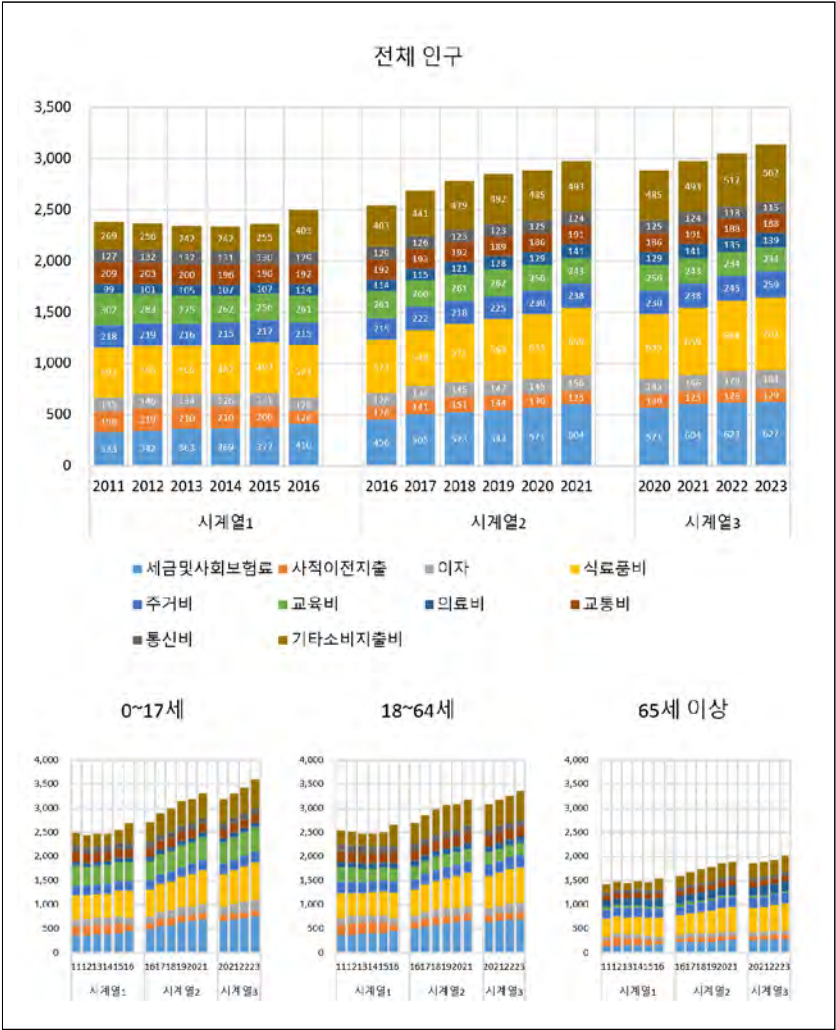
나. 지출 항목별 분석

다음으로는 개별 지출 항목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그림 2-7]에는 개별 지출 항목의 평균을, [그림 2-8]에는 개별 지출 항목의 평균을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로 환산한 값을 보고 하였다. [그림 2-7]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의 절대값이 시간에 따라 증가 하였지만, [그림 2-8]에서 경상소득 평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 지출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거나 정체하였다.

52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그림 2-7] 지출 항목 평균

(단위: 만 원/년, 2023년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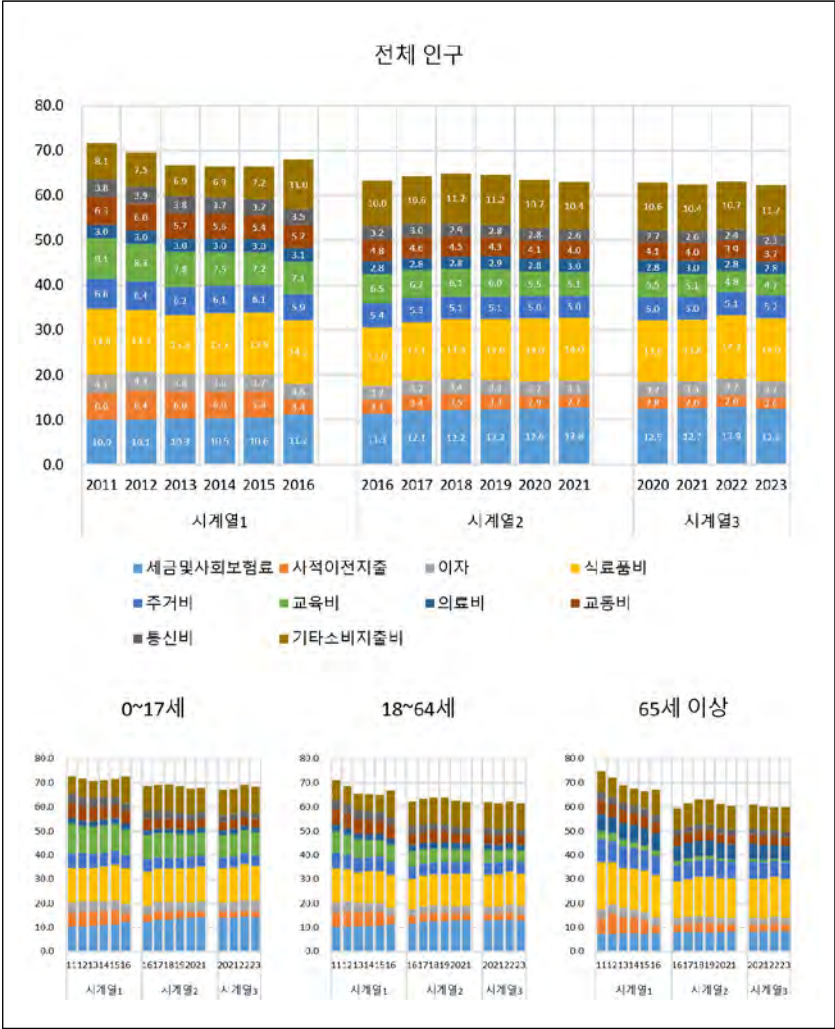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계급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그림 2-8]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

(단위: %)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계급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식료품비였다. 식료품비는 경상소득 평균의 약 14%였고, 이와 같은 상대적인 비율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경상소득과 비교할 때 의료비, 주거비, 이자 역시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통신비, 교통비, 교육비, 사적이전지출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기타 소비지출비는 2016년에 조사방식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변동이 커 뚜렷한 추세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노인의 경상소득 대비 지출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따라 노인의 전반적인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노인에 비해 노인은 의료비와 주거비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대체로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아동과 근로연령층은 교육비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역시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림 2-9]와 [그림 2-10]에는 지출 항목별로 <경상소득에서 해당 지출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를 차감한 값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2023년 전체 인구의 경상소득 지니계수는 0.344였는데, 경상소득에서 식료품비를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는 0.379였으므로, 식료품비가 지니계수를 0.035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료품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대체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료품비 부담이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2020~2023년에는 식료품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강해지지 않았다. 주거비와 의료비 역시 지니계수를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지 않았고, 교육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오히려 시간에 따라 약해졌다.

[그림 2-9]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1

(단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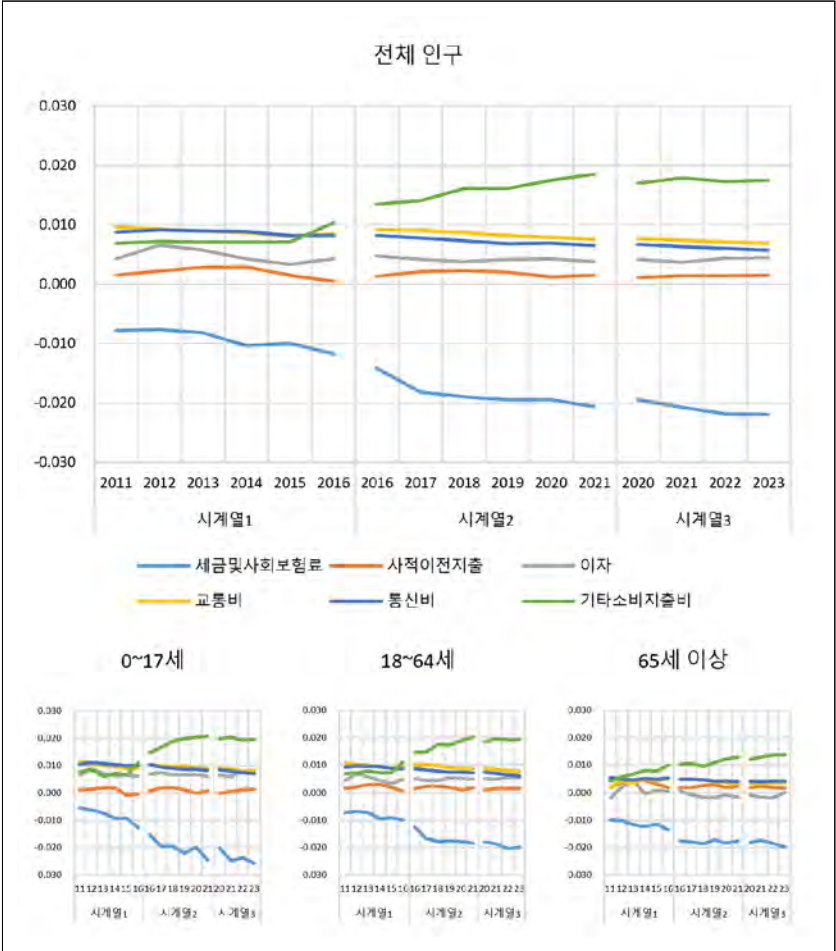


주: <경상소득에서 해당 지출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를 차감한 값이다.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그림 2-10] 지출 항목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2

(단위: 포인트)



주: <경상소득에서 해당 지출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에서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를 차감한 값이다.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교육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악화된 데는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아동 가구원 감소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0~17세 아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비의 지니계수 증가 효과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인구 분석에서 교육비의 지니계수 증가 효과가 감소한 이유는 주로 아동 가구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아동 분석에서도 교육비의 지니계수 증가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지는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집단별 분석 결과를 추가로 살펴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의 지니계수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노인에게 크게 나타났다. 단, 식료품비를 제외하면 지니계수 증가 효과의 시간에 따른 강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그림 2-10]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사적이전지출, 이자,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그림을 살펴보면, 대체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졌고, 기타 소비지출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졌다. 기타 소비지출비는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 소비지출을 포함하므로,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대체로 필수 지출의 성격이 가장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적 관점에서 기타 소비지출로 인한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를 식료품비와 같은 필수 지출로 인한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와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사적이전지출, 이자, 교통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대체로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연령집단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다. 경상소득 분위별 지출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출이 체감 분배를 악화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효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경상소득 분위별로 지출 항목 평균을 경상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2-11]을 살펴보면, 2023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의 비소비·소비지출 평균은 각각 1,556만 원/년, 2,316만 원/년, 2,858만 원/년, 3,481만 원/년, 5,496만 원/년이었고, 이를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각각 95.6%, 74.9%, 66.3%, 59.9%, 53.2%였다. 즉, 1분위의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의 95.6%를 지출하지만 5분위의 고소득층은 경상소득의 53.2%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경상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할 때 5분위의 고소득층은 절반의 흑자액이 남지만 1분위의 저소득층은 흑자액이 거의 없으므로, 지출을 차감한 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효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간에 따라 1분위의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을 포함한 전체 지출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약해진 것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1분위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흑자액이 음의 값이었지만, 2020년대에는 1분위의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액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개별 지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세금 및 사회보험료의 시간에 따른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크고, 이와 같은

관계가 시간에 따라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4~5분위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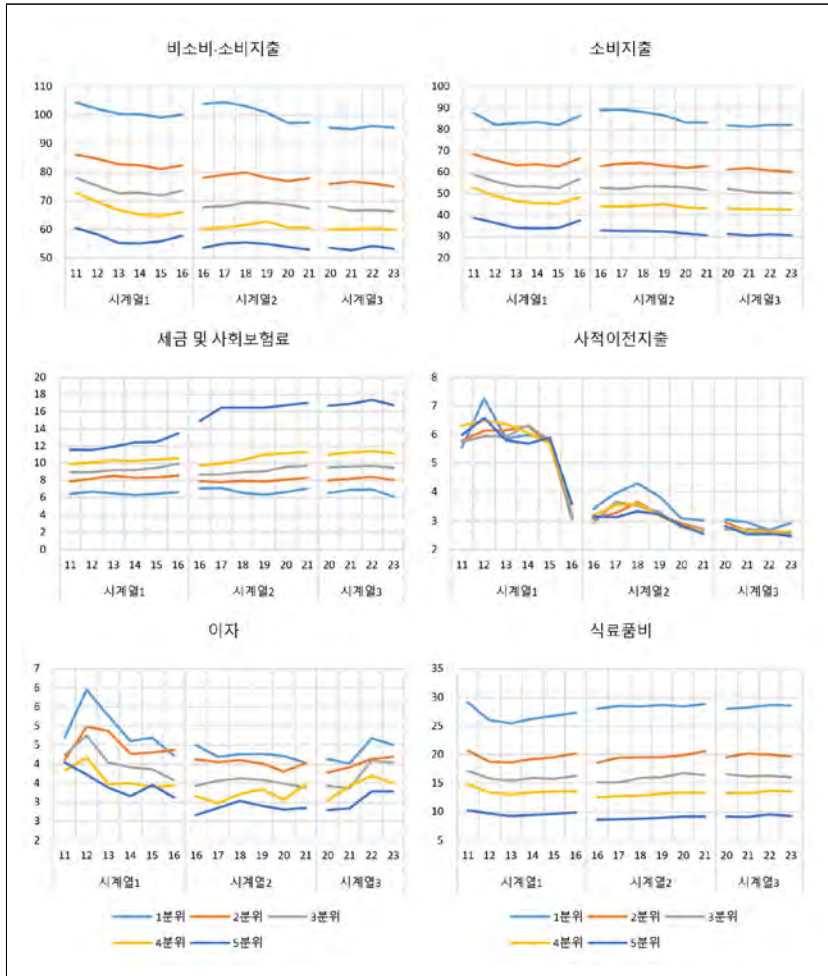
사적이전지출은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분위에 따른 지출 부담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타 가구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2-10]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니계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자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하였지만, 이와 같은 패턴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식료품비였다. 1분위의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의 약 30%를 식료품비에 지출한 반면, 5분위의 고소득층은 경상소득의 약 10%를 식료품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식료품비 부담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패턴이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그림 2-9]에서 살펴본 것처럼 식료품비가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는 모두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체감 분배를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같이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부담이 큰 관계가 시간에 따라 대체로 완만하게 악화하였거나 정체하였다. 한편, 교육비는 횡단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부담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시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교육비 부담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부담이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에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비지출비는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2016년의 급격한 변화를 제외하면, 연도별 변화가 크고 방향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그림 2-11] 경상소득 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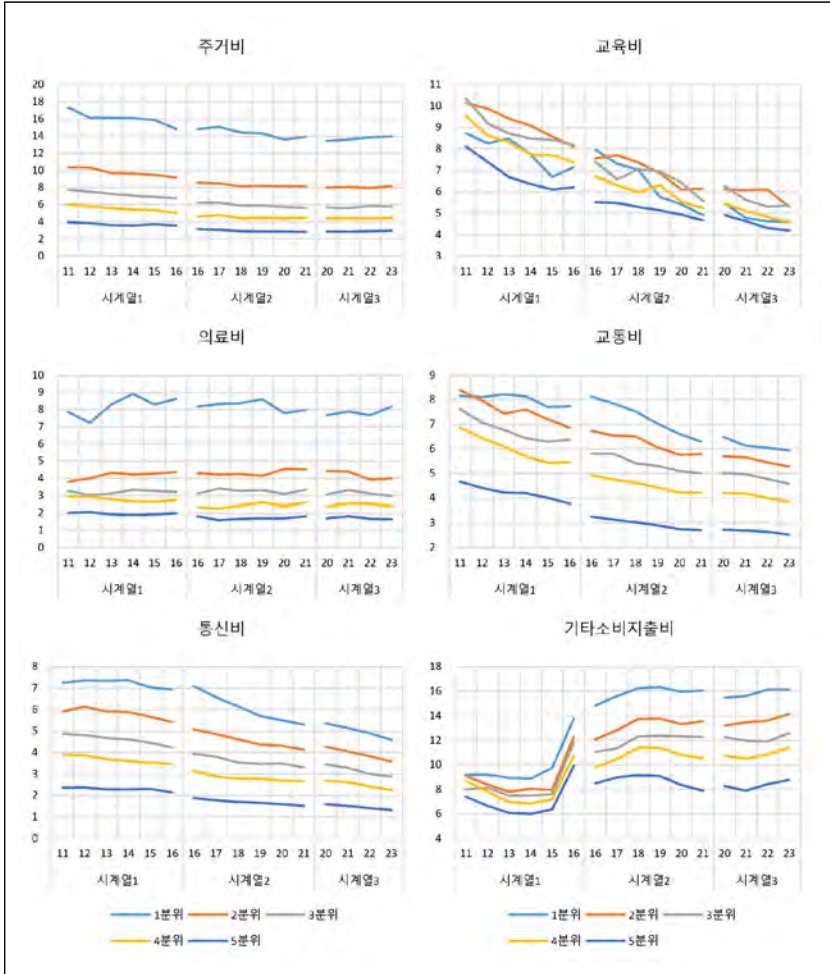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경상소득 분위는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5등분하여 구성하였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그림 2-12] 경상소득분위별 지출 항목 평균의 경상소득 평균 대비 비율2

(단위: %)



주: '시계열1'은 조사자료 기준 소득을, '시계열2'는 행정 자료 보완 기준 소득을, '시계열3'은 행정 자료 고용·산재보험급여 추가 보완 기준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개인단위 분포이다. 2011~2017년은 복지 부문 표본, 2018~2023년은 전체 부문 표본이다. 경상소득 분위는 가구원수 제곱근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5등분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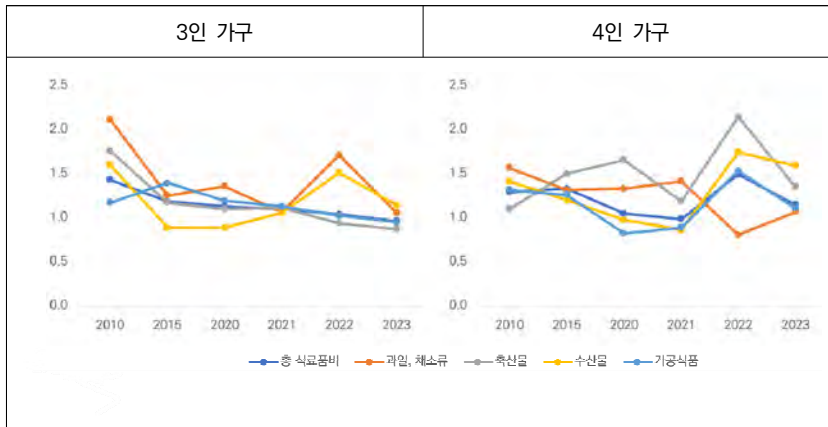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2. 소비의 평준화: 식료품비 지출을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구 단위에서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식료품비로 인한 불평등 양상이 시간에 따라서 완만하게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당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소득 수준이 적은 가구에서 실제로 식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 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식료품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은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서의 소득 대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림 2-13] 고소득 가구 대비 저소득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 수준

(단위: 배)



주 1 월 평균 소득 750만 원 이상 가구의 품목별 지출 대비 200만 원에서 299만 원 가구의 지출 수준이다.

2: 연도별 3인, 4인 가구 중 2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는 10개 미만으로 이는 제외하였다.

출처: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미발간 데이터] 농촌진흥청에 별도 신청(공문)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농식품 소비정보 데이터를 보충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그림 2-13]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식비에 덜 소비하던 2010년과 달리, 최근으로 오면서 가구 소득에 따른 식료품비의 절대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서 덜 소비하던 채소와 수산물, 육류와 같은 신선 식품의 소비가 늘면서 소비 절대액에서의 차이도 줄었다. 품목 내부에서의 차이도 거의 없다. 그래서 소득 계층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해서도 소비 절대액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상당한 평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총 식료품비는 물론 품목별로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와 소득 200만 원에서 299만 원 가구 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품목별로도 그 격차가 거의 없다. 4인 가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격차가 다소 커지긴 하였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완화되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식비도 덜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필요한 수준에서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과도하게 식비 소비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다만, 그 이면에, 식비 지출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인 소비 수준의 향상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것처럼, 소비를 제한한 저소득의 불평등은 소득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저소득층에서 소비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식료품비 부담이 소득 하위 분위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식료품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적되는 상황에서(신민정, 정남구, 2025.09.16), 식료품 소비의 평준화는 저소득층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64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표 2-3〉 3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단위: 만 원)

3인 가구		총 식료품비	과일,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기타
200~299만 원	2010	332.9	29.5	53.0	22.7	159.6	68.0
	2015	398.3	38.2	72.7	31.6	160.5	95.4
	2020	536.0	34.7	99.7	45.3	244.5	111.8
	2021	554.8	45.4	108.2	35.8	270.0	95.4
	2022	610.0	24.9	109.1	24.3	371.1	80.7
	2023	643.9	40.3	112.0	30.4	380.5	80.7
300~399만 원	2010	415.9	42.5	71.2	24.0	187.7	90.5
	2015	381.0	34.0	77.3	24.0	158.7	87.0
	2020	508.5	42.2	89.0	31.8	249.7	95.8
	2021	583.1	40.2	120.9	45.0	295.3	81.6
	2022	565.7	34.1	94.9	30.0	343.5	63.3
	2023	568.1	33.9	77.8	21.6	368.5	66.3
400~499만 원	2010	474.9	51.1	90.7	41.7	190.5	100.8
	2015	344.5	30.9	62.6	19.7	152.2	79.2
	2020	514.9	43.8	107.5	33.3	241.2	89.1
	2021	568.8	42.8	95.4	29.2	315.5	85.9
	2022	611.0	33.2	91.6	29.0	402.1	55.2
	2023	634.1	40.3	96.5	27.0	401.9	68.4
500~599만 원	2010	443.5	44.6	70.1	35.0	171.9	121.9
	2015	394.0	36.8	66.7	22.9	177.1	90.5
	2020	458.8	38.5	73.5	16.7	247.4	82.8
	2021	589.2	40.3	100.7	37.5	314.6	96.0
	2022	616.4	37.9	95.7	32.9	381.6	68.3
	2023	623.5	40.8	99.7	31.3	365.6	86.1
600~699만 원	2010	448.6	25.7	54.0	38.1	262.4	68.4
	2015	446.8	42.5	68.2	28.5	201.2	106.4
	2020	545.0	44.1	106.6	40.5	282.6	71.2
	2021	585.3	47.4	110.9	48.4	275.2	103.5
	2022	567.8	33.6	89.3	34.6	356.8	53.5
	2023	616.5	41.2	88.1	25.4	393.5	68.3
700만 원 이상	2010	478.2	62.6	93.4	36.5	187.8	98.0
	2015	473.4	48.1	85.6	28.1	224.4	87.2
	2020	606.4	47.2	110.2	40.4	292.8	115.9
	2021	610.2	48.7	120.7	37.9	305.4	97.4
	2022	636.7	42.7	102.8	36.8	381.9	72.5
	2023	621.9	42.8	98.4	35.0	363.7	82.0

주 : 연도별 3인, 4인 가구 중 2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는 10개 미만으로 이는 제외하였다.

출처: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촌진흥청에 별도 신청(공문)을 통해 제
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4〉 4인 가구 소득 수준별 식료품비 품목별 지출

(단위: 만 원)

4인 가구		총 식료품비	과일, 채소류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기타
200~299만 원	2010	394.8	37.6	66.1	26.5	184.4	80.1
	2015	395.8	35.8	66.2	24.0	200.0	69.8
	2020	644.3	37.2	88.3	39.2	409.4	70.2
	2021	698.3	33.4	115.3	47.4	402.5	99.8
	2022	493.4	53.1	57.8	23.0	287.0	72.5
	2023	610.6	42.8	88.4	20.8	375.5	83.1
300~399만 원	2010	450.9	41.0	74.7	28.7	213.7	92.8
	2015	444.2	34.1	77.9	27.8	222.5	81.9
	2020	545.8	32.5	87.0	22.1	327.9	76.3
	2021	702.5	38.2	123.0	23.7	431.1	86.5
	2022	669.3	28.4	100.2	22.5	469.9	48.3
	2023	741.3	40.9	102.2	31.0	477.7	89.5
400~499만 원	2010	455.4	46.3	76.3	28.6	210.8	93.4
	2015	443.3	34.1	79.7	20.7	234.6	74.2
	2020	598.8	36.2	97.7	24.9	352.1	88.0
	2021	664.9	38.7	119.2	35.9	380.2	90.9
	2022	739.5	35.4	115.5	32.6	487.4	68.6
	2023	771.1	33.3	117.1	27.0	509.7	84.0
500~599만 원	2010	439.2	42.8	89.0	27.4	198.9	81.2
	2015	443.0	40.1	79.2	27.3	216.4	80.0
	2020	634.1	43.2	113.0	29.3	357.9	90.7
	2021	672.6	52.4	118.3	30.4	368.0	103.5
	2022	708.0	38.7	109.4	27.0	477.7	55.1
	2023	756.4	46.8	111.2	28.4	486.0	84.0
600~699만 원	2010	562.7	73.0	88.2	46.4	226.8	128.4
	2015	506.3	40.3	97.1	32.3	248.0	88.7
	2020	619.9	42.8	113.6	29.5	348.6	85.4
	2021	600.7	34.9	117.7	31.6	329.3	87.3
	2022	724.9	36.1	108.6	31.2	481.0	68.0
	2023	692.5	32.9	110.0	27.4	455.5	66.7
700만 원 이상	2010	512.7	59.2	73.2	37.6	243.7	99.1
	2015	528.1	47.2	99.5	28.9	253.3	99.2
	2020	677.6	49.7	146.6	38.3	338.6	104.4
	2021	691.3	47.4	137.6	41.0	360.3	105.0
	2022	738.9	43.1	124.1	40.2	441.1	90.4
	2023	704.6	45.8	119.7	33.2	418.2	87.7

주: 연도별 3인, 4인 가구 중 200만 원 미만 소득인 경우는 10개 미만으로 이는 제외하였다.

출처: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촌진흥청에 별도 신청(공문)을 통해 제
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를 고려하여 실질 소득의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항상소득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생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 소득의 불평등보다 소비지출 또는 총지출의 불평등 수준이 훨씬 낮았다. 또한,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2010년대 이후 시기에 지출 불평등 역시 대체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소득보다 가구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잘 대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출을 활용하여 불평등을 측정하더라도, 대체로 2010년대 이후 불평등이 감소하였거나, 적어도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상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면 불평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경상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의 95.6%를 지출하여 흑자액이 경상소득의 4.4%에 불과하였지만, 경상소득 5분위의 고소득층은 경상소득의 53.2%를 지출하여 흑자액이 경상소득의 46.8%에 이르렀다. 특히, 필수 지출의 성격이 강한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과 같은 소비지출이 대체로 소득 불평등을 악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경상소득에서 해당 지출을 차감할 때 불평등이 감소하는 항목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뿐이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소비자 정보 데이터를 통해 보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식료품 소비에서의 평준화 양상이 보인다.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각 품목을 유사한 수준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덜 소비했던 육류의 소비가 해당 집단에서 늘어나면서, 과일과 채소, 육류

및 수산물 등의 소비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 저소득을 이유로 과도하게 식비 지출을 줄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처럼 가구 소득에 따른 소비 행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 국면에서(신민정, 정남구, 2025.09.16) 저소득층이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저소득층이 지게 되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득으로 측정된 불평등 수준보다 체감 불평등 수준이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체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공적 이전을 확대하여 경상소득의 분배를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가계의 핵심 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하지만 이와 같이 지출이 체감 분배를 악화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강해지지는 않았다. 횡단적으로 지출을 차감하면 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2010년대 이후 대체로 시간에 따라 완만하게 약해졌다. 즉, 저소득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 부담이 실제 분배와 체감 분배의 괴리를 일정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체감 분배의 시간에 따른 악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만약 체감 분배가 시간에 따라 악화하였다면, 그 원인은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식료품비는 시간에 따른 체감 분배 정체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지출 항목과 달리, 대체로 식료품비는 2010년대에 소득 수준이 낮은 1~2분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능이 강한 다양한 공공부조 방식 소득 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여러 지출 항목 중에서 기타 소비지출이 지니계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강해졌다. 기타 소비지출은 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숙박, 담배, 주류, 이미용 서비스, 장신구, 소멸성 보험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타 지출 항목에 비해 필수 지출의 성격이 훨씬 약하다. 이는 체감 분배가 시간에 따라 악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지출이 아니라 개인적 선호 및 취향을 반영하는 비필수적 성격의 지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장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부담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하였지만, 저소득층의 기타 소비지출 부담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단,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기타 소비지출에 포함된 지출 항목의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필수 지출과 체감 분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제3장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 : 상대적 임금 격차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3장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 : 상대적 임금 격차

제1절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임금 상승의 상대적 정체가 분배 인식 악화의 요인은 아닌지 점검하고자, 집단별 임금 격차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장에서 분석하는 내용과 분석 방법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3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연구 가설	연구 내용	분석 방법
특정 집단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었는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였는가?	임금의 분배 양상 및 아파트 가격 대비 실질 구매력의 집단별 변화	-분석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1993년 ~ 2023년 -분석 방법: ① 지니계수 등: 시간당 임금 지니계수 및 10분 위 배율, ② 기술통계: 집단별 임금 상승률, 출생 코호트별 실질임금 비교 등 ③ 회귀분석: 특성별 임금 결정 영향력의 변화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 연구 배경: 소득과 임금의 개념적 차이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그 중 이 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처분 소득이 아닌 경제적 자원, 특히 임금,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개인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해졌고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임금은 소득의 한 유형이지만 소득 불평등을 다룰 때의 일반적인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우선 소득 불평등의 측정이 가구 단위의 소득을 이용하여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소득 계층을 구분할 때에도 그때의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임금은 이와 달리 개인이 얻은 소득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어느 정도이고 그 가구가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하는지와 임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물론 어떤 개인이 얻는 임금이 높을수록 그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높아지겠지만 가구의 소득이 높다고(혹은 낮다고) 해서 가구원의 소득이 반드시 높다는(낮다는) 보장은 없다.

가구는 임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임금과 가구 소득이 구분되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 가구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에는 임금소득(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 그리고 이 소득들이 결정되는 원리는 임금이 결정되는 원리와 매우 다르다. 요컨대 임금은 소득의 일부이면서 소득 일반과 구분되는 개념적, 현실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임금 불평등은 다른 방향을 움직일 수 있으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임금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 가구의 주요한 소득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활동 상태 측면에서 보면 임금근로는 여전히 지배적인 근로형태이다.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49.1%가, 그리고 전체 취업자의 약 77.4%가 임금 근로자이다.⁷⁾ 2024년 기준 가구의 총소득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은

7) 국가데이터처. (2025.11.12.), 성별경제활동인구 총괄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ZTITLE&itm_id=&lang_mode=ko

총 소득의 64.5%를 차지한다.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임금 불평등의 실제 변화나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2. 이론적 배경: 분배 인식과 임금 격차

이 장의 목적은 분배 혹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체가 임금 분배 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한다. 첫째, 근로자 개인의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고, 둘째, 특정한 집단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 수준의 변화가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비해 지체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임금 분배의 실태를 살펴보면, 이 장에서는 집단 간 상대적 지위의 변화에 주목한다. 임금의 분배가 악화하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집단의 상대적 지위가 악화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분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속된 집단이 일종의 준거집단으로 작동하여, 사회에 대한 시선이 분배의 악화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임금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두한 공정성의

국가데이터처. (2025.11.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ZTITLE&itm_id=&lang_mode=ko

8) 국가데이터처 (2024.12.9.)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ZTITLE&itm_id=&lang_mode=ko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분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개인이 그리는 이상향과 비교하여 현재의 분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Whyte, 2011, p.280). 그래서 실제 분배 수준뿐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불평등이 용인되는 정도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Janmaat, 2013). 한국인들은 소득이나 자산의 격차에 허용적이면서도 실제보다 불평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황선재, 2023, Hwang, 2024; Bavetta, Li Donni, & Marino, 2019). 그리고 분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공정성” 논란 격화와 일정 부분 관련 있다고 지적된다(황선재, 2023, p.4).

이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 성취에 따른 경제적 성과(outcome)의 배분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이룬 성취는 “공정”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 차이에는 허용적이다(김주현, 2022; Duru-Bellat & Tenret, 2012; Mijs, 2021). 개인이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받을 만한 것(deserved)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차등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능력주의에 가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불평등에 허용적인 경향이 실증적으로도 나타난다(Duru-Bellat & Tenret, 2012).

이처럼 임금은 불평등 인식과 관련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항목인데, 특히 이 장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상대적 임금 격차에 주목한다. 이는 행복 연구에서 이스털린의 역설을 설명하는 데 널리 인정되는 상대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근거한다. 이스털린 역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감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음을 지칭한 것으로, 상대 소득 가설은 이 현상의 원인을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에서 찾는다. 절대적인 소득의 수준은 극빈층에서만 행복을 견인하는데 유의미할 뿐(Layard, 2005), 개인의 만족감은 의미 있는 타인과 자신의 상대적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에 좌우된다는 것이다(Clark & Oswald, 1996; Boyce, Brown & Moore, 2010; Clark & Senik, 2010; Headey, Muffels, & Wagner, 2010; Muffels, Dingemans & Skugor, 2012; Alderson, & Katz-Gerro, 2016; Hauret & Williams, 2019).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 준거집단에서의 소득 수준이, 개인의 만족감에 실증적으로도 더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Alderson, & Katz-Gerro, 2016), 준거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Boyce, Brown & Moore, 2010).

달리 말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사람들 내에서 처지가 나빠져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러셀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지나친 경쟁과 질투를 꼽았다(버트런드 러셀, 2005). 경쟁과 질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출발한다. 남들보다 더 나아지지 못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시기해서 행복이 멀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러셀이 지적하듯,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우리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운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과 가깝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김영미, 한준, 2007; Clark & Oswald, 1996; Boyce, Brown & Moore, 2010; Clark & Senik, 2010; Alderson, & Katz-Gerro, 2016; Hauret & Williams, 2019). 학술적 용어로는 준거집단으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할 때 규범적 표준으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Hyman, 1942; Shibutani, 1955),

주관적 불평등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준거집단의 영향을 살펴본 경우는 드물지만,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Phillips 외(2025)에서 개인의 분배 인식의 형성에는 객관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 이외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지적 역량, 경험 등의 총체임을 지적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실제 분배 수준과는 다른 분배 인식이 형성된다. 이때, Jachimowicz 외(2023)는 인지된 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도 준거로 삼는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Jachimowicz et al., 2023). 사회 분화로 사람들이 불평등에 관심이 덜하고, 불평등과 관련하여 얻는 정보는 개인이 일상적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Jachimowicz et al, 2023, p. 1541). 이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고, 다양할수록 사회의 불평등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Phillips 외, 2025).

종합하면, 개인이 준거집단 내에서의 위치 변화가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준거집단 내에서 처지가 열등해졌다면, 혹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사회의 분배 수준이 악화했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악화된 집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집단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장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련하여, 임금 수준이나 분배 상태는 개선되었더라도 그 실질적 가치가 시점 간에, 혹은 집단 간에 달라졌다면 현재의 분배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자산(대표적인 예로 주택) 가격 상승에 비해 임금 수준의 상승이 지체되었다면 자산을 보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분배 상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 주로 사용할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1993년~2023년 원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자료에는 5인 이상(1998년 이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인적(성별, 연령, 학력 등) 특성과 고용상태 관련 특성(경력 등) 사업장의 특성(사업장 규모, 산업 및 직종 등)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정액급여, 초과급여 등)와 근로 시간(소정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2절과 3절의 분석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별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계열은 2010부터 제공되고 있고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9개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별도로 다루는 4절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자료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임금부문 자료라고 한다면 4절에서 사용된 자료는 고용형태부문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⁹⁾ 이하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모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지칭한다.

이하에서는 임금을 대표하는 변수로 시간당 임금을 주로 사용한다. 시간당 임금은 월급여총액(=정액급여 + 초과급여)에 특별급여(전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를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더한 값을 근로시간(=소정실근로시간수 + 초과근로시간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사업장의 특성별로 시간당 임금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단년도의 임금 분포를 볼 때와 달리 장기간에

9) 물론 두 자료 모두 근로자의 시간 당 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결친 임금의 변화를 볼 때에는 명목 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명목 임금을 실질 임금으로 전환하였다.

임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이 장에서 다루는 또 다른 주제이다. 실질적 구매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장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주택 가격 대비 임금 수준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주택가격은 아파트 가격을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상의 지역별 단위 면적(㎡)당 가격의 중위값을 이용할 것이다. 아파트는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비교적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고, 중위값은 평균값에 비해 고가 아파트 가격과 같이 예외적 수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을 이용하였다. 지니계수는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균분 상태로부터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10분위 배율은 시간당 임금에 따라 임금 근로자를 10개 집단(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상위 10분위의 평균임금이 최하위 1분위의 임금에 비해 몇 배 높은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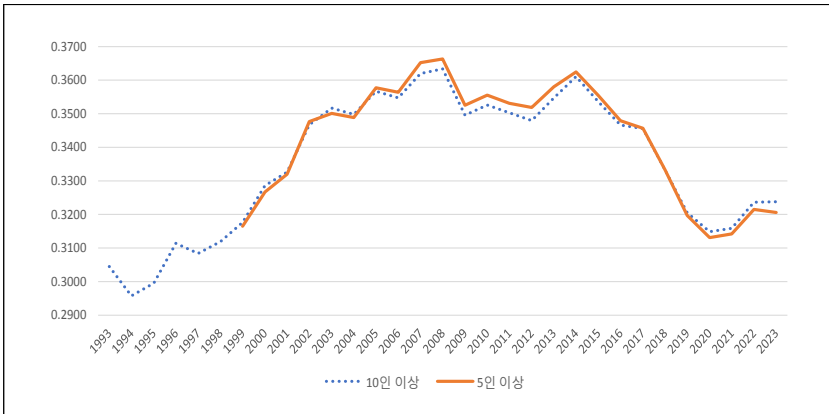
집단 간 임금 수준의 차이나 임금 증가율의 차이를 비교할 때 집단 구분은 여섯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성별, 연령대, 학력, 근무 경력, 종사 산업, 종사 사업장의 규모 등 기준이 그것이다. 4절에는 고용형태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들의 임금을 비교하는 한편, 이 기준들을 모두 교차시켜 다양한 세부 집단들 사이의 임금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의 임금 수준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아진 집단과 낮아진 집단을 비교할 수 있다.

제3절 분석 결과

1. 임금 분배의 추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분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자.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임금 분배 변화는 [그림 3-2]와 같다. 임금의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상승, 2008~2015년간 등락의 반복, 2014년 이후 하락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1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3-2]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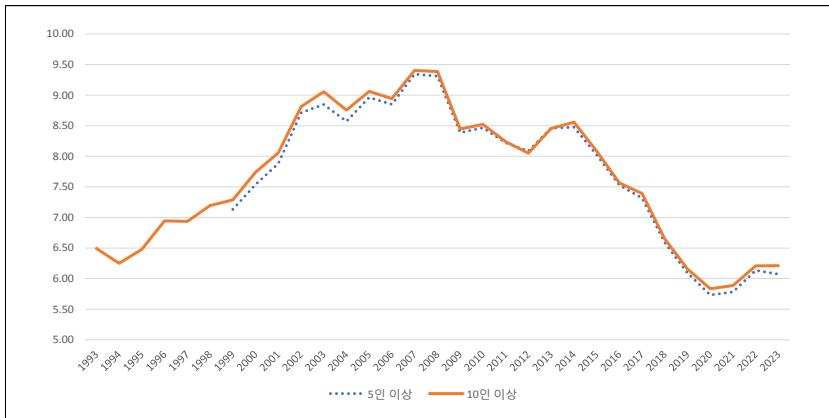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최근 가장 낮은 임금 불평등도를 보인 것은 2020년(0.315)인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불평등 수준이다. 따라서 최근의 임금 불평등 수준에 대해 그것이 심화된 불평등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분위 배율로 임금 불평등을 파악하더라도 그 변화 추이는 마찬

가지이다([그림 3-3]).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1994년 6.25배로 저점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07년 9.34배를 보인 이후로는 계속 하락 추이를 보인다. 2020년에는 최저 수준인 5.73배를 기록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이러한 변화 추이는 별로 다르지 않다. 요컨대 지니계수로 보나 10분위 배율로 보나 임금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근 들어 빠른 완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3] 시간당 임금의 10분위 배율 변화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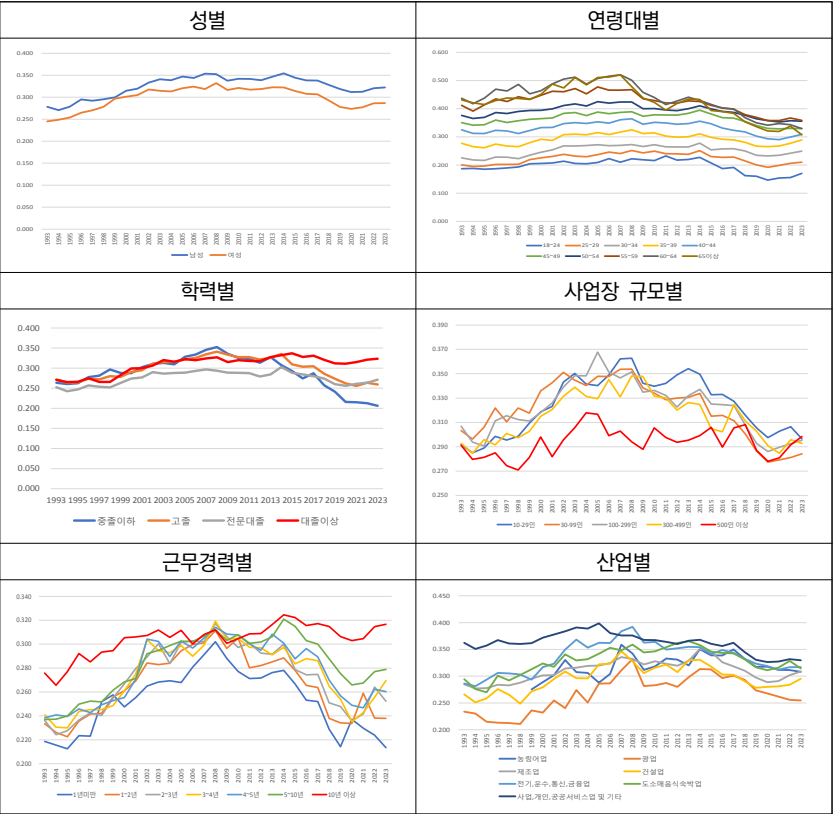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3-4]는 6개 기준에 따라 구분한 집단별로 각 집단 내부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개인이 전체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신이 속했거나 자신이 준거로 삼는 특정 집단의 임금 분포를 주목하여 볼 경우 해당 집단의 격차가 임금 불평등, 나아가 소득 불평등 전체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세부집단 임금 불평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림 3-4]의 전체적인 곡선의 모양은 [그림 3-2]나 [그림 3-3]의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대 후반 이전은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이 공통된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 집단별로 보면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림 3-4] 집단 구분과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우선,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 근로자 임금의 불평등은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두 집단의 불평등 수준은 격차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 즉 여성의 불평등이 남성에 비해 낮고 다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비교하면 임금 불평등은 고령층에서 높고 청년층에서 낮다. 2014년 이후 모든 연령층의 불평등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8~24세 연령대에서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증가 속도가 빨랐던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연령층에서 임금 불평등이 더욱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어서 학력별 임금 불평등에서는 대졸 이상 학력의 임금 불평등이 다른 학력군과 다소 상이하다. 2010년대 후반으로 오더라도 불평등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불평등 변화 추이를 보면 다른 집단과 달리 500인 이상 사업장의 불평등 추이 변화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불평등의 수준도 낮지만 2014년 이후 불평등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근로경력별 임금 불평등에서 눈에 띄는 것은 10년 이상 경력의 근로자 집단이다. 이들은 불평등의 수준도 높고 최근 10년 동안의 불평등 감소폭도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불평등의 변화를 보면 산업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2000년대 후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 분야보다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수준이 뒤바뀌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2020년 이후 불평등 수준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본 임금 불평등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과 유사하게 역(逆) U자 모양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집단의 경우 2010대에 진행된 불평등의 감소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여부도 집단마다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개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불평등이 최근 들어 증가했다면 전반적인 불평등도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내부의 불평등과 함께 집단 간의 격차도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임금은 [그림 3-4]에서 제시된 여러 집단 구분이 동시에 적용된 결과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집단 간 임금 상승률 비교

가. 집단 구분과 임금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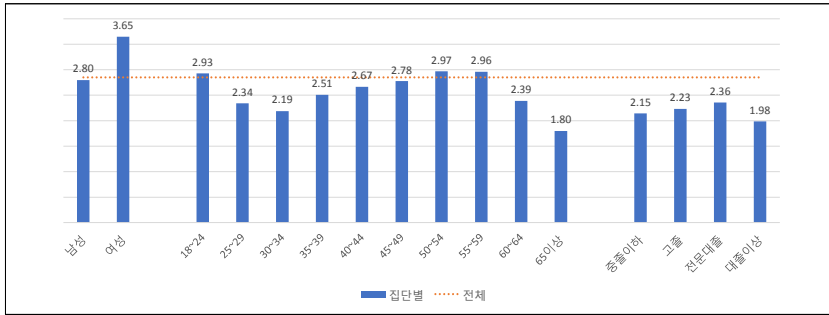
집단 내부의 격차와 더불어 집단 간 격차는 임금 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 시점의 임금 수준도 의미가 있지만 일정한 시기에 걸쳐 보여진 임금 증가율의 집단 간 차이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집단 구분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적용했을 때 30년(1993년~2023년) 간의 임금 증가율이 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이하에서 임금 상승률은 2020년의 소비자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실질 임금으로 전환한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이다.

[그림 3-5]는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1993~2023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연평균 2.85%씩 상승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집단에서는 18~24세와 50대의 임금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18~24세 근로자의 비중과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0대의 임금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청년층의 임금증가율이 낮고 장년층의 증가율이 높아 두 연령대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3-6]은 사업장 규모, 근로경력, 종사산업 별로 임금의

평균증가율을 보여준다.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경력 측면에서는 근로 경력이 짧은 계층의 증가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임금 상승률이 평균에 비해 높았다.

[그림 3-5]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 임금 상승률 - 성, 연령대,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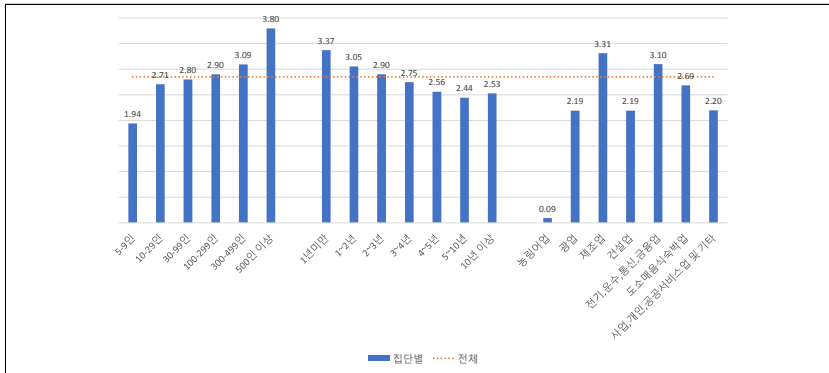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3-6] 1993~2023년간 집단별 실질임금 상승률 - 사업장 규모, 경력, 산업별

(단위: %)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나. 세부 집단 간 임금 상승률 비교

집단 사이에 임금 상승률이 다를 경우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준거집단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림 3-5]와 [그림 3-6]에서는 6가지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였다. 그렇다면 6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했을 때, 세분화된 집단별 임금 상승률은 어떻게 다를까? <표 3-1>은 1993년~2023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20개 집단을 보여준다.¹⁰⁾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55~59세 구간의 고졸 여성으로 100~299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이다. 이들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0.64%이었다. 두 번째는 40~44세의 대졸 여성으로, 1위와 마찬가지로 100~299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표 3-1>의 1위부터 20위까지 집단 가운데 19의 집단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이고 사업장의 규모도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산업은 대부분 기타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은 한 집단만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성별과 연령대는 혼재되어 있다. [그림 3-5]에서는 성별, 연령대별 임금 상승률 격차가 확인하지만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성의 임금 상승이 남성에 비해 빨랐다고 보기 어렵다.

10) 세분화된 집단 간 비교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1,000명 미만인 집단은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표 3-1〉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20개 집단

(단위: %)

순위	집단 특성	연평균 임금 상승률	비중 (‘23, %)
1	여성 55~59 고졸 100~299인 10년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	0.64	0.06
2	여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0.91	0.10
3	남성 60~6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0.92	0.10
4	여성 50~5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04	0.09
5	여성 30~34 대졸이상 100~299인 5~10년 기타 서비스업	1.06	0.12
6	남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제조업	1.12	0.13
7	남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13	0.16
8	남성 30~34 대졸이상 100~299인 5~10년 기타 서비스업	1.14	0.10
9	남성 45~4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제조업	1.15	0.12
10	남성 35~39 대졸이상 100~299인 5~10년 기타 서비스업	1.16	0.09
11	남성 35~3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20	0.09
12	여성 45~4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23	0.12
13	여성 30~34 대졸이상 500인이상 1~2년 기타 서비스업	1.26	0.05
14	남성 55~5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38	0.18
15	남성 55~5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51	0.09
16	여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51	0.16
17	남성 50~5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58	0.13
18	남성 50~54 대졸이상 300~4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64	0.06
19	여성 30~34 대졸이상 500인이상 5~10년 기타 서비스업	1.70	0.19
20	남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71	0.11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2〉는 〈표 3-1〉과 반대로 30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개 집단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1위는 40~44세의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력 10년 이상, 그리고 종사 산업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이 집단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3.53%이다. 고학력, 대기업, 경력직, 고임금 서비

스업(예, 금융업) 종사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20위를 보면 대부분 5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 경력도 10년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속한 집단이 많고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종사 집단이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1993~2023년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20개 집단

(단위: %)

순위	집단 특성	연평균 임금 상승률	비중 (‘23, %)
1	여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53	0.08
2	남성 25~29 대졸이상 500인이상 1~2년 제조업	3.50	0.10
3	남성 25~29 대졸이상 500인이상 1년미만 제조업	3.42	0.06
4	남성 30~34 대졸이상 500인이상 5~10년 제조업	3.23	0.16
5	남성 35~39 전문대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3.12	0.15
6	남성 55~5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3.07	0.26
7	남성 50~54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3.07	0.26
8	남성 50~54 전문대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3.06	0.06
9	남성 35~3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3.02	0.10
10	남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99	0.33
11	남성 40~44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98	0.21
12	남성 35~3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97	0.21
13	남성 30~34 전문대졸 500인이상 5~10년 제조업	2.97	0.07
14	여성 18~24 대졸이상 500인이상 1년미만 기타 서비스업	2.94	0.09
15	남성 45~4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87	0.22
16	남성 35~39 대졸이상 500인이상 5~10년 제조업	2.85	0.08
17	여성 35~3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78	0.10
18	남성 40~44 전문대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78	0.19
19	남성 55~59 고졸 100~299인 10년이상 제조업	2.65	0.14
20	남성 45~4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2.63	0.21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다. 임금 수준의 상대적 지위 변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했다고 느낄 때에는 임금 상승률이 낮아서인 이유도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상대적 임금 지위가 낮아졌을 때에도 그러한 인식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임금의 상대적 지위를 평균임금과의 격차로 정의하고 199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임금의 상대적 지위 변화가 큰 집단을 확인하였다.

〈표 3-3〉은 임금의 상대적 지위 하락 폭이 가장 큰 20개 집단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남성이면서 60~64세이고 대졸 이상, 5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10년 이상 근속 경력의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다. 이 집단은 1993년에는 평균임금의 약 3.8배를 받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약 2.1배를 받고 있다. 여전히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그 정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1위부터 20위까지의 집단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대졸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다.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경력을 가진 근로자이고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집단에서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많이 하락했다는 점은 전체적인 임금 불평등의 추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한 집단이 있다면 반대로 상승한 집단도 있을 것이다. 〈표 3-4〉는 상대적 지위 상승 폭이 가장 큰 15개 집단을 보여준다. 40~44세의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여성이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그리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 집단은 1993년에는 평균의 약 1.6배를 받고 있었으나 2023년에는 평균의 약 두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35.1%포인트이다. 〈표 3-4〉에 제시된 집단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5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이

제조업 종사자라는 점이다. 1위는 여성이지만 대부분 남성 근로자들이다. 전체적으로 임금 지위의 하락 폭에 비해 상승 폭의 정도는 크지 않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표 3-3〉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하락 폭이 큰 20개 집단

(단위: %p, %)

순위	집단 특성	상대적 지위의 변화 (%p)	1993년 전체 평균 대비 (%)	2023년 전체 평균 대비 (%)	비중 (‘23, %)
1	남성 60~6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63.4	377.5	214.1	0.08
2	여성 50~5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33.1	321.9	188.7	0.10
3	남성 55~5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19.6	341.0	221.4	0.16
4	여성 45~4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12.0	295.1	183.0	0.06
5	남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102.8	259.1	156.3	0.15
6	남성 45~4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제조업	-100.2	254.3	154.0	0.06
7	남성 55~5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95.2	292.5	197.3	0.26
8	남성 55~5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4.7	355.5	260.9	0.26
9	남성 50~5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92.5	296.8	204.3	0.33
10	여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91.7	210.4	118.7	0.21
11	남성 50~5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91.1	325.2	234.2	0.10
12	남성 50~54 대졸이상 300~4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90.0	300.4	210.4	0.21
13	남성 40~44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제조업	-87.8	220.4	132.6	0.07
14	남성 35~3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85.7	222.9	137.1	0.09
15	여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81.5	251.0	169.5	0.22
16	남성 35~39 대졸이상 100~299인 5~10년 기타 서비스업	-79.4	202.7	123.4	0.08
17	남성 55~5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76.5	317.6	241.1	0.10
18	남성 45~49 대졸이상 300~4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73.7	270.3	196.6	0.19
19	남성 45~49 대졸이상 100~299인 10년이상 기타 서비스업	-72.0	270.2	198.2	0.08
20	남성 30~34 대졸이상 100~299인 5~10년 기타 서비스업	-69.8	176.4	106.6	0.14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4〉 1993~2023년간 상대적 임금 지위의 상승 폭이 큰 15개 집단

(단위: %p, %)

순위	집단 특성	상대적 지위의 변화 (%p)	1993년 전체 평균 대비 (%)	2023년 전체 평균 대비 (%)	비중 (‘23, %)
1	여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전기운수통신훈용업	35.1	161.7	196.8	0.10
2	남성 25~29 대졸이상 500인이상 1~2년 제조업	22.2	107.2	129.4	0.09
3	남성 30~34 대졸이상 500인이상 5~10년 제조업	18.7	161.4	180.1	0.18
4	남성 25~29 대졸이상 500인이상 1년미만 제조업	14.1	78.4	92.5	0.12
5	남성 35~39 전문대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13.4	162.5	175.9	0.16
6	남성 50~54 전문대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12.7	204.6	217.3	0.12
7	남성 55~5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12.0	177.1	189.0	0.09
8	남성 50~54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10.9	167.5	178.4	0.08
9	남성 40~44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9.4	228.5	237.9	0.13
10	남성 35~39 대졸이상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7.3	200.1	207.4	0.10
11	남성 35~3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7.1	138.3	145.4	0.26
12	남성 40~44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6.1	154.3	160.4	0.06
13	남성 30~34 전문대졸 500인이상 5~10년 제조업	4.5	130.0	134.5	0.13
14	여성 18~24 대졸이상 500인이상 1년미만 기타 서비스업	1.9	68.8	70.7	0.09
15	남성 45~49 고졸 500인이상 10년이상 제조업	0.8	163.2	164.0	0.16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3〉와 〈표 3-4〉에 올라 있는 집단이 전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좌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상대적 지위 하락이 가장 큰 집단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미치지 못한다. 〈표 3-3〉의 20위까지를 합하더라도 3.1%에 불과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비중과는 별개로 이들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에 따라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특성별 임금 결정 영향력의 변화

이제까지의 분석은 임금금로자 집단을 세분화 한 후 집단 간의 임금 수준과 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소절에서는 임금 결정에 관한 회귀 분석을 통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영향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는 이 임금 결정 모형과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모형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는 연령(연령제곱), 성별, 학력,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종사 산업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령을 제곱항으로 둔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은퇴연령에 가까운 고연령 층에서는 임금이 낮고 반대로 중장년층에서는 임금이 높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범주형 특성의 경우 기준 집단은 남성(성별), 고졸(학력), 10~29인(사업장 규모), 1~2년(근속연수), 제조업(산업)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임금 결정에 대한 분석은 1993년, 2003년, 2013년, 2023년 등 네 해에 걸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점간 회귀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일 어떤 특성에 대해 t 시점과 $t+1$ 시점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t+1$ 시점의 회귀계수가 작아졌다면 그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프리미엄은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 어떤 특성의 프리미엄이 시기적으로 계속 감소하였다면 해당 특성을 지닌 집단은 임금 수준의 상대적 지위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표 3-5〉의 추정결과를 보면 연령과 임금의 관계가 위의 가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았고, 학력간 임금격차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사업장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대비 다른 산업의 임금 수준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제조업에 비해 항상 임금이 높지만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은 2013년과 2023년에는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의 오른쪽에는 추정계수의 변화 값이 제시되어 있다. 이 컬럼에서 값이 음수라는 것은 전기에 비해 해당 특성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색칠된 부분은 모든 전기 대비 비교에서, 그리고 1993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에도 추정계수의 변화가 음수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연령제곱항의 계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령 변화에 따라 임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추정계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 3-4]에서는 1993년~2023년의 기간 동안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고 그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했을 때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은 계속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도 광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제조업과 임금 격차를 더 벌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과 2023년을 비교하여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 이상 집단의 임금격차는 확대 되었다. 10~29인 사업장과 다른 규모의 사업장 사이에서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1~2년 근무경력자와 1년 미만 근무경력자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집단과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표 3-5〉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10인 이상 사업장)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의 변화			
	1993	2003	2013	2023년	1993~2003	2003~2013	2013~2023	1993~2023
상수항	1.419***	-4.767***	-10.198***	-8.716***	-6.186	-5.431	1.482	-10.134
연령	0.239***	0.589***	0.840***	0.887***	0.350	0.251	0.047	0.648
연령제곱	-0.002***	-0.006***	-0.008***	-0.008***	-0.004	-0.002	0.000	-0.006
여성	-1.592***	-2.235***	-3.933***	-4.452***	-0.643	-1.699	-0.519	-2.860
중졸 이하	-2.465***	-4.760***	-3.600***	-1.909***	-2.296	1.160	1.691	0.556
전문대졸	1.273***	2.565***	3.818***	3.361***	1.293	1.253	-0.457	2.088
대졸 이상	5.103***	9.155***	11.011***	9.965***	4.052	1.856	-1.045	4.862
30~99인	-0.077***	0.176***	0.691***	0.575***	0.253	0.516	-0.116	0.652
100~299인	0.398***	1.183***	1.729***	2.402***	0.785	0.546	0.673	2.004
300~499인	0.687***	2.786***	4.458***	4.369***	2.098	1.672	-0.089	3.682
500인 이상	1.703***	4.802***	11.020***	12.326***	3.099	6.218	1.306	10.624
1년 미만	-1.123***	-1.514***	-1.025***	-1.028***	-0.391	0.489	-0.004	0.094
2~3년	0.519***	0.999***	0.888***	0.984***	0.480	-0.112	0.097	0.465
3~4년	0.857***	1.731***	1.593***	1.417***	0.873	-0.137	-0.176	0.560
4~5년	1.284***	1.967***	2.081***	1.583***	0.682	0.114	-0.499	0.298
5~10년	2.396***	3.959***	3.964***	2.919***	1.563	0.005	-1.044	0.523
10년 이상	5.341***	8.737***	10.231***	9.229***	3.396	1.494	-1.002	3.888
광업	2.118***	1.663*	0.021	-1.503***	-0.455	-1.641	-1.524	-3.620
건설업	0.861***	-0.149***	-1.631***	-2.017***	-1.010	-1.482	-0.385	-2.878
전기운수통신금융	1.268***	3.501***	2.126***	1.832***	2.233	-1.375	-0.295	0.564
도소매음식숙박	0.648***	1.803***	1.267***	0.781***	1.155	-0.536	-0.486	0.1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0.648***	0.385	-0.416***	-1.572***	-0.263	-0.801	-1.156	-2.220

주: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남성, 고졸, 10~29인 사업장, 1~2년 경력, 제조업이 준거집단임.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6〉도 〈표 3-5〉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것이나 5~9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 시점은 2003년, 2013년, 2023년의 세 시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표에서도 연령 제곱과 여성의 추정계수는 시점이 경과하면서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과의 임금 격차 측면에서도 광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의 임금이 격차를 더 벌려왔다. 특이한 점은 근무 경력인데, 〈표 3-5〉와 달리 근무 경력 2~3년, 3~4년, 4~5년, 5~10년 범주의 추정계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이들 경력직의 임금은 1~2년 근무 경력자에 비해 임금이 높지만 그 격차는 계속 줄어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근무 경력 10년 이상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003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이러한 변화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고졸 학력자와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는 확대되었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긴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확대되었지만 다른 집단과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임금 상승은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산업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반대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의 격차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고학력, 대규모 사업장, 장기 근무경력자, 제조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와 다른 집단의 격차가 더 확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일부 고임금 집단과 다른 집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은 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3-6〉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의 변화		
	2003	2013	2023년	2003~2013	2013~2023	2003~2023
상수항	-3.679***	-8.530***	-6.361***	-4.851	2.169	-2.681
연령	0.560***	0.802***	0.817***	0.241	0.015	0.257
연령제곱	-0.006***	-0.008***	-0.008***	-0.002	0.000	-0.002
여성	-2.259***	-3.790***	-4.280***	-1.531	-0.490	-2.021
중졸 이하	-4.512***	-3.345***	-1.907***	1.167	1.438	2.605
전문대졸	2.418***	3.627***	3.068***	1.209	-0.559	0.650
대졸 이상	8.453***	10.238***	9.090***	1.785	-1.148	0.637
5~9인	-1.445***	-2.345***	-1.778***	-0.900	0.567	-0.333
30~99인	0.165***	0.657***	0.562***	0.492	-0.095	0.397
100~299인	1.151***	1.664***	2.410***	0.513	0.746	1.259
300~499인	2.827***	4.441***	4.445***	1.614	0.005	1.618
500인 이상	4.899***	11.115***	12.449***	6.216	1.334	7.550
1년 미만	-1.298***	-0.978***	-0.903***	0.320	0.075	0.395
2~3년	0.973***	0.728***	0.954***	-0.245	0.226	-0.019
3~4년	1.639***	1.464***	1.388***	-0.175	-0.075	-0.250
4~5년	1.933***	1.994***	1.500***	0.061	-0.494	-0.433
5~10년	3.826***	3.732***	2.839***	-0.094	-0.893	-0.987
10년 이상	8.399***	9.714***	8.851***	1.314	-0.862	0.452
광업	1.375***	0.183	-1.180***	-1.192	-1.363	-2.554
건설업	-0.612***	-2.184***	-2.027***	-1.572	0.157	-1.415
전기운수통신금융	3.737***	2.721***	2.290***	-1.016	-0.431	-1.447
도소매음식숙박	1.543***	1.058***	0.725***	-0.485	-0.333	-0.817
사업개입공공서비스 기타	0.506***	-0.351***	-1.441***	-0.858	-1.089	-1.947

주: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남성, 고졸, 10~29인 사업장, 1~2년 경력, 제조업이 준거집단임.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마. 출생 코호트별 실질임금 비교

마지막으로 각 출생 코호트별 임금의 변화를 통해 집단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출생 코호트란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분석 대상 기간의 출발점인 1993년에서 가장 낮은 연령, 즉 15~19세였던 코호트는 1974년~1978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이다. 당시 60~64세였던 코호트는 1929년 ~1933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이다. 물론 1993년 자료에는 그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임금 데이터의 관측 연도에 따라 다양한 출생 코호트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관측된 코호트를 비교하기 위해 분석 대상을 10개의 코호트로 제한하였다. 5년 단위로 코호트를 구분하였을 때 가장 출생 연도가 빠른 코호트는 1949년~1953년에 출생한 근로자이고 반대로 출생연도가 가장 늦은 코호트는 1994년~1998년에 출생한 근로자이다. 각 코호트가 동일한 연령대에 도달했을 때 받았던 실질임금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코호트별 실질 임금 사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표 3-7〉은 각 코호트별, 연령대별 실질임금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후 출생코호트일수록 같은 연령대에서 더 높은 실질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후 출생 코호트의 실질임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코호트 간 실질임금의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30~34세의 평균 임금을 보면 1984~1988년 코호트(20.7천원)에 비해 그 이후 출생 집단인 1989~1993년 코호트의 임금 수준(20.6천원)이 다소 낮다. 25~29세의 임금을 보면 1994~1998년 코호트가 그 이전 출생자인 1989~1993년 코호트보다 낮다.

〈표 3-7〉 출생코호트별, 연령대별 평균 시간당 실질임금 비교

(단위: 천원)

연령대 출생연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29~33									9.3
1934~38								10.0	10.5
1939~43							11.0	11.7	11.0
1944~48						11.8	14.2	14.6	14.5
1949~53					12.0	14.9	16.8	19.0	15.8
1954~58				11.7	15.1	18.3	22.0	20.7	18.2
1959~63			10.7	14.6	18.8	22.3	22.9	23.0	18.9
1964~68		8.6	13.1	18.3	22.5	23.4	25.5	23.9	
1969~73	6.1	10.2	16.1	21.3	23.2	26.4	26.4		
1974~78	7.5	12.1	18.4	21.7	25.7	26.7			
1979~83	8.8	14.0	18.5	23.8	26.4				
1984~88	10.2	15.1	20.7	24.6					
1989~93	11.3	16.8	20.6						
1994~98년	12.8	16.4							

주: 2020년의 물가=100으로 실질임금으로 전환한 값임.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8〉을 보면 각 코호트가 이전 코호트와 얼마나 다른 실질임금 상승률을 경험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44년~1948년생 코호트 중 50~54세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이전 코호트(1939~1943년생)이 같은 연령대에 받았던 실질임금에 비해 29.4% 높은 실질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1949~1953년생 코호트는 같은 연령대에 이전 코호트(1949~1953년생)에 비해 18.5% 높은 임금을 받았다. 대체로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이전 코호트에 비해 실질임금은 높아지지만(〈표 3-7〉)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낮아진다. 이 역시 경제성장의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지 않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표 3-8〉 이전 코호트 대비 실질임금 상승률

(단위: %)

연령대 출생연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34~38									12.3
1939~43								17.7	5.1
1944~48							29.4	24.4	31.7
1949~53						26.5	18.5	30.2	9.1
1954~58					26.1	23.1	30.5	9.2	15.1
1959~63				24.7	24.3	21.9	4.1	10.8	4.0
1964~68			21.8	25.6	19.7	4.9	11.3	3.9	
1969~73		19.2	23.3	16.4	2.9	12.7	3.8		
1974~78	24.5	18.5	13.8	1.6	11.0	1.4			
1979~83	16.2	15.5	1.0	9.7	2.8				
1984~88	16.1	7.8	11.7	3.4					
1989~93	11.1	10.9	-0.7						
1994~98년	13.1	-2.3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호트별 비교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특정 시점의 특수성이 갖는 효과이다. 〈표 3-8〉에서 모든 연령대의 마지막 코호트(섕칠된 부분)는 1994~1998년생 코호트를 제외하면 이전 코호트에 비해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인다. 예를 들어 40~44세 연령대의 가장 마지막 코호트는 1984~1988년생인데 이 집단은 그 이전 코호트가 동일 연령대였을 때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3.4%로 낮은 편이다. 모든 연령대

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이는 마지막 코호트의 임금 상승률이 관측된 해가 2009년이고, 이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해이다. 즉 경제위기가 있었던 시점에는 연령대에 불문하고 이전 코호트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현상은 각 연령대별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코호트(빛금친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는 1999년으로 이 역시 외환위기 직후의 시점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경제위기) 효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코호트는 이전 코호트에 비해 같은 연령대에서 실질임금 수준은 높고 임금 상승률은 낮은 경험을 갖고 있다. 즉 임금 수준이나 상승률 측면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특별히 예외적이라는 인식을 가질만한 코호트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고용 형태와 임금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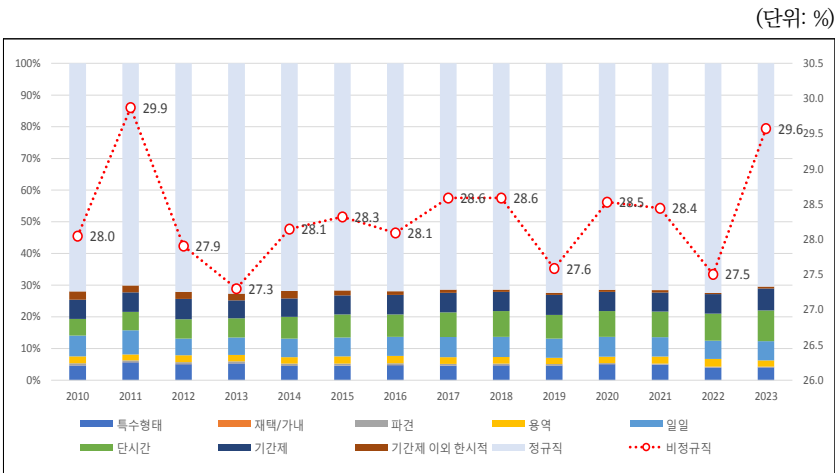
앞선 분석에서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분절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년부터 별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형태 구분이 담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 자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 부문)¹¹⁾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불평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자료는 고용 형태를 9가지로 구분한다. 특수형태, 재택/가내, 파견,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기간제 이외의 한시근로, 그리고 정규직이다. 이 절에서는 정규직으로 구분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유형을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7]은 2010~2023년 동안 이 9가지

11) 이 시계열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유형의 고용 형태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의 점선은 8가지 유형을 비정규직으로 묶었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이 기간 동안 약 27%~에서 30% 범위 안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2023년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2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2%p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¹²⁾

[그림 3-7]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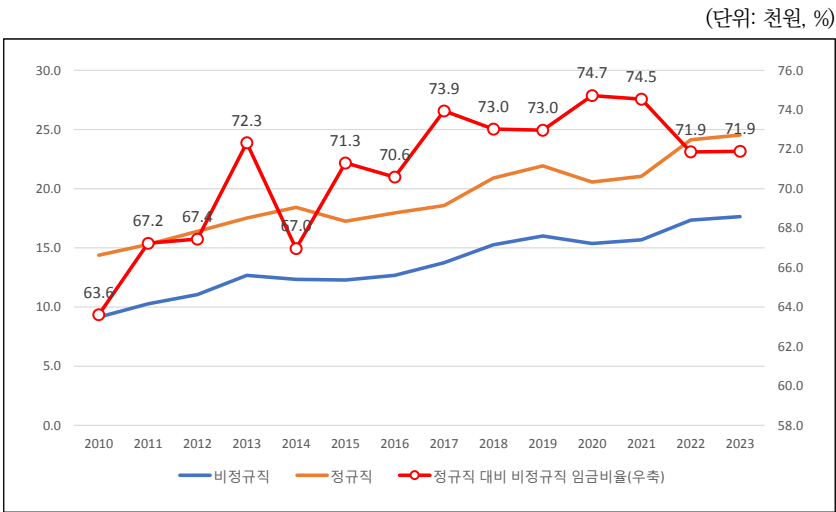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3-8]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변화를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그림 3-8]의 꺾은 선)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두 집단의

12) 이 수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제공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그 이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1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금 격차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010년에는 63.6%였던 것이 2020년에는 74.7%까지 높아졌다. 2023년의 경우 71.9%를 보였다.

[그림 3-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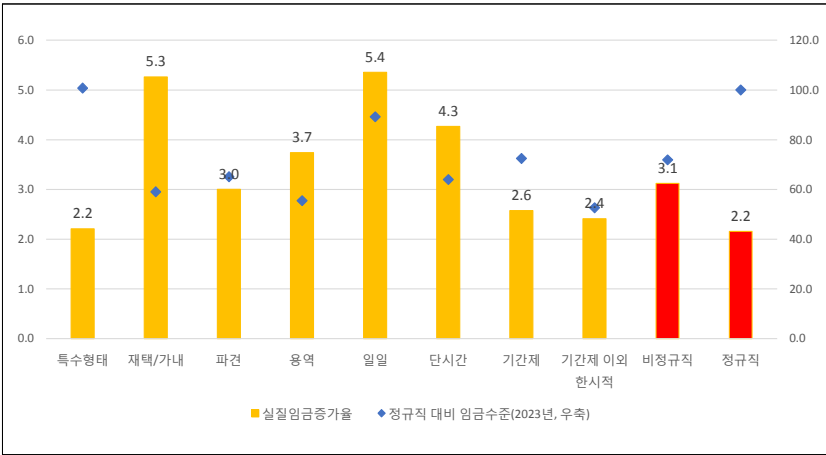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3-9]는 비정규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정규직과의 임금수준 격차(2023년 기준)과 실질임금 상승률(2010~2023년 간 연평균 상승률) 차이를 보여준다.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일일 단기 근로자이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5.4%의 상승률을 보여 정규직 임금상승률 2.2%의 두배를 넘는다. 2023년 기준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3%, 다음으로 비중이 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6%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은 정규직 대비 64.0%, 72.4%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전체의 임금상승률은 3.1%였다. 이는 정규직의 연평균 상승률 2.2%보다 높은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두 집단의 임금격차는 축소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연평균 증가율(201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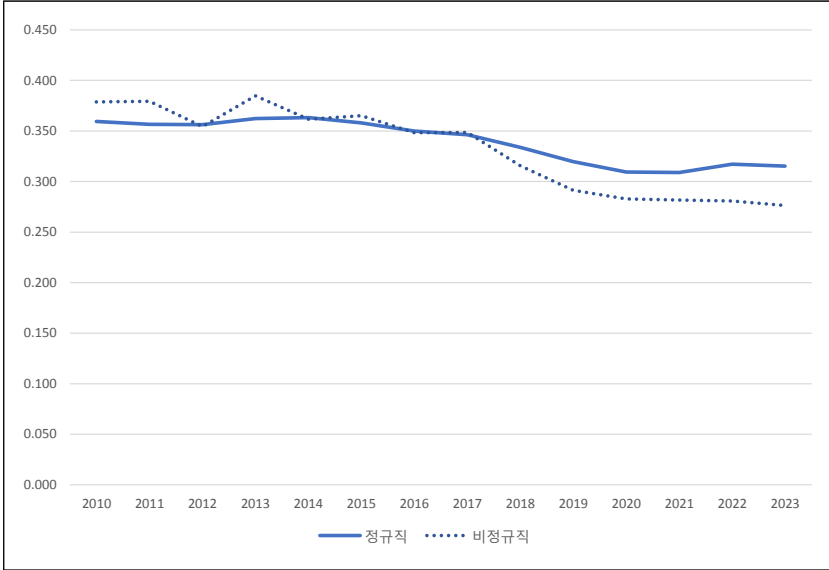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한편 [그림 3-10]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의 임금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시간당 임금의 지니계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 각 집단의 지니계수는 2010~2023년의 기간동안 감소하였다. 정규직은 2010년 0.359에서 2023년 0.315로,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0.379에서 0.276으로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내의 임금 불평등이 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에 비해 대체로 높았으나 2018년 이후는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는 추세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림 3-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지니계수 변화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근로자의 다른 특성과 함께 비정규직 여부가 임금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살펴보자(〈표 3-9〉). 이는 앞서 〈표 3-5〉와 〈표 3-6〉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작업인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비정규직 여부)를 추가로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차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규모 기준 집단이 30~299명으로 설정되었다.

〈표 3-9〉 시간당 실질임금 결정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변화(5인 이상 사업장)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의 변화 (2010~2023년)
	2010년	2023년	
상수항	-3.286***	0.555***	3.841
연령	0.672***	0.644***	-0.028
연령제곱	-0.007***	-0.006***	0.001
여성	-3.301***	-3.923***	-0.622
중졸 이하	-2.235***	-0.908***	1.327
전문대졸	1.658***	1.522***	-0.136
대졸 이상	6.600***	6.705***	0.105
비정규직	-0.047	-0.187***	-0.140
5인 미만	-4.661***	-4.637***	0.024
5~29인	-2.170***	-1.755***	0.416
300인 이상	6.715***	9.075***	2.360
1년 미만	-0.241***	0.220***	0.461
2~3년	0.518***	0.555***	0.037
3~4년	0.996***	1.218***	0.222
4~5년	1.349***	1.440***	0.091
5~10년	2.682***	2.424***	-0.258
10년 이상	7.456***	7.462***	0.006
광업	1.244***	-0.570	-1.814
건설업	0.609***	1.882***	1.273
전기수도운수업	-2.194***	-1.662***	0.532
통신금융업	7.571***	5.510***	-2.061
도소매음식숙박업	1.063***	0.670***	-0.394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0.626***	-0.765***	-1.390
R ²	0.3947	0.0298	

주: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남성, 고졸, 정규직, 30~299인 사업장, 1~2년 경력, 제조업이 준거집단임.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를 분석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3-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변수들은 〈표 3-5〉나 〈표 3-6〉과 임금수준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가된 변수인 비정규직 여부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에는 이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다가 2023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을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보다는 다른 특성, 예컨대 사업장 규모들이 임금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더 유의했다면 2023년에는 비정규직이 임금격차를 매우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변수별 추정계수의 값들을 보면 비정규직 여부를 통제하더라도 여전히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의 성별(여성),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학력(중졸 이하), 낮은 근속 연수(1년 미만), 산업적 특성(전기숙박업 등)은 여전히 임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요인이었다. 정규직 내부에서도 이들 특성을 지니는 근로자들은 다른 기준 집단(남성, 고졸, 30~299인 사업장, 1~2년 근속,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다.

한편 추정계수의 차이를 보면 비정규직의 추정계수 절대값은 더 커졌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2023년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커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상대적 임금수준을 비교한 [그림 3-9]와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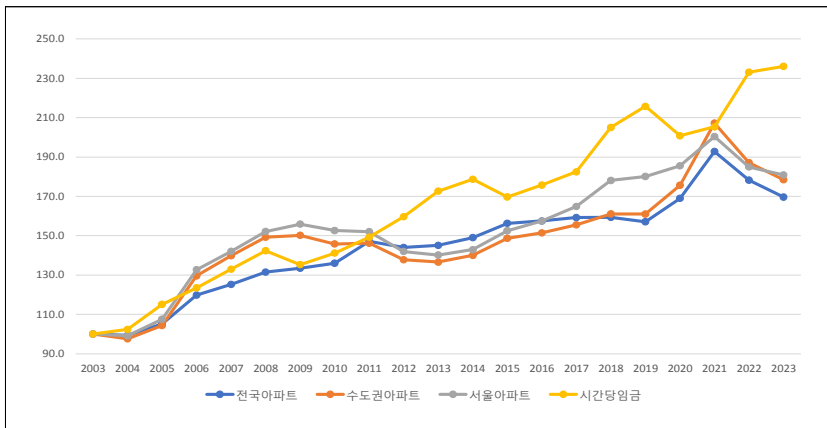
4. 임금 상승과 아파트 가격 변화

임금의 절대적 수준이나 불평등 변화와는 별개로 임금 소득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갈 경우 근로자들 집단은 소득 지위가 나빠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 재화가 필수재인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주택, 그 가운데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임금 수준의 변화와 달리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인식 변화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림 3-11]은 아파트 가격 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임금의 상승 속도와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아파트 가격은 단위 면적(1㎡) 당 가격의 중위값의 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지역은 전국, 수도권, 서울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11] 아파트 가격과 임금의 변동(2003년=100)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 “주택 매매가격 지수(아파트)[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2025.4.22.), 국가통계포털, 2025.8.1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81>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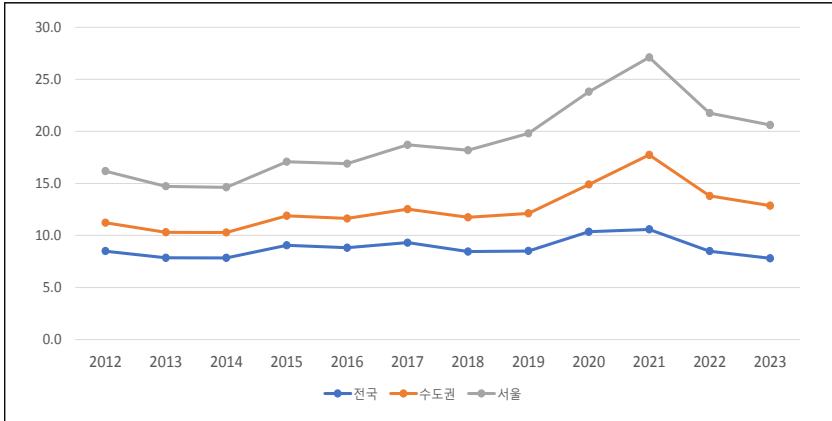
2003년~2023년의 20년 동안 임금 상승률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높다. 2017~2019년에는 임금의 상승 속도가 빨랐으나 2020~2021년에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가 전에 비해 빨라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금 상승을 추월하기도 하였다.

[그림 3-11]이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것이라면 [그림 3-12]는

단위 면적 당 아파트 가격을 이용하여 실제로 연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면적을 평(3.33㎡)단위로 계산한 30평 면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였다. 아파트 가격정보의 시계열이 충분히 길지 않아 분석의 시점은 2012년 이후로 제한하였다.

[그림 3-12] 평균 임금으로 아파트(99.9㎡=30평)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단위: 년)



출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각 연도), “주택 매매가격 지수(아파트)[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2025.4.22.), 국가통계포털. 2025.8.1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81>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전국 아파트의 경우 2012년에는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대비 아파트 가격이 약 8.5배였다.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2021년에는 10.6배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에 다시 8.5배로 줄어 들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 이 달라 2012년에는 평균 임금의 16.2배였고 2021년에는 27.1배까지 높아졌다. 지역과 무관하게 2019년~2021년에는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비교의 시점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 임금의 수준에 비교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임금의 상승이나 불평등 개선과 무관하게 소득 분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금을 저축하여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이 된다면 보유 자산의 수준 차이, 현재 주택 보유 여부, 임금 이외의 소득원 보유 여부, 신용에 대한 접근도의 차이 등 다른 경제적 요인이 갖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준거집단 이론에 기초하여, 가구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달리 임금의 불평등이 확대되었는지, 세부 집단 간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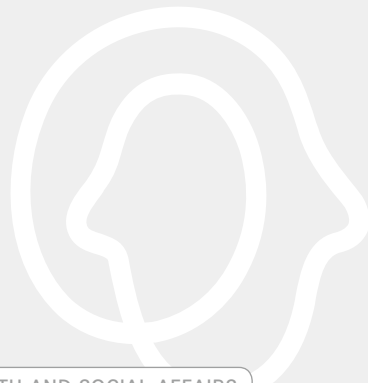
우선, 전반적인 임금의 불평등은 분석 기간동안 뒤집어진 U자 모양으로 변했다. 즉 임금 불평등이 높아지다가 2008년~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을 지나면서 다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임금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수준이 높았던 집단(의 상승률은 낮고 임금이 낮았던 집단의 상승률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승률 격차는 임금의 상대적 지위를 변하게 한다. 임금이 높았더라도 그 높은 정도가 줄어든다면 임금의 상대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 대출 이상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낮은 집단에 해당하고 남성, 500인 이상 사업장, 10년 이상 근로 경력을 가진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상대적 임금지위의 하락폭이 큰 집단에 해당한다.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면 남성, 대졸 이상, 대기업,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제조업 종사자라는 사실이 임금 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비정규직으로 정의되는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하지 않다. 또한, 별도의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은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다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낮추는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수도권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경우 임금상승률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고 그 결과 약 100평방미터의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 연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임금 이외의 요인에서 나타나는 격차가 중요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어지는 4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경우 주요 특성을 위주로 구분한 집단 간의 격차보다는 세분화된 집단 사이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어떤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임금의 상대적 격차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 자체의 격차와는 별개로 주택 자산의 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른 경우 주택 자산의 보유 여부와 보유 지역의 차이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제4장

어두운 미래 경제 전망 : 자산 불평등의 영향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어두운 미래 경제 전망 : 자산 불평등의 영향

제1절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자산 불평등에 주목하여, 자산이 더딘 분배 인식 개선의 요인은 아닌지 점검한다. 이 장에서 분석하는 내용과 분석 방법은 아래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4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연구 가설	연구 내용	분석 방법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였는가? 자산 불평등 심화로 미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는가?	자산의 불평등 수준 및 추이, 자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상태에 대한 평가 결정요인 분석	-분석 자료: ①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2023년, ② 한국사회조사 2010년~2023년 -분석 방법: ① 지니계수 등: 자산 지니계수 ② 기술통계: 및 자산 규모 및 자산 종류 비교 분석, 자산 빈곤 추이 ③ 회귀분석: 주관적 계층 인식 과 가구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 결정요인 분석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계급이나 계층을 구별하는 지표로 주로 소득을 사용해 왔으나,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산 수준으로 정의하곤 한다(김용철, 조영호, 신정섭, 2018).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 이해(self-interest) 관점에서 자산 보유나 보유 자산의 규모가 재분배 정책을 비롯한 인식이나 태도를 좌우한다고 지적하곤 한다(김항기, 권혁용. 2017; 양종민, 2022; 양종민, 김도균. 2022; 김도균, 양종민, 2023). 실제로 분배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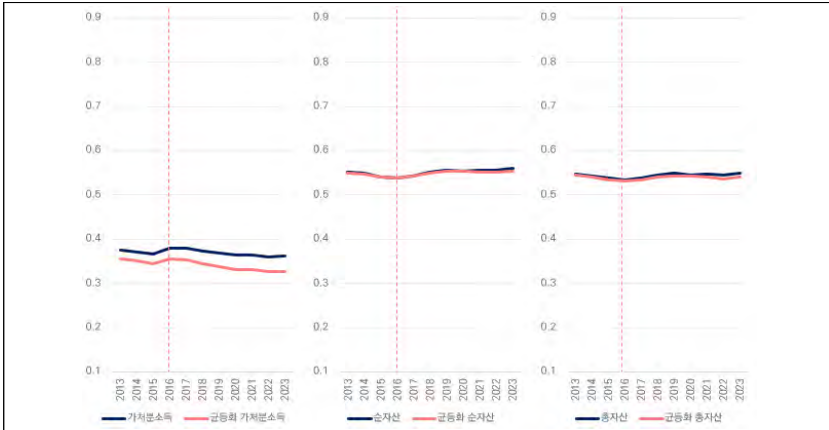
인식과 관련하여, 황선재(2023)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원인을 탐구한 연구의 결론에서 소득보다 자산, 자산 중에서도 특정 자산이 분배 인식 악화의 요인일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소득 불평등(지니계수)이 완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분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소득과 재산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황선재, 2023, p.24).

어떤 측면에서든 나의 사회적 처지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 때문에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Pettigrew, 1967; Hirschman & Rothschild, 1973).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자산은 소득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그 정도도 심화하고 있다(정준호, 전병유, 2016; 이우진, 2018; 전병유, 2019; 정준호, 전병유, 2020).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Duvoux (2025)의 이론적 틀에 따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자산이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자산의 영향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순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순자산 분위에 따른 보유 자산 유형 및 규모를 나누어 검토한다.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래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및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Arundel & Ronald, 2021; Parkhomenko, 2022). 구체적으로 저(低) 자산 집단과 중간 소득 집단(middle-income group)에서의 변화에 주목한다. 먼저, 저자산 집단에서 나타나는 미래 위험에의 대응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살핀다. 이어서, OECD(2019)에서 주목한 중간 소득 집단의 자산 보유 기회 제약의 양상을 살핀다.

1. 연구 배경: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개선된 소득 분배(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pp.63-68)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자산 보유는 상위층에 집중되기 때문에(Davis & Shorrocks, 2000), 자산 불평등이 소득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정준호, 전병유, 2016; 이우진, 2018; 전병유, 2019; 정준호, 전병유, 2020;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김지훈, 강욱모, 2021; 김상봉, 김시연, 홍종혁, 2023). [그림 4-2]에서 보면, 자산 지니계수는 0.5 수준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0.3 수준인 것에 비해 높다.¹³⁾

[그림 4-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추이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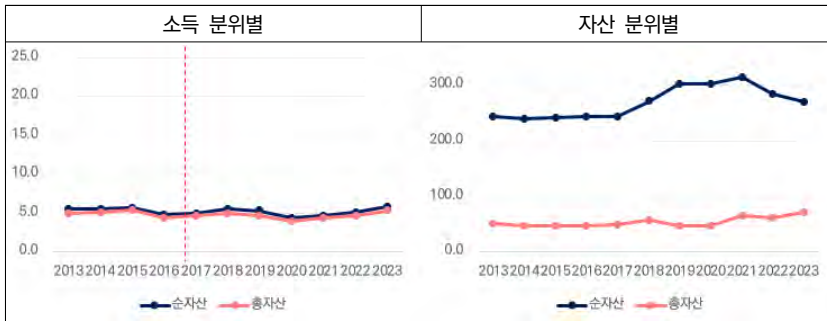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13)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조사 자료에서 고소득층은 본래보다 소득을 줄여서, 저소득층은 늘려서 보고하여 소득 불평등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7년부터 행정 자료를 통해 소득 정보를 보완하였다. 실제로 행정 자료 보완 이후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 경우에도 자산 불평등보다는 그 수준이 낮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집단 간 격차도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그림 4-3]부터 [그림 4-5]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10분위 배율이다. 자산 상위 분위의 평균 소득과 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누어 10분위 가구의 소득, 자산과 1분위(저자산) 가구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 4-4]는 OECD(2019)의 중간 소득자 정의에 따라, 중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앞선 1장의 [그림 1-5]에서 누락된 고소득층의 소득 포착 확대로, 소득 자료에 대한 행정 보완이 이루어진 2017년을 전후로 소득 분위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10분위 배율이 높아지나, 소득 격차는 적어도 코로나 완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그림 4-3]의 원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산 분위에 따른 소득 분위 배율은 현저하게 낮고 증감 추세도 뚜렷하지는 않다.

[그림 4-3]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10분위 배율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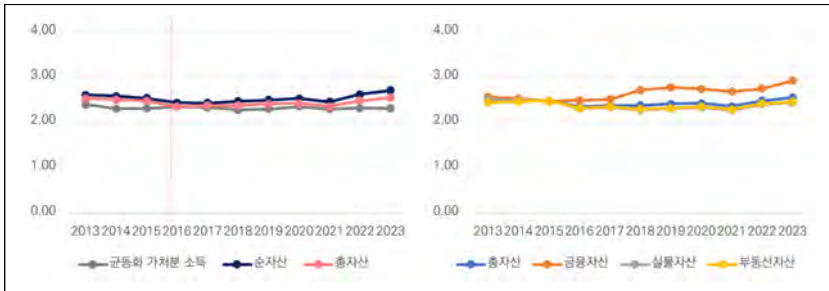


주: 소득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순자산과 총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순자산이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자산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순자산과 총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이때, 순자산이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변환하여 산출하였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 자료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와 달리, [그림 4-3]의 오른편 그림처럼, 자산의 10분위 배율은 다소 늘어났다. 평균적인 수준에서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물론 집단 간 격차도 커진 것이다. 물론 소득 분위에 따른 10분위 배율은 최근 들어 근소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긴 하나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그림 4-4]와 같이, 중간 소득자(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와 고소득자(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인 간에도 최근 들어 자산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 소득자와 중간 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는 2.3배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에 비해, 팬데믹을 거치며, 순자산 차이는 2.5배 수준에서 2.7배로 높아졌고, 총자산도 2.4배에서 2.5배로 커졌다.

[그림 4-4] 중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자산 종류별 격차 (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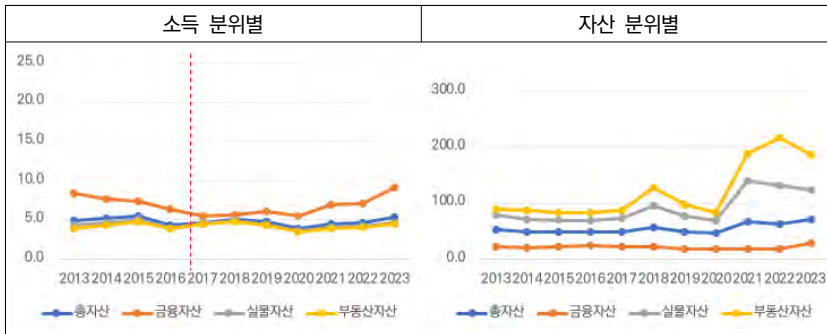
주: OECD(2019)에 따라, 중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 가구이고, 상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200% 이상인 가구이다. 이 그림은 상위 소득자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과 자산을 중간 소득자의 그것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 자료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에 비해 자산 분위에 따른 격차는 현저하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순자산과 총자산 모두 자산 차이가 5배 내외 수준인 것에 비해, 자산 분위에 따른 자산의 격차는 2023년 기준 총자산은 약 70배, 순자산은 271배에 달한다. 현저한 격차 때문에 축의 크기가 상이한데, 이는 자산의 종류에

따른 [그림 4-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격차의 크기가 현저할 뿐 아니라, 자산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기도 하다.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는 금융 자산의 10분위 배율, 순자산 분위에 따라서는 실물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뚜렷하다. 중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 간의 격차는 순자산 최하위 분위와 최상위 분위와의 격차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 하지만,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들 간의 차이도 다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차이는 금융 자산에서 두드러진다. 상위 소득자의 금융 자산은 중간 소득자 대비 2020년 2.7배에서 2023년에는 2.9배로 늘었다. 부동산 자산의 격차도 다소 늘어, 2020년 2.3배에서 2023년에는 2.4배에 달했다.

[그림 4-5] 소득과 자산 분위별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 (2013~2023년)



주: 소득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총자산과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자산 분위별 10분위 배율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10분위의 총자산과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처럼 자산은 불평등의 수준이 소득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은 물론,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격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산 분배의 양상이 (소득) 분배 개선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이 분배에 대한 인식에 주되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저자산 집단의 낮은 미래 대응력, 중간 소득 집단의 닫힌 자산 축적 기회를 실마리로 더딘 분배 인식 개선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자산 불평등 심화가 분배 인식을 악화시키는 이유

Duvoux(2025)는 불평등 연구에서 객관적 상태에 대한 이해와 주관성의 통합(projective synthesis) 틀을 제시한다. 불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성은 주변화된다.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강조할 때는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 간과될 수 있다. 그런데 Duvoux(2025)가 강조하듯, 개인들의 주관적 인식은 실제 분배 상태와 분리될 수 없고, 객관적 상태 이면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해 준다. 예컨대, 주택 소유는 단순한 경제적 상태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회적 지위의 한 표상으로 작동한다(Duvoux, 2025, p.11). 이처럼 주관성은 사회적 지위나 계층을 결정하는 객관적 토대가 사회 내에서 가지는 미묘한 의미를 포착하여 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위계질서를 조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때 Duvoux(2025)는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현 상태뿐 아니라, 미래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이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현재 상태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포하는 것은 물론, 현재 상태에 대한 인식을 좌우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준거집단 이론이나 문화 이론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나와 타인의 처지를 비교해 사회 전반의 분배 상태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같다(Duvoux, 2025, pp.3-4). 그러나 Duvoux(2025)는 미래에 대한 평가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계층을 가르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Duvoux, 2025, p.14), 개인의 생애 내에서의 비교, 즉 현재와 미래, 시간 차원에서의 비교에 초점을 둔다. 즉, 분배 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미래에 대한 통제감, 안정감 혹은 무력감, 불안과 같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Duvoux(2025)에 따르면, 분배가 악화했거나,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느끼는 주요 요인은 미래 경제적 상태를 비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안(insecurity)이 사회적 지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estern, Bloome, Sosnaud & Tech, 2012; Duvoux, 2025, pp.12-14). 경제적 불안은 소득 변동성과 관련 깊은데, 실업이나 질병 혹은 상해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가구 변동 등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주된 요인이 된다(Western, Bloome, Sosnaud & Tech, 2012). 사회보장 제도는 이런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이다. 문제는 사회보장 제도가 고용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대응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Western, Bloome, Sosnaud & Tech, 2012, pp.352-353). 이 때문에 개인 혹은 가구 단위에서의 사적 대응 기제가 중요해지고, 특히 고용 불안정이 크고 수급하는 급여의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게서 더욱 그러하다(Western, Bloome, Sosnaud & Tech, 2012, p.353).

이 맥락에서 Duvoux(2025)는 자산에 주목한다. 우선, 자산은 미래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응할 경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일종의 “보험”

으로 자산은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이다(Allen, 2012, 2014). 실업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예금(저축)을 털어 쓸 수 있다. 소득 상실이 계속되어 저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유 자산을 매매 또는 매각하여 경제적 필요를 충당할 수도 있다. 자산은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제로,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상황에서 충분한 자산이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지만 당장 현금화할 자산이 없다면 극심한 궁핍을 경험할 수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 개인의 삶에 대한 불안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자산은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부를 소유하는 것을 장애물의 부재와 열린 기회로 인식한다(클라이브 해밀턴, 마이라 해밀턴, 2025, p.40). 자산이 있으면 돈 걱정 때문에 마뜩잖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비빌 언덕이 되는 자산 덕분에 단기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장기적인 경제적 안녕에 더 나은 투자를 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인적 자본을 충분하게 축적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다른 배경적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부의 소유가 삶의 기회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Roberts, 2022).

이때, 부동산 자산의 소유에 주목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평등의 문제는 자산 특히 주택 보유 혹은 주택 자산 접근성으로 귀결된다(Cohen Raviv & Lewin-Epstein, 2021; Duvoux, 2025, p.13). 1장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자산의 보유, 특히 부동산 자산의 보유가 서민과 중산층을 가르는 주요 주제어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 불안과 공공

사회보장 축소에 더불어, 금융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택 자산 보유는 가계 경제 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았다(Aalbers, 2008, 2016; Forrest & Hirayama, 2015; Kurz & Blossfeld, 2004). 다수가 주택 소유가 가능하기에 부의 분배를 더욱 평등하게 할 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Arundel & Ronald, 2021, pp.1123-1126). 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소유 접근성이 감소하고 주택 자산 집중이 더욱 심화되어 불평등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Arundel & Ronald, 2021).

주택을 소유하려면 부가 있어야 한다. 금융 부문의 확대는 신용이 있는 고소득, 고자산가 집단에게는 주택 자산 보유를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약금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삶의 어느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소득 및 지출 충격을 완충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도 부가 필요하다(Arundel & Ronald, 2021). 집을 수리해야 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세대를 거쳐 물려받은 부를 포함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충격은 주택 구매를 통해 얻은 자산을 모조리 잃을 수 있다. 예상 손실이 높을수록 대출 기관은 대출을 꺼려 이들에 대한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저소득층 뿐 아니라, 노동 소득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을 좇아 가기 어려운 중산층 가구가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실증 증거도 확인된다(OECD, 2019, pp.23-24; Parkhomenko, 2022).

이처럼 자산, 특히 주택 자산의 보유 가능성은 미래 경제적 안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산층은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OECD, 2019, p.24),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게서도 주택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그리고 주택 자산 이외의 유동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분배를 다르게 인식할 여지가 있다. 주택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한다면, 주택 자산이 있더라도 다른 유동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분배 상태를 나쁘게 인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저자산 집단과 중간 소득 집단의 자산 보유 양상 및 보유 자산 종류, 규모를 면밀하게 살피고, 이것이 분배 인식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 분배 인식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맥락을 확인하고자 한다. Duvoux(2025)의 이론적 틀에 따라 미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분석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산과 관련하여 가계의 미래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저자산 가구와 중간 소득 집단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미래 위험 상황에서의 낮은 대응력을, 중간 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산출의 기초 자료인 가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10년의 자료, 2014년~2024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한다. 앞선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행정 자료 보완에 따라서 시기마다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소득 정보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재산 관련 정보는 큰 변동이 없다. 이에, 최근 10개년 값, 2014년부터 2024년을 기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산 분포 분석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순자산을 중심으로

저(低) 자산 집단(1분위)부터 고(高)자산 집단(10분위)의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순자산 분위별 자산 보유 양상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자산이 적은 가구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적실하게 파악하고자 자산과 소득의 중첩 빈곤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OECD(2024)는 유동성 차원에서 현재의 자산이 소득 상실에 얼마큼(how long) 대응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산 빈곤을 판단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차용해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총자산을 균등화 가치분 소득 중위값의 절반 수준과 비교하여, 3개월, 6개월, 12개월 간의 생활이 가능한지 그렇지 못하면 (균등화 가치분 소득의 중위값 절반 수준 미만) 자산 빈곤으로 보고 순자산 분위별 소득과 자산의 중첩 빈곤을 산출해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OECD는 2010년대 후반부터 중산층(중간 소득자)이 축소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한편,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OECD, 2019). 다만, 한국에서는 중위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OECD, 2019, pp. 46-47), 중산층 가구의 소득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지도 않다(황수경, 이창근, 2024). 하지만,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중산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대도시의 부동산을 가질 수 없어 외곽으로 몰려나고 있다(OECD, 2019, pp.23-24; Parkhomenko, 2022). 우리 사회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간 소득자들의 자산 축적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가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중간 소득자와 200% 이상인 고소득자 간에 자산 보유의 기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중간 소득자와 고소득자가 유동 자산으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자산 보유를 위한 유동 자산은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

가능액” 금액을 차용하였다. 유동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한진(2024)은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잔여 소득을 저축 가능액으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금융 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 제외한 저축 금액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유 금액의 합산 값으로 계산한다. 이 개념은 가구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 자산 축적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더구나 공표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자산 축적의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분석 목표는 주관적 계층 인식과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미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평가 및 기회라는 측면에서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설명하는데,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유용하기 때문이다(Oesch & Vigna, 2023; Melli & Azzollini, 2025). 자신의 계층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히나 자산 분위에 따라서, 그리고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계층 인식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분배 인식 정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조사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누적 자료(분석에서는 2010년부터 2023년 자료 활용)를 활용하여, 자산이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자산 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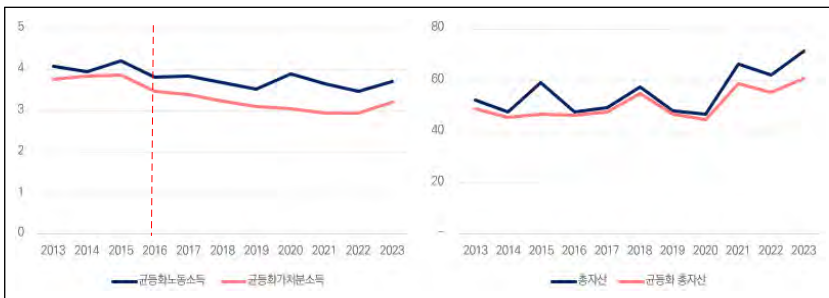
소득 보다 자산 불평등은 현저하게 높다. 전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이어서 [그림 4-6]과 [그림 4-7]에서 살펴볼 점은 불평등의 추이이다. 소득 불평등(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6]에서 소득원별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최근 들어 소득의 불평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자산 불평등은 근소하지만 계속해서 불평등의 수준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뿐만 아니라,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그림 4-6]에서는 순자산 규모에 따른 10개 집단을 구성,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및 자산 규모의 10분위 배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배율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 총자산의 10분위 배율은 점차 늘어난다. 또한, 소득과 자산의 배율의 크기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그림 4-6]의 축 값 차이에 주의), 소득은 4배 내외 수준인 것에 비해서 총자산은 2010년대 초반 50배 수준에서 2020년대 초 60배로 늘었다.

자산 종류별로도 순자산 분위에 따른 격차의 정도와 추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4-7]에서보면, 금융자산도 순자산 1분위(저자산)와 10분위(고자산) 간의 차이가 [그림 4-6]의 소득 10분위 배율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 그 차이가 적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의 격차 확대 폭도 덜한 편이다. 실물 자산의 경우는 계속해서 순자산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가 금융자산보다 큰 것은 물론 최근에도 뚜렷하게 커지고 있다. 특히, 실물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의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순자산 10분위가 1분위보다 최대 200배 이상(2022년) 많은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 보유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재산소득은 전반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긴 하나, 그것의 격차 수준이 다른 소득원(〔그림 4-6〕의 원편 그림 참고)의 10분위 배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재산소득은 결국 자산의 보유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산 불평등은 그 수준이 소득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뚜렷하게 확인되는 이러한 양상은 분명 분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산 격차 및 불평등의 심화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분배 인식과 관련될까? 이하에서는 전술한 Duvoux(2025)의 틀에 따라 가구의 미래 전망의 측면에서 자산 격차 및 불평등이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저자산 분위와 중간 소득자 집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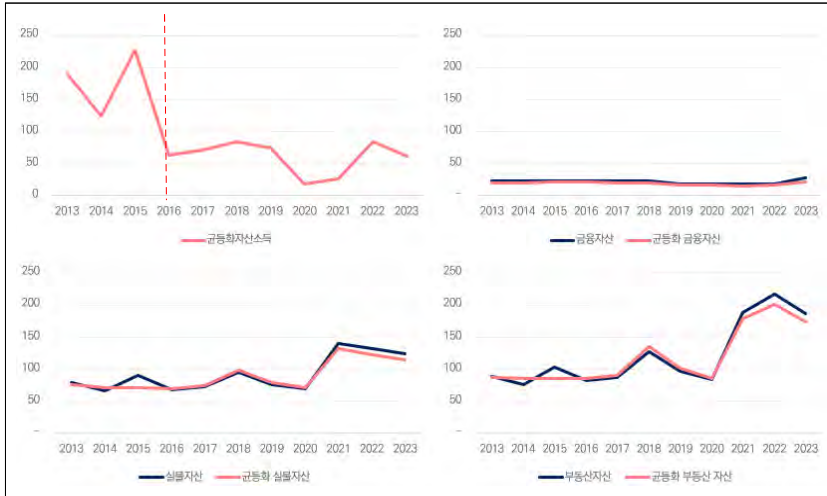
〔그림 4-6〕 소득 및 총자산의 10분위 배율 (2013~2023년)



주: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나눈 집단의 가처분소득 및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10분위의 가처분소득, 총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7] 재산소득 및 자산 종류별 10분위 배율 (2013~2023년)



주: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나눈 집단의 가처분소득 및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10분위의 가처분소득, 총자산을 1분위의 그것으로 나눈 값이다.

출처: 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2. 가구의 경제 전망이 어두운 이유: 자산의 영향

가. 저자산 가구: 미래 위험에의 낮은 대응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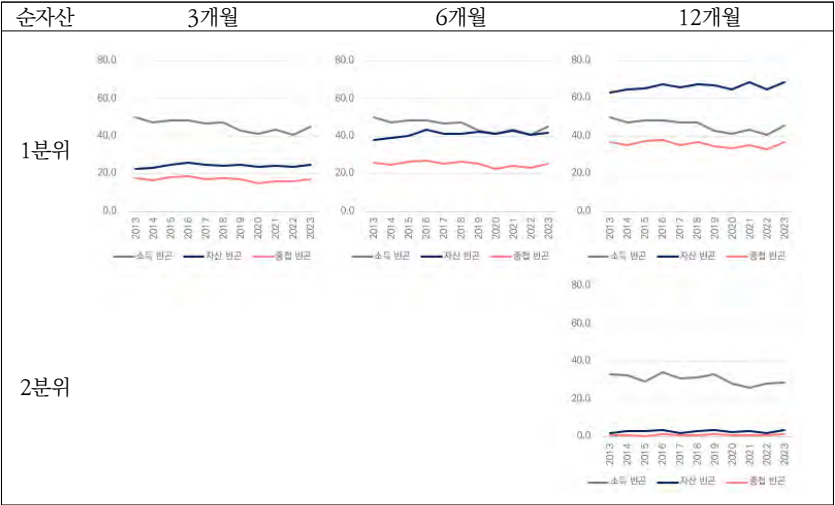
OECD(2024)의 정의에 따라 살펴본 최근 10년 간의 자산 빈곤은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다. 소득 빈곤은 순자산 고분위에서도 일부 발견되지만, 자산 빈곤은 순자산 1분위에 집중된다.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12개월까지 버틸 여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순자산 2분위에서도 일부 자산 빈곤이 나타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순자산 1분위에서만 보인다. 또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 빈곤을 살펴보면 순자산 1분위의 60% 이상이 자산

빈곤, 35% 이상이 중첩 빈곤을 경험함을 보인다. 자산 빈곤의 증가로 인해, 소득 빈곤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의 중첩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소득이 불충불한뿐 아니라, 자산으로도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자산 집단은 일시적인 경제적 위험에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부채 보유 비중 및 규모는 고자산 집단에서 현저하게 높으나, 저자산 집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전후로 순자산은 감소한다. 특히, 순자산 1분위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빚을 내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순자산 1분위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위험에서 부채 보유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산 저분위는 대출 규모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험 상황을 거치면서 부채 상황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연체자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기에 따른 변화가 미미한 고자산 집단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순자산 1분위는 부채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규모 역시 적어서 다른 자산 분위와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의 변동이 잦고 변동의 폭도 커 저자산 집단이 위험 상황에서 자산을 통해 대응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순자산 저(低)자산 집단의 소득-자산 중첩 빈곤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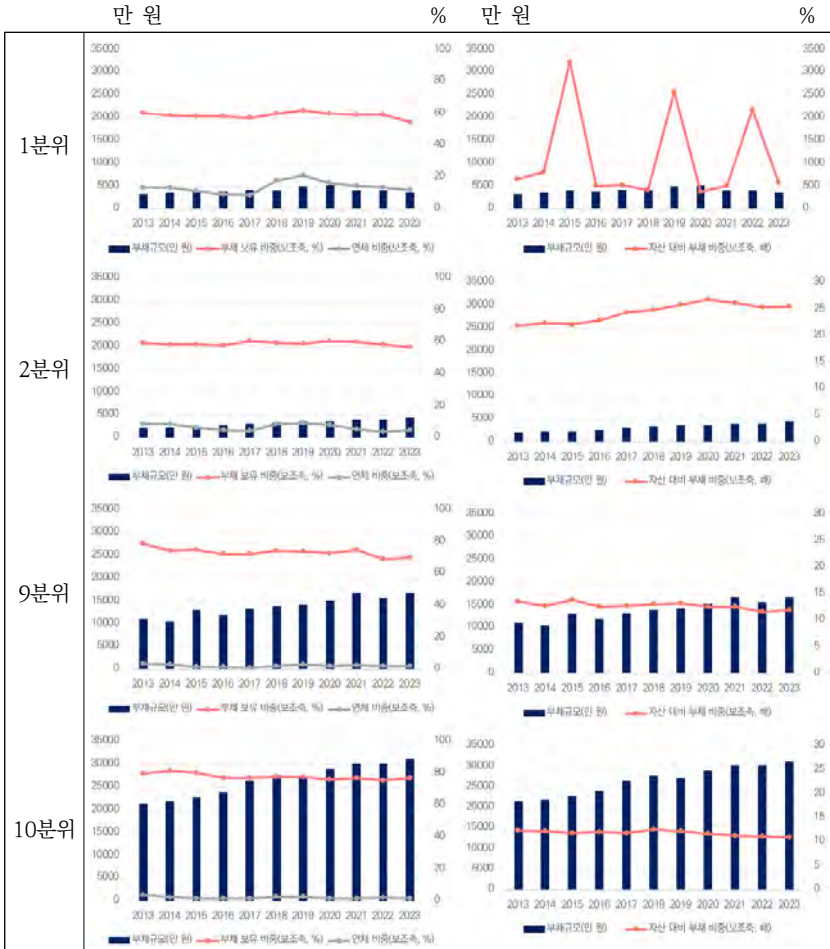
주 1: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2: 소득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고, 자산 빈곤은 OECD(2024)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총자산이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 대비 3/12(3개월), 6/12(6개월), 12/12(12개월)의 곱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중첩 빈곤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9] 순자산 분위별 부채 규모 및 연체 여부, 자산 대비 부채 비중 변화

(단위: 만 원, %)



주 1: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2: 부채 보유 및 연체 비중은 해당 분위 집단 내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 연체금이 있는 경우의 비중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실제로 순자산 1분위도 금융자산은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그림 4-10]에서처럼 팬데믹을 거치며 금융 자산 보유액이 크게 감소한다. 고자산 집단에서는 꾸준히 보유액이 늘어나는 것과는 상반된 양상이다. 더구나 이들은 부동산 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순자산 1분위와 10분위의 보유 자산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고자산 집단이 집중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3년의 부동산 자산 보유액을 100으로 할 때, 1분위의 2023년 해당 자산 보유액에 거의 변화가 없으나, 순자산 10분위의 해당 자산은 1.8배 가량 늘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자산 집단에서는 부동산 보유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비해, 저자산 집단에서는 부동산 보유액도 변동이 클뿐 아니라, 10년 전보다 하락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저자산 집단에서 부동산 자산을 보유 하더라도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보유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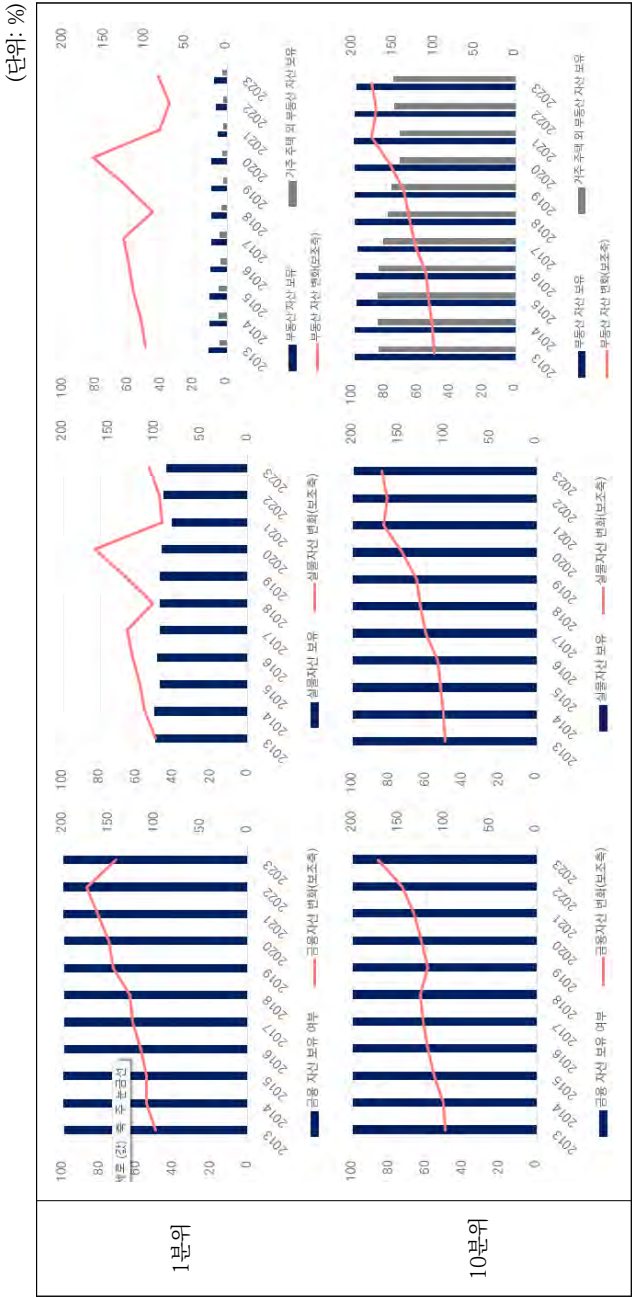
물론 중첩 빈곤 가구는 많은 적든, 대부분 공적 이전 소득이 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의 전 가구에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시기 공적 이전 소득이 없는 가구가 드물다. 코로나 지원금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앞선 2장에서 가처분 소득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개선의 효과가 공적 이전 소득 확대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한 것처럼, 빈곤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 포괄률은 비약적으로 커졌다. 그래서 [그림 4-11]과같이, 2023년 기준 3개월, 6개월 12개월, 어떤 기준에서 정의하든 중첩 빈곤 가구의 90% 이상이 공적 이전 소득을 받았다. 그리고 [그림 4-12]와 같이, 부동산 자산이 없으면서 공적 소득 이전을 받지 않는 가구(회색 막대)가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자산이 없는 가구에 대한 공적 이전의 포괄률 확대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림 4-12]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중첩 빈곤 가구(12개월

기준) 중 여전히 공적 이전 소득이 없고, 부동산 자산이 없는 가구가 약 8%가량 존재한다. 이들은 <표 4-1>, <표 4-2>에서처럼 순자산 규모도 현저하게 낮아, 공적 사회보장의 외부에 있으면서 사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순자산 규모의 표준편차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커 해당 집단 내에서 자산으로 미래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과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위험에 대응 가능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극소수이지만, 부동산 자산이 있지만, 공적 소득 이전은 없는 가구(노란 막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순자산의 규모가 커 대개 자산 빈곤, 그리고 중첩 빈곤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4-1>, <표 4-2>에서 이러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3개월 기준의 중첩 빈곤 가구에서는 포착되지 않는데, 12개월 기준으로는 소수나마 확인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로 확대된 공적 이전 소득의 영향으로 이들 가구도 사라졌다.

다만, 주목할 점은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 빈곤 가구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다른 유동 자산과 소득이 적은 취약 가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 4-1>,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동산이 있는 중첩 빈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중첩 빈곤 가구보다 많으나, 금융 자산은 적은 편이다. 특히, <표 4-2>의 부동산이 있으나 공적 이전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순자산의 평균은 늘었으나 금융 자산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자산 대신 금융 자산으로 대응하였다는 것인데, 평균적인 금융 자산 보유액이 적어서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낮을 수 있다(Arundel & Ronal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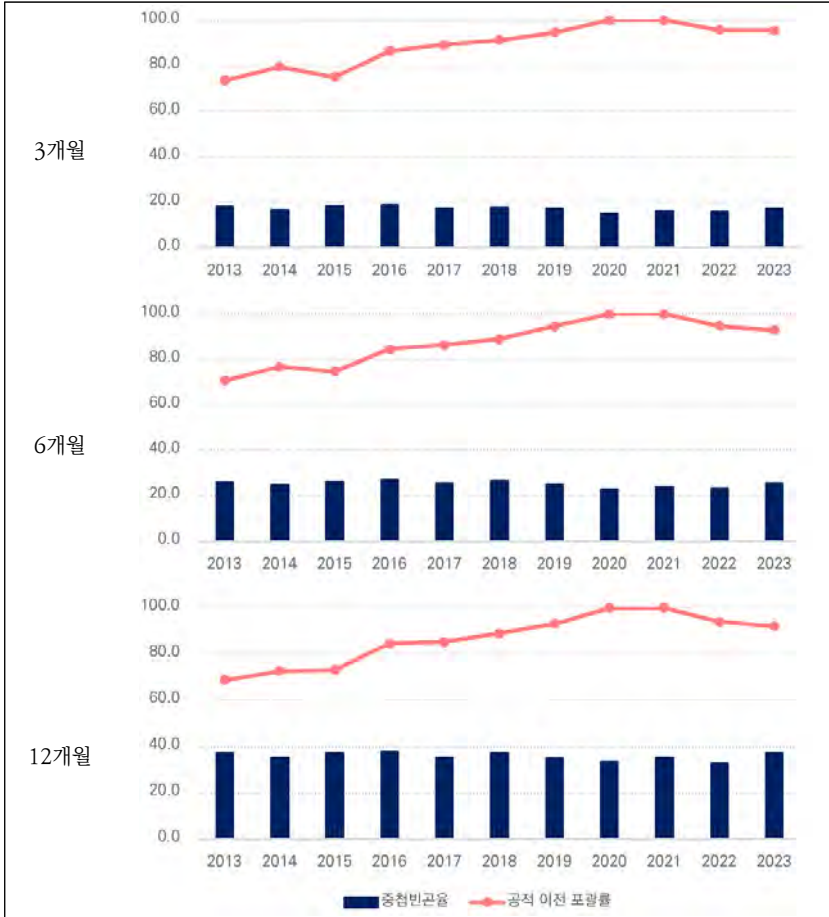
[그림 4-10] 순자산 1분위와 10분위의 자산 보유 양상 및 자산 규모(2013=100) 변화



주 1: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주 2: 자산 보유 여부는 해당 분위 집단 내에서 금융, 실물,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고, 자산 변화는 2013년(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유한 자산 규모를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연도의 자산의 규모를 환산한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센터,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1]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공적 이전 포괄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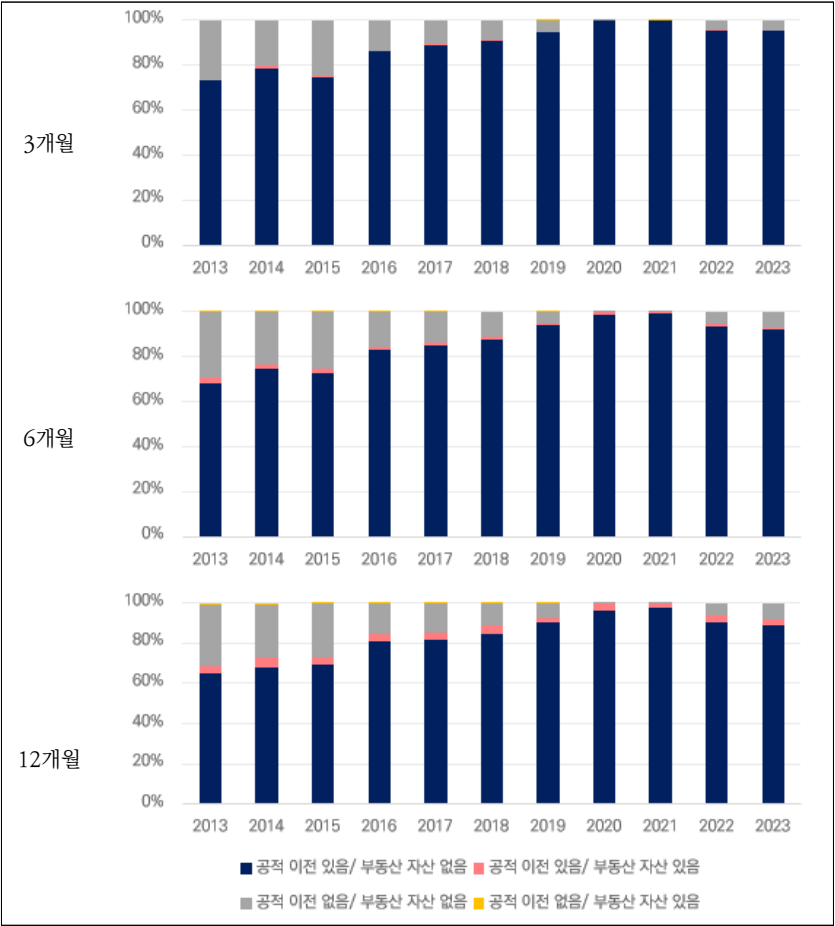
주 1: 중첩 빈곤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급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고, 자산 빈곤은 OECD(2024)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제곱급으로 균등화한 총 자산이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 대비 3/12(3개월), 6/12(6개월), 12/12(12개월)의 곱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 2: 공적 이전 포괄률(coverage)은 중첩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공적 이전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2] 연도별 중첩 빈곤 가구의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 및 공적 이전 포괄률

(단위: %)



주 1: 중첩 빈곤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고, 자산 빈곤은 OECD(2024)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총 자산이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 대비 3/12(3개월), 6/12(6개월), 12/12(12개월)의 곱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2: 공적 이전 포괄률(coverage)은 중첩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공적 이전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1〉 중첩 빈곤 가구(3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단위: 만 원)

공적 이전 없음	부동산 없음				부동산 있음			
	순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013	-1,466	4,677	146	141				
2014	-703	3,181	144	154				
2015	-1,401	4,788	174	162				
2016	-475	1,264	172	161				
2017	-390	1,439	151	132				
2018	-927	2,714	185	151				
2019	-847	2,310	105	99				
2020	320	.	320	.				
2021								
2022	-8,394	16,786	302	264				
2023	-1,118	1,894	218	133				
공적 이전 있음	부동산 없음				부동산 있음			
	순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013	-299	1,791	145	132	252	86	61	37
2014	-205	1,524	142	124	220	120	40	40
2015	-168	1,397	147	128	160	30	51	23
2016	-232	1,518	174	154	139	71	45	31
2017	-213	1,370	177	156	387	166	65	70
2018	-256	1,313	182	156	268	51	151	79
2019	-1,202	6,716	186	150	287	.	127	.
2020	-463	2,183	195	154	419	83	210	194
2021	-549	3,431	193	156	337	27	37	27
2022	-149	1,393	211	159	403	6	165	115
2023	-66	945	209	165	342	-	42	-

주 1: 중첩 빈곤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급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이고, 자산 빈곤은 OECD(2024)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제곱급으로 균등화한 총자산이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 대비 3/12(3개월)의 곱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주 2: 공적 이전은 중첩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공적 이전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2〉 중첩 빈곤 가구(12개월 기준 자산 빈곤)의 자산 보유 현황

(단위: 만 원)

공적 이전 없음	부동산 없음				부동산 있음			
	순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013	-587	3,338	581	516	570	632	484	375
2014	-30	2,327	667	577	788	626	899	712
2015	-633	3,568	595	558	1,054	475	462	436
2016	-66	1,473	564	492	699	176	65	71
2017	-679	2,687	668	519	877	375	139	126
2018	-887	2,774	639	475	1,228	83	31	44
2019	-354	2,800	665	576	325	-	25	-
2020	656	188	692	214				
2021	1,063	650	960	276				
2022	-2,667	10,240	772	551				
2023	-961	10,321	815	518				
공적 이전 있음	부동산 없음				부동산 있음			
	순자산		금융자산		순자산		금융자산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2013	53	1,614	473	485	584	512	133	144
2014	34	1,655	480	478	870	365	104	120
2015	-46	2,063	512	520	830	527	116	155
2016	136	1,618	603	600	459	2,136	286	422
2017	58	1,803	573	556	1,027	608	96	101
2018	-19	1,881	622	611	1,012	752	196	223
2019	-557	5,231	600	591	1,146	391	171	214
2020	41	2,438	668	602	1,304	983	269	349
2021	-337	4,132	688	645	1,582	819	179	247
2022	176	2,068	672	638	1,820	1,022	254	292
2023	370	2,768	748	728	1,732	633	231	230

주 1: 중첩 빈곤은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 빈곤은 상대 빈곤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이고, 자산 빈곤은 OECD(2024)에 따라서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총자산이 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 대비 12/12(12개월)의 곱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한다.

2: 공적 이전은 중첩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 중 공적 이전 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나. 중간 소득 가구: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내 집 마련은 ‘서민’들의 꿈이다. 1장에서도 주택 자산의 보유는 서민과 중산층을 나누는 주요 요인이다. 주택 소유가 어느 정도 먹고살만한 집단의 표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OECD, 2019, p.24; Duvoux, 2025, p.11).

실제로 고자산 집단은 자산 종류를 막론하고 저자산 집단보다 자산의 규모가 크다. 자산 규모가 큰 것과 함께 특징적인 점은 금융 자산보다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표 4-3>과 <표 4-4>를 보면, 우선 순자산 분위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은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물자산은 순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보유 비중도 커지는데, 순자산 1분위에서는 실물 자산 보유자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순자산 1분위 중 부동산 자산 보유자는 10% 내외로 2023년 10년 전보다 보유자 비중이 줄었다. 이에 비해, 고자산가들은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순자산 10분위의 70% 이상은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2023년 10년 전보다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자의 비중은 줄었으나, 코로나19 국면까지 감소하던 보유자 비중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표 4-3〉 순자산 분위별 금융/실물자산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1분위	100	50	100	51	100	48	100	49	100	48	100	48	100	48	100	47	100	41	100	46	100	44
2분위	100	75	100	74	100	74	100	74	100	77	100	74	100	72	100	74	100	76	100	74	100	75
3분위	100	89	100	90	100	89	100	90	100	90	100	91	100	89	100	91	100	88	100	89	100	88
4분위	100	96	100	96	100	96	100	97	100	97	100	97	100	96	100	95	100	96	100	96	100	97
5분위	100	98	100	98	100	98	100	98	100	98	100	97	100	97	100	97	100	96	100	96	100	97
6분위	100	99	100	99	100	100	100	99	100	99	100	99	100	99	100	98	100	99	100	99	100	98
7분위	100	99	100	100	100	100	100	99	100	99	100	99	100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분위	100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9분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분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4〉 순자산 분위별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1분위	11	5	10	5	10	4	9	3	10	3	8
2분위	26	9	27	8	28	7	30	7	28	6	32
3분위	54	16	57	13	60	14	61	15	61	16	63
4분위	72	21	71	20	77	20	79	19	78	21	78
5분위	81	26	85	26	86	25	85	28	83	28	85
6분위	89	33	87	32	89	34	89	32	90	32	90
7분위	92	44	92	41	93	40	94	44	93	42	92
8분위	94	51	94	52	94	51	96	51	97	48	96
9분위	97	68	98	67	97	68	96	64	98	66	97
10분위	99	84	99	85	98	85	98	84	97	81	99

주: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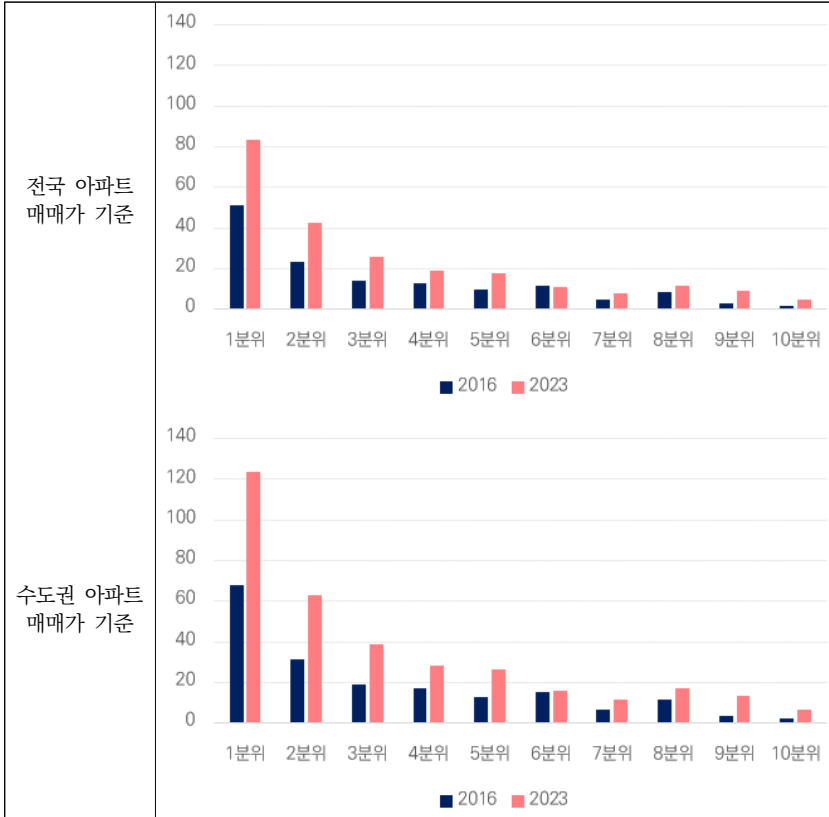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자산 가구는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래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다. [그림 4-13]에서 자산 분위에 따라서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 가능액” 금액을 차용하여, 순자산 분위에 따라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지 산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는 사실상 주택 자산의 보유가 어려워졌다. 순자산 1분위 가구가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2016년에는 약 68년이 필요하였으나, 2023년은 124년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생애 내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주택 자산을 보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Arundel & Ronald, 2021). 이 여실히 드러난다. 저자산 가구 중 주택 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공적 이전에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동 자산이 턱없이 적어 위험 상황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4-13] 순자산 분위별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단위: 년)



주 1: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은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가능액” 개념을 차용하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 금액(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 제외한 금액)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유 금액의 합산 값으로 나눈 값이다.

2: 분위는 순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자산 1분위(저자산)부터 10분위(고자산)의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3: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되는 해 12월(2016년 12월, 2023년 12월)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출처: “(월) 매매가격지수_아파트 [데이터세트]”,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각 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2025.6.5. 검색.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do>)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OECD(2019)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201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중간층이 감소하지도, 이들이 소득 점유율이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황수경, 이창근, 2024, pp.7-9). 그러나 이들도 자산을 축적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간 소득 가구는 물가 상승률보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더 크고 고소득 가구보다도 평균적인 증가율도 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자산의 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증가세도 훨씬 더디다. 고소득자와 달리, 중간 소득자들은 코로나19 시기 자산이 감소하였고, 이는 특히 부동산 자산의 영향 때문이다([그림 4-14] 참고).

중간 소득자들이 부동산 자산을 가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림 4-16]에서처럼, 중간 소득 가구가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2016년 약 5.7년이 걸렸으나,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23년에는 9.7년으로 늘었다. 중간 소득자 이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수도권 아파트 구입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더 크게 늘었다. [그림 4-17]와 [그림 4-18]을 비교해 보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중간 소득 가구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중간 소득자들도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머무르기 어려운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표 4-5〉 중간 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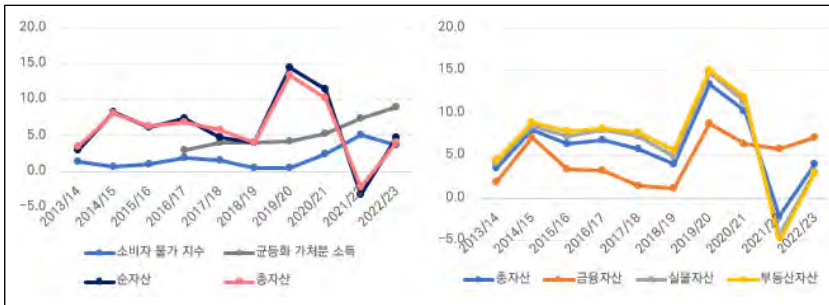
	균등화 가처분 소득	순자산	총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
2013	2,479	29,612	36,561	9,847	26,714	24,276
2014	2,576	30,478	37,845	10,030	27,815	25,350
2015	2,662	32,976	40,904	10,739	30,164	27,625
2016	3,073	35,011	43,487	11,108	32,379	29,792
2017	3,164	37,599	46,480	11,478	35,002	32,246
2018	3,292	39,383	49,175	11,645	37,530	34,731
2019	3,427	40,950	51,142	11,779	39,363	36,697
2020	3,570	46,899	57,956	12,819	45,138	42,223
2021	3,760	52,269	63,869	13,634	50,235	47,224
2022	4,037	50,599	62,482	14,433	48,049	44,800
2023	4,399	52,998	65,011	15,457	49,554	46,129

주: 중간 소득 가구는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균등화 중위 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 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4〕 중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단위: %)



주: OECD(2019)에 따라, 중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 가구이고, 상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200% 이상인 가구이다. 이 그림은 상위 소득자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과 자산을 중간 소득자의 그것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 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6〉 고소득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및 보유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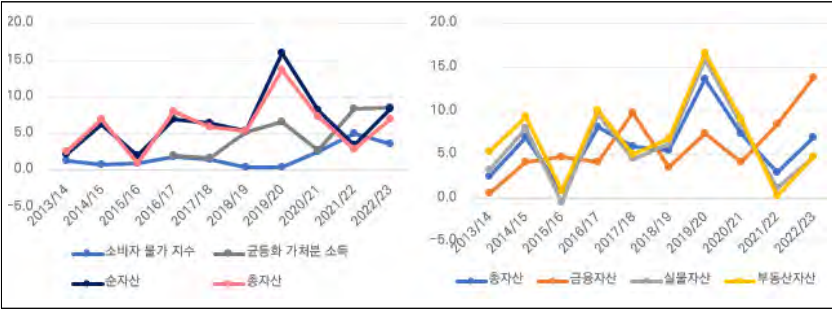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균등화 가처분 소득	순자산	총자산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동산 자산
2013	5,910	76,755	91,852	25,120	66,732	58,993
2014	5,905	78,382	94,144	25,238	68,906	62,138
2015	6,118	83,260	100,737	26,292	74,444	67,966
2016	7,176	84,878	101,626	27,525	74,101	68,506
2017	7,325	90,791	109,879	28,641	81,238	75,429
2018	7,442	96,593	116,318	31,436	84,882	79,164
2019	7,834	101,726	122,687	32,561	90,126	84,540
2020	8,351	117,997	139,467	34,956	104,511	98,626
2021	8,581	127,656	149,740	36,391	113,349	107,571
2022	9,297	131,967	154,134	39,473	114,661	107,744
2023	10,102	142,977	164,926	44,893	120,033	112,749

주: 중간 소득 가구는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균등화 중위 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 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5〕 상위 소득자의 소득 및 자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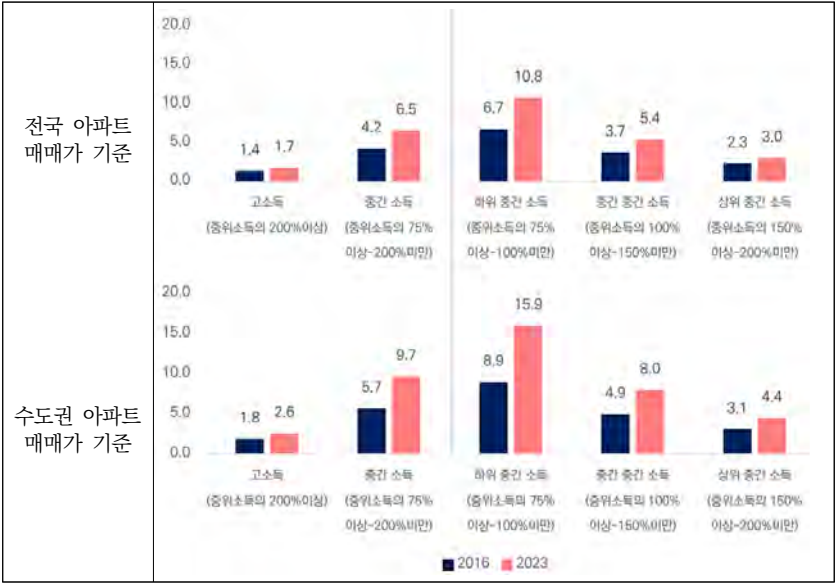
(단위: %)



주: OECD(2019)에 따라, 상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200% 이상 가구이고, 상위 소득자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의 200% 이상인 가구이다. 이 그림은 상위 소득자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과 자산을 중간 소득자의 그것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6]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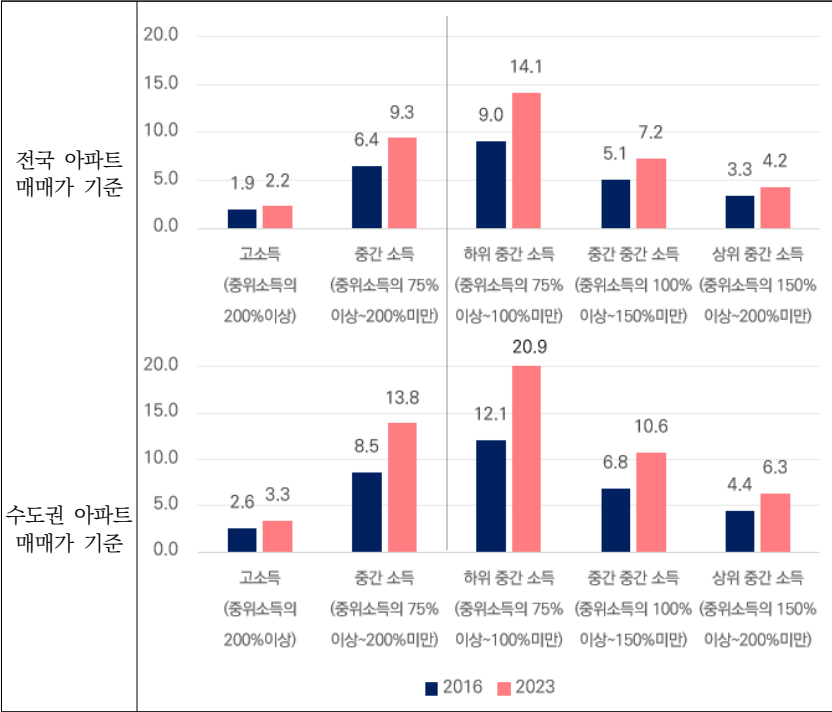
주 1: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은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가능액” 개념을 차용하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 금액(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 제외한 금액)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유 금액의 합산 값으로 나눈 값이다.

2: 중간 소득 가구는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균등화 중위 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중간 소득 가구를 세분화하여, 하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상 ~100% 미만, 중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 상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3: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되는 해 12월(2016년 12월, 2023년 12월)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출처: “(월) 매매가격지수_아파트 [데이터세트]”,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각 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2025.6.5. 검색.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do>)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7] 부동산 자산이 없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단위: 년)



주 1: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은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가능액” 개념을 차용하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 금액(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 제외한 금액)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유 금액의 합산 값으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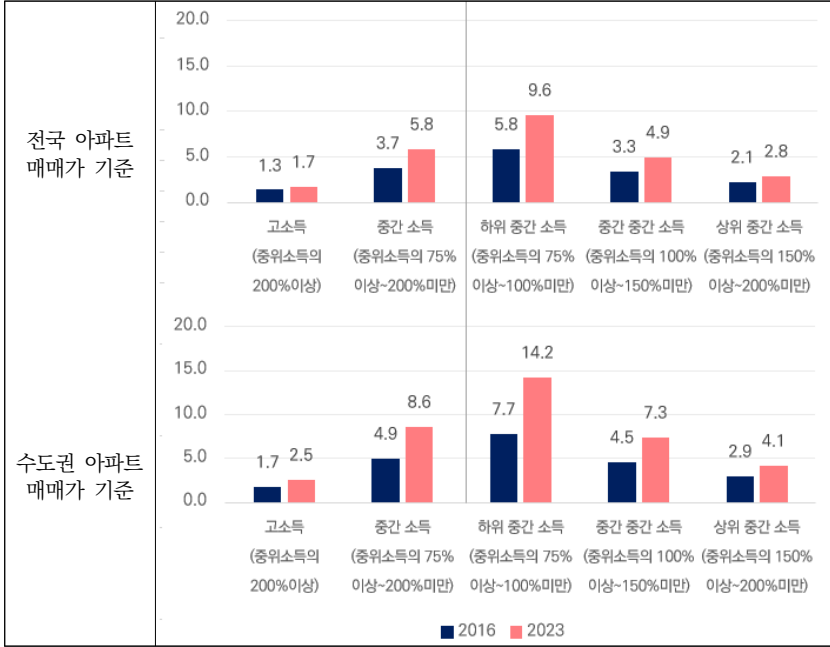
2: 중간 소득 가구는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균등화 중위 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중간 소득 가구를 세분화하여, 하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상 ~100% 미만, 중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 상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3: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되는 해 12월(2016년 12월, 2023년 12월)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출처: “(월) 매매가격지수_아파트 [데이터세트]”,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각 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2025.6.5. 검색.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do>)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터치, (각 연도). 국가데이터터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그림 4-18] 부동산 자산이 있는 중간 소득 가구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

(단위: 년)



- 주 1: 아파트 구입을 위한 예상 기간은 이한진(2024, pp.21-22)의 “저축가능액” 개념을 차용하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축 금액(금융자산에서 전월세보증금 제외한 금액)과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유 금액의 합산 값으로 나눈 값이다.
- 주 2: 중간 소득 가구는 OECD(2019)에 따라,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중간 소득 가구를 세분화하여, 하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75% 이상 ~100% 미만, 중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이상 ~150% 미만, 상위 중간 소득 가구는 가구의 균등화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 이상 200% 미만인 가구이다.
- 주 3: 아파트 매매가격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되는 해 12월(2016년 12월, 2023년 12월)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다.

출처: “(월) 매매가격지수_아파트 [데이터세트]”,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각 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2025.6.5. 검색.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do>)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세트]”,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MDIS 원격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에 가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3. 자가 보유와 주관적 계층감

소득 수준은 가계의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표 4-7>, <표 4-8>의 모형 1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흥미로운 점은 객관적 소득에 따른 분위보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분명하다는 점이다. <표 4-7>, <표 4-8>의 모형 3에서 실제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분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표 4-7>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균등화 가처분 소득 (백만 원)		0.105*** (0.031)		0.052*** (0.029)		
주관적 계층 인식			0.377*** (0.006)	0.369*** (0.007)		
소속된 소득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0.198*** (0.068)	
소속된 소득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35** (0.000)	
주관적 계층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0.282*** (0.123)
주관적 계층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05 (0.000)
모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례 수		8957	8917	8917	8957	8955
수정된 설명계수		0.063	0.18	0.183	0.079	0.127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에서 5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만족한다는 것이다. 이때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3: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8〉 미래 가계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 결정 요인(표준화 회귀계수)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균등화 가치분 소득 (백만 원)		0.024* (0.032)		0.011 (0.032)		
주관적 계층 인식			0.079*** (0.006)	0.077*** (0.006)		
소속된 소득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0.017 (0.057)	
소속된 소득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09 (0.000)	
주관적 계층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0.009 (0.127)
주관적 계층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29** (0.000)
모형 특성	인구사회학 적 특성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례 수		8016	7989	7989	8016	8014
수정된 설명계수		0.083	0.09	0.09	0.082	0.083

* $p<0.05$, ** $p<0.01$, *** $p<0.001$

주 1: 가계의 미래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은 향후 10년 이내의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로, 1에서 5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는 것이다. 이때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3: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계층감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표 4-9〉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간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최상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중간으로 수렴하는 평균으로의 회귀가 뚜렷하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난다(Evans & Kelley, 2004; OECD, 2019, p.20). 그러나 평균적인 경향 이면에 소득 수준과 자산 보유 양상에 따라서 외부 위험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주관적 계층감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9〉 연도별 주관적 계층 분포

(단위: %)

연도	최하	2	3	4	중간-	중간+	7	8	9	최상
2010	5.6	4.6	14.6	16.3	31.4	15.3	7.9	3.5	0.5	0.3
2011	3.6	3.9	13.1	17.4	28.8	18.9	10.2	3.0	0.6	0.6
2012	4.6	4.8	14.8	19.8	27.9	16.4	8.4	2.6	0.5	0.3
2013	3.8	3.2	12.7	16.6	34.7	15.6	9.4	3.3	0.1	0.6
2014	2.8	3.9	12.3	18.2	29.7	17.2	11.0	3.7	0.7	0.6
2016	3.1	3.7	10.4	15.0	29.5	19.8	13.6	3.6	0.5	0.8
2018	2.7	2.5	11.2	15.4	27.7	19.2	15.0	5.0	1.3	0.1
2021	1.1	2.2	8.4	15.3	27.4	24.2	16.7	4.0	0.3	0.4
2023	0.7	2.4	6.6	17.2	26.1	23.1	18.6	5.0	0.3	0.1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10〉과 같이,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하위 분위에서는 실제 객관적 소득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을 높게, 상위 분위에서는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으로, 실제 소득 분포보다 주관적 계층감은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다. 한편, 〈표 4-11〉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 계층의 내부에서 부동산 자산 보유(자가 여부)에 따라서 주관적 계층 인식이 달리 나타난다. 소득 하위 분위는 주관적 계층감이 실제보다 높은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집이 있으면 실제보다 계층 인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중산층 이상에서는 자가가 아닌 경우 객관적 소득 계층보다 주관적 계층감이 낮다. 자산이 없을 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실제보다 덜 여유롭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보유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 4-10〉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단위: 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8	2021	2023
소득 1분위	4.6	4.6	3.9	4.3	4.0	4.9	5.0	4.7	4.4
소득 2분위	4.1	3.8	4.0	4.1	4.1	3.9	4.6	4.5	4.9
소득 3분위	3.6	4.3	3.9	4.1	4.3	4.1	4.1	4.6	5.1
소득 4분위	4.2	4.3	4.1	4.5	4.9	4.5	4.4	5.0	5.3
소득 5분위	4.5	4.7	4.4	4.8	4.7	4.6	4.9	5.3	5.1
소득 6분위	4.6	4.7	4.5	5.0	5.0	4.9	4.9	5.4	5.4
소득 7분위	4.8	5.0	4.5	5.1	5.1	5.3	4.9	5.5	5.4
소득 8분위	4.8	5.2	5.1	4.9	5.0	5.5	5.6	5.6	5.5
소득 9분위	5.2	5.5	5.1	5.3	5.5	5.6	5.8	6.0	6.0
소득 10분위	5.8	6.0	5.7	6.0	6.2	6.3	5.9	6.0	6.0

주: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11〉 연도별 소득 분위별 평균 주관적 계층감

(단위: 점)

구분	2018			2021			2023		
	전체	자가아님	자가보유	전체	자가아님	자가보유	전체	자가아님	자가보유
소득 1분위	-4.0	-3.2	-4.3	-3.7	-3.2	-4.0	-3.4	-3.0	-3.6
소득 2분위	-2.6	-2.9	-2.5	-2.5	-1.8	-2.8	-2.9	-2.3	-3.2
소득 3분위	-1.1	-0.5	-1.4	-1.6	-1.4	-1.7	-2.1	-1.7	-2.3
소득 4분위	-0.4	-0.3	-0.4	-1.0	-0.6	-1.3	-1.3	-1.2	-1.3
소득 5분위	0.1	0.5	-0.2	-0.3	-0.2	-0.4	-0.1	0.1	-0.2
소득 6분위	1.1	1.2	0.9	0.6	1.4	0.4	0.6	0.7	0.6
소득 7분위	2.1	2.7	1.8	1.5	2.1	1.3	1.6	1.9	1.5
소득 8분위	2.4	2.5	2.4	2.4	2.3	2.4	2.5	3.1	2.3
소득 9분위	3.2	3.3	3.2	3.0	3.4	2.9	3.0	3.1	2.9
소득 10분위	4.1	4.2	4.0	4.0	4.7	3.9	4.0	4.3	3.8

주: 객관적 소득 계층 각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객관적 소득 계층 분위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을 뺀 값의 평균이다.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 소득 계층 분위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을 뺀 값이 음의 값이면, 주관적 계층 인식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이고, 양수이면 객관적 소득 계층이 더 높은 것이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한편, 주지하다시피 실제 소득 수준은 분명 주관적 계층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하위 분위에서는 주관적 계층 인식이 유의미하게 낮게, 상위 분위에서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실제 소득 수준이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한다(〈표 4-12〉의 모형 2). 소득 분포의 영향과 관련하여, 소속된 객관적 소득 분위 내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주관적 계층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아지는 해당 표(〈표 4-12〉) 모형 1, 모형 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소속된 집단 내의 소득 변동계수가 커지는 것은 주관적 계층 인식을 낮춘다.

한편, 〈표 4-12〉의 모형 4와 모형 5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소득 분위 보다 소속되었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의 소득 분포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객관적 소득 수준에 대한 분포 정보를 통제하고도, 주관적 계층 분위 내 평균과 변동계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종속변수가 주관적 계층 인식이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 내의 소득 수준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은 당연할 수 있으나, 평균을 통제한 분산의 값(변동계수)의 영향도 유의미할 뿐 아니라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실제 생활 수준 판단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자산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표 4-13〉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보다 주택 자산의 보유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소득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소득이 주관적 계층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는 것과 달리, 주택의 소유는 계속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표 4-13〉의 모형 5, 6).

〈표 4-12〉 소득 분포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균등화 가처분 소득 (백만 원)	0.696*** (0.046)	1.609*** (0.118)			
균등화 가처분 소득* 연도 선형 추세		-0.171*** (0.019)			
소속된 소득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2.355*** (0.092)		0.442*** (0.064)
소속된 소득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03*** (0.000)		-0.002*** (0.000)
주관적 계층 분위 평균 소득(백만 원)				14.22*** (0.122)	14.04*** (0.127)
주관적 계층 분위 소득 변동계수				-0.007*** (0.000)	-0.006*** (0.000)
모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례 수	10229	10229	10229	10228	10228
수정된 설명계수	0.116	0.137	0.154	0.619	0.621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2: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일리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4-13〉 자가 보유가 주관적 계층 인식에 미치는 영향(2018년 ~ 2023년)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균등화 가처분 소득 (백만 원)	0.403** (0.151)	0.422 (0.259)			0.461 (0.283)	0.296 (0.200)
균등화 가처분 소득* 코로나19이후		-0.041 (0.306)				0.886 (0.508)
주택 점유(기준: 자가 아님) 자가			0.558*** (0.065)	0.537*** (0.124)	0.575*** (0.108)	0.383* (0.153)
자가 보유 *코로나19이후				0.016 (0.141)		0.394 (0.213)
균등화 가처분 소득 *자가 보유					-0.128 (0.317)	0.587 (0.365)
균등화 가처분 소득 *자가 보유 *코로나19이후						-1.501* (0.607)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사례 수		3435	3435	3423	3423	3423	3423
수정된 설명계수		0.093	0.096	0.107	0.11	0.117	0.123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통제하였다.
 2: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위험에서 부동산 자산의 보유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최고소득 집단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계층감은 높아진 것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들은 계층감이 하락하였다. 다만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이들 집단 내부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소득 분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간 소득 분위에서는 집이 있을 때 평균적인 주관적 계층감이 높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집이 있는 경우 주관적 계층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표 4-14>와 같이, 최하 소득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코로나19 이후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감이 하락하였다. 이들과는 형편이 나은 소득 2분위부터는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계층감이 상향되었다는 점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특히, 소득 최하위 분위와 2분위 간에 집이 있는 저소득층에서의 상반된 영향이 흥미롭다. 최하위 분위에서는 집이 있는 경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주관적 계층감이 하락하는 데 반해, 소득 2분위에서는 집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 계층감이 하락하였으나, 집이 있는 경우는 높아졌다. 당장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의 부족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빈곤 가구와 같은 최하위 소득 집단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됨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표 4-14〉 코로나19 전후 소득 분위별 주관적 계층감의 한계효과 차이

소득 분위	구분	코로나 이후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소득 1분위	전체	-0.407	0.003
	자가 아님	-0.058	0.840
	자가 보유	-0.534	0.007
소득 2분위	전체	0.412	0.015
	자가 아님	-0.843	0.049
	자가 보유	0.469	0.043
소득 3분위	전체	0.696	0.000
	자가 아님	1.012	0.005
	자가 보유	0.509	0.051
소득 4분위	전체	0.699	0.000
	자가 아님	0.527	0.085
	자가 보유	0.871	0.000
소득 5분위	전체	0.479	0.000
	자가 아님	0.564	0.046
	자가 보유	0.128	0.531
소득 6분위	전체	0.465	0.001
	자가 아님	0.185	0.504
	자가 보유	0.477	0.028
소득 7분위	전체	0.332	0.015
	자가 아님	0.750	0.012
	자가 보유	0.366	0.049
소득 8분위	전체	0.038	0.768
	자가 아님	-0.050	0.856
	자가 보유	0.002	0.991
소득 9분위	전체	0.339	0.009
	자가 아님	0.140	0.661
	자가 보유	0.264	0.141
소득 10분위	전체	-0.112	0.402
	자가 아님	-0.284	0.345
	자가 보유	0.155	0.407

주: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한계 효과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로 주관적 계층 인식이 시기(코로나19 이후 2021년, 2023년과 이전 시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이때, 종속변수인 주관적 계층 인식은 주관적 계층에 대한 1(최하층)에서 10(최상층)까지의 10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주관적 계층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객관적 소득 계층 분위에서 주관적 계층 인식을 뺀 값이 음의 값이면, 주관적 계층 인식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이고, 양수이면 객관적 소득 계층이 더 높은 것이다.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김지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5-04-22,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제4절 소결

자산 불평등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분배 인식의 정체와 강한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황선재(2023)의 경제적 불평등 추이 악화와 마찬가지로, 자산은 소득보다 현저하게 불균등한 것은 물론 최근으로 올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자산 불평등과 점차 심화하는 그것의 양상이 소득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자산이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장에서는 Duvoux(2025)의 이론적 틀에 따라, 자산이 미래 경제 전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선 저자산 가구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는 특히, 금융 자산과 관련된다. 금융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지출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득 상실에 대응할 만한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빚을 져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여, 총자산과 달리, 순자산이 감소하였다. 게다가 최근 들어, 순자산 하위 분위에서 소득 빈곤은 감소하는 데 비해, 6개월 내지는 1년을 버틸 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산 빈곤층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없는 저자산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보장 제도가 확충되어 공공 사회보장에 대부분이 포괄된다. 이에 비해, 주택의 높은 가격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는 저자산 집단에서는 자산 빈곤 가구나 소득 빈곤과의 중첩 빈곤 가구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일부는 자산과 소득의 중첩 빈곤에 처해있는데, 부동산이 있어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경우가 적다. 문제는 이들 가구가 부동산 자산 이외의 유동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역량을 평가할 때 반영할 자산의 종류와 환산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 수급 자격 부여 시 자산을 반영하는 것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겠다.

주관적 계층 의식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중산층 이상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주관적 계층감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고자산 집단은 자산 종류를 막론하고 자산의 규모가 큰데, 이들 집단의 자산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이다. 저자산 집단은 10년 전보다 부동산 보유액이 감소한 데 비해, 고자산 집단에서는 부동산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순자산 분위가 높은 집단은 거주 주택 이외에 추가적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다수여서, 부동산 자산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재산 소득이 많다.

중산층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만(OECD, 2019),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소득 측면에서 중산층의 규모나 이들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황수경, 이창근, 2024). 하지만 사회보장 제도 확충의 혜택이 중산층에게 많이 주어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평균적인 수준에서 중산층이 누리는 공적 사회보장의 혜택이 제한적이다. 결국 중산층은 미래 위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산 축적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경제 자원으로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인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할 때,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자산 분위에서 아파트 구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현격하여 순자산 1분위 가구는 개인의 생애 내에서 구입이 요원해졌다. 자산 1분위뿐 아니라, 부동산이 없는 중산층 역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적 자원의 대부분을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절대 다수의 박탈감이 더욱 커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불만족은 물론,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악화했다고 느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저소득층을 넘어서 중산층을 포괄하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제5장

체감 분배를 좌우하는 요인은? : 분배 인식 결정 요인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5장 체감 분배를 좌우하는 요인은? : 분배 인식 결정 요인

제1절 분석 개요

이 장에서는 2장부터 4장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배 인식이 정제되어 있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1] 5장 연구 내용 및 분석 방법 요약

연구 가설	연구 내용	분석 방법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가?	불충분한 소득, 과도한 식비 부담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처분 소득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 분석 -분석 자료: 한국복지패널 2차, 5차, 8차, 11차, 14차, 17차, 21차 -분석 방법: ① 패널 회귀분석(고정 효과, 확률효과) ② 다변량 분산분석(한계효과 추정)
특정 집단의 임금 상승이 정제되었는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였는가?	노동 소득, 노동 소득 증가율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였는가? 자산 불평등 심화로 미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는가?	자산 규모 및 보유 자산 종류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는 소득 이외에 다른 경제적 요인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소득 분배 개선과 괴리된 분배 인식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식비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지출 부담(2장), 임금 증가의 상대적 격차(3장), 자산 규모와 부동산 자산 보유 격차(4장)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가처분 소득의 그것과 비교하여, 분배 인식 정제를 설명

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둔 소득 보장 제도 이외에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제2절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2007년),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14차(2019년), 17차(2022년)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 분석을 통해, 앞서 분배 인식 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한 소비와 임금,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한국복지패널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에서도 분배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복지패널처럼 비교적 장기적인 시계에서 분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재정패널이 있다. 재정패널은 9차(2016년) 자료부터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을 매년 질문한다. 이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은 복지 인식 부가 조사에서 관련 문항을 질문하여 2차 연도(2009년)부터 3년 마다의 정보가 있다. 인식의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검토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배 인식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 문항과 관련하여서도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 재정패널은 한국복지패널과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과 같은 문항인데, 한국복지패널은 여기에 더해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바, 해당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분배에 대한 판단의

원천이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라고 명시해서 질문하더라도 사람들이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할 때, 다른 경제적 자원과 함께 총체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선재, 2025). 또한, 불평등은 부정적이라는 일종의 가치를 내재한 개념이다. 이 때문에 차이나 격차보다 인식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배 인식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제3절 분석 결과

1. 기준: 소득과 분배 인식의 관계

〈표 5-1〉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저소득층보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견이나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득 집단별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소득자들에 비해서 소득 분위가 낮은 사람들이 소득과 자산이 더 불평등하고, 소득 격차도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표 5-1〉의 확률 효과 모형 결과). 다만, 가처분 소득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의 분포가 불평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에서 분배 인식에 객관적 소득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이와 일정 부분 관련 있을 수 있다. 또한, 소득 분위 내에서도 저소득 및 중하위 중간 소득 집단이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 보장 제도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 한편, 중위소득 이상의 중간층은 고소득자들과 불평등 심도에 대한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하위 중간 소득자들은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불평등을 더 심하게 체감하고 있다. OECD(2019)는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이 중산층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이들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OECD, 2019, p.41, pp.67-68).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 한국은 중산층이 지는 세 부담보다 사회 보장 혜택이 적은 편이다(OECD, 2019, pp.63-64).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 소득자들은 시장 소득 증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공적 이전도 충분하지 않아서,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표 5-1〉 분배 인식 소득 모형

변수		소득/자산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1	균등화 가처분 소득	-0.002 (0.001)	-0.003 (0.002)	-0.001 (0.001)	-0.004*** (0.001)
모형 1-1	기준: 균등화 가처분 소득 10분위				
	1분위	-0.236 (0.136)	0.243*** (0.067)	0.029 (0.077)	0.175*** (0.039)
	2분위	-0.278* (0.118)	0.162** (0.062)	-0.024 (0.070)	0.167*** (0.035)
	3분위	-0.166 (0.108)	0.186*** (0.054)	0.048 (0.061)	0.214*** (0.031)
	4분위	-0.196* (0.097)	0.214*** (0.048)	0.046 (0.055)	0.215*** (0.027)
	5분위	-0.170 (0.089)	0.154*** (0.046)	-0.033 (0.053)	0.122*** (0.026)
	6분위	-0.146 (0.088)	0.164*** (0.045)	-0.034 (0.050)	0.127*** (0.025)
	7분위	-0.068 (0.078)	0.183*** (0.042)	0.003 (0.047)	0.140*** (0.024)
	8분위	-0.171* (0.074)	0.0871* (0.041)	-0.048 (0.048)	0.118*** (0.023)
	9분위	-0.134* (0.068)	0.062 (0.039)	0.019 (0.044)	0.099*** (0.022)

변수		소득/자산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2	기준: 최고 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101 (0.103)	0.195*** (0.047)	-0.036 (0.067)	0.177*** (0.027)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 ~200% 미만)	-0.074 (0.087)	0.0949* (0.042)	-0.061 (0.060)	0.110*** (0.024)
모형 2-1	기준: 최고 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200% 이상)				
	저소득 (균등화 중위소득 75% 미만)	-0.146 (0.107)	0.206*** (0.048)	-0.041 (0.068)	0.187*** (0.027)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75% 이상~100% 미만)	-0.118 (0.098)	0.154** (0.048)	-0.067 (0.065)	0.155*** (0.027)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0.134 (0.091)	0.084 (0.044)	-0.066 (0.063)	0.118*** (0.025)
	중간소득(균등화 중위소득 150% 이상~200% 미만)	-0.031 (0.094)	0.062 (0.048)	-0.057 (0.063)	0.047 (0.028)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속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고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여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2 비교: 지출, 임금, 자산의 영향

가. 지출 부담

이어서, 앞선 2장에서 잔여 소득(생활비 차감 후 소득)과 식비 부담을 중심으로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표 5-2>와 같이, 소비 지출 후 남는 소득이 없는 소득 불충분은 소득 1분위에서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식비 지출이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식비 부담은 전 소득 계층에서 나타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그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표 5-2> 소득 분위별 지출 부담 분포

(단위: %)

소득 분위	불충분한 소득 비중	과도한 식비 지출 비중
소득 1분위	6.1	93.3
소득 2분위	-	93.0
소득 3분위	-	86.6
소득 4분위	-	75.3
소득 5분위	-	63.0
소득 6분위	-	52.9
소득 7분위	-	40.3
소득 8분위	-	25.8
소득 9분위	-	12.2
소득 10분위	-	3.8

주 1: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2. 과도한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3〉은 상기 지출 요인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낀다. 실제로 잔여 소득이 0 미만인 소득 불충분자는 소득 1분위에서만 관찰되어, 앞선 〈표 5-1〉에서 소득 1분위가 다른 집단들보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는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달리 말해, 소득 하위 분위 사람들의 저소득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이들이 사회의 분배 개선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보장 급여 확충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가처분 소득을 추가 투입(〈표 5-3〉의 모형 2)하였을 때, 가처분 소득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으나, 소득이 불충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충분한 소득은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 소득 대비 식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만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및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처분 소득을 투입한 모형 2에서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식비 부담은 강한 정적 효과를 보인다.

소득 집단별로 나누어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5-3〉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소득 증가가 분배 인식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소득 불충분의 영향은 소득 1분위 가구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원인이나, 소득 격차 자체가 심각하다는 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은 아니다. 이에 비해, 식비 지출이 과도한 경우의 영향은 더 넓어, 소득 1분위 저소득층과 하위 중간층을 중심으로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식비 지출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소득 1분위뿐 아니라, 하위, 중위 중간 소득자들에게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식비 부담은 일차적으로 불충분한 소득과 같이, 저소득 가구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여, 이들이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5-2>에서 본 것처럼, 식비 부담이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중간 소득 이상층에서는 대체로 해당 소득 분위 내에서 식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가 불평등이 더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식비가 경상소득의 20% 미만인 가구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표 5-5> 참고). 앞서 2장에서,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소비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소비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승하는 지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표 5-3> 분배 인식 지출 모형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236 (0.358)	0.540* (0.267)	-0.443* (0.222)	-0.218 (0.145)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과도한 식비 지출	0.014 (0.043)	0.159*** (0.025)	0.055* (0.024)	0.114*** (0.013)
모형 1-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297 (0.283)	0.539* (0.238)	-0.457* (0.219)	-0.271 (0.144)
모형 1-2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과도한 식비 지출	0.013 (0.043)	0.157*** (0.025)	0.057* (0.024)	0.115*** (0.013)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2	균등화 가처분 소득	-0.002 (0.002)	-0.001 (0.002)	-0.001 (0.001)	-0.003** (0.001)
	기준: 잔여 소득이 0 이상 불충분한 소득	0.224 (0.359)	0.537* (0.267)	-0.452* (0.224)	-0.236 (0.145)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과도한 식비 지출	0.013 (0.043)	0.158*** (0.025)	0.054* (0.024)	0.109*** (0.013)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속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고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여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4: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5: 과도한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4〉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지출 모형 (확률효과)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 잔여소득 0이상 불충분한 소득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과도한 식비 지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소득 1분위	0.070	(0.040)	1.181***	(0.356)	0.681*	(0.291)
저소득	-0.049	(0.027)	0.221	(0.259)	0.035	(0.050)
하위 중간소득	-0.172**	(0.060)	.	.	0.145**	(0.055)
중위 중간소득	-0.134***	(0.034)	.	.	0.111*	(0.055)
상위 중간소득	-0.180***	(0.042)	.	.	-0.284	(0.196)
고소득	0.001	(0.002)	.	.	-0.091	(0.478)

변수	소득 격차 크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 잔여 소득 00이상 불충분한 소득		기준: 경상소득의 20% 이하 식비 지출 과도한 식비 지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소득 1분위	0.003	(0.020)	-0.291	(0.175)	0.038	(0.141)
저소득	-0.014	(0.014)	-0.276*	(0.135)	0.0846**	(0.026)
하위 중간소득	-0.067*	(0.032)			0.113***	(0.029)
중위 중간소득	-0.041*	(0.019)			0.051	(0.031)
상위 중간소득	-0.071**	(0.024)			-0.066	(0.110)
고소득	-0.002	(0.001)			0.472	(0.261)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로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여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4. 불충분한 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값이 0 미만인 경우를 1로, 0을 초과하는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5. 과도한 식비 지출은 식비 지출이 경상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1로, 20% 이하인 경우를 0으로 산출한 값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중단 표본 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5> 소득 분위별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소득 분위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소득 1분위	-0.235	0.261	0.062	0.585
소득 2분위	-0.130	0.540	0.047	0.679
소득 3분위	-0.188	0.123	0.004	0.946
소득 4분위	0.178	0.035	0.034	0.461
소득 5분위	0.271	0.000	0.183	0.000
소득 6분위	-0.021	0.768	0.121	0.002
소득 7분위	0.164	0.013	0.082	0.020
소득 8분위	0.336	0.000	0.038	0.318
소득 9분위	-0.048	0.613	0.050	0.325
소득 10분위	0.207	0.338	0.239	0.041

주: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한계 효과(각 분위의 과도한 식비 부담 가구와 식비 부담이 20% 미만인 가구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로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중단 표본 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나. 상대적 임금

취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소득 수준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5-6>과 같다.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면, 전반적인 방향은 <표 5-1>의 가처분 소득과 유사하다. 다만, 노동 소득 자체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두 드러지지는 않는다. 노동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 소득이 3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하는 중간 노동 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보다 불평등을 유의미하게 심각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또한, <표 5-7>과 같이, 노동 소득 중간 집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층부에서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불평등 인식이 높은 가운데, 이들 집단에서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의미하게 불평등을 더욱 심하다고 인식한다.

<표 5-6> 분배 인식 임금 모형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1	노동 소득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2* (0.001)
모형 2	기준: 노동 소득 10분위				
	1분위	-0.152 (0.133)	0.095 (0.080)	0.036 (0.077)	0.106* (0.044)
	2분위	-0.233 (0.141)	0.064 (0.087)	0.128 (0.083)	0.188*** (0.050)
	3분위	-0.141 (0.119)	0.215** (0.072)	0.125 (0.069)	0.181*** (0.040)
	4분위	0.043 (0.112)	0.168** (0.063)	0.038 (0.064)	0.159*** (0.038)
	5분위	-0.077 (0.105)	0.231*** (0.068)	-0.002 (0.060)	0.0966** (0.035)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6분위	-0.069 (0.102)	0.135* (0.062)	0.111 (0.059)	0.196*** (0.035)
	7분위	0.012 (0.096)	0.177** (0.058)	-0.022 (0.055)	0.0693* (0.032)
	8분위	-0.074 (0.090)	0.092 (0.056)	0.008 (0.052)	0.0757* (0.031)
	9분위	0.002 (0.078)	0.073 (0.053)	0.013 (0.045)	0.0717* (0.029)

* p<0.05, ** p<0.01, *** p<0.001

주 1: 취업자에 한해 인구조화학적 속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로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여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7〉 노동 소득 분위별 자가 보유 여부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노동 소득 분위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노동 소득 1분위	-0.214	0.098	-0.207	0.005
노동 소득 2분위	-0.093	0.516	-0.069	0.420
노동 소득 3분위	-0.080	0.446	-0.106	0.078
노동 소득 4분위	-0.099	0.317	0.065	0.242
노동 소득 5분위	0.055	0.519	-0.059	0.222
노동 소득 6분위	-0.096	0.253	-0.047	0.325
노동 소득 7분위	-0.167	0.035	0.060	0.183
노동 소득 8분위	0.015	0.839	-0.125	0.003
노동 소득 9분위	-0.126	0.099	-0.005	0.914
노동 소득 10분위	-0.089	0.248	-0.010	0.818

주: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한계 효과(각 분위의 자가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불평등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노동 소득 분위별로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한편, 앞선 3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는 상대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어지는 <표 5-8>에서와 같이, 초기 노동 소득 대비 소득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불평등이 덜 하다고 인식하는 데 기여한다. 실제 노동 소득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더구나, 노동 소득의 증가율은 인구 사회학적 변수 뿐 아니라, 일자리의 여러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유의미하게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인식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다.

〈표 5-8〉 분배 인식 임금 모형(회귀효과)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초기 노동 소득 (개인 패널 내 확인되는 최초 노동 소득)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초기 노동 소득 대비 증가율	-0.003* (0.001)	-0.003* (0.002)	-0.003*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0.001)
노동 소득 (전년도)		-0.001 (0.002)			-0.001 (0.001)	
고용형태(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0.081* (0.038)			-0.063** (0.024)
사업체 규모(기준: 10인 미만)						
10-30인			-0.065 (0.047)			-0.011 (0.027)
30-99인			-0.025 (0.050)			0.055 (0.028)
100-299인			-0.081 (0.057)			0.054 (0.032)
300-499인			-0.052 (0.101)			-0.002 (0.056)
500인 이상			-0.029			-0.009

변수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업(기준: 제조업)			(0.050)			(0.029)
광업, 건설업			-0.016 (0.067)			0.008 (0.037)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017 (0.053)			0.014 (0.029)
도소매업			-0.056 (0.053)			-0.041 (0.029)
기타 서비스업			-0.104* (0.047)			-0.014 (0.026)
그 외			-0.073 (0.069)			-0.083 (0.046)
사례 수	7633	7633	7607	6707	6707	6687

* p<0.05, ** p<0.01, *** p<0.001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중단·표본·종단·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다. 자산 보유

마지막으로 자산 보유 및 보유 규모 역시 분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나열의 노동 소득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확인되었고, 4장의 논의에서도 자산 불평등이 분배 인식 악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표 5-9>와 같이, 자산은 분배 상태를 나쁘게 인식하는 것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불평등이나 소득 격차가 덜하다고 느끼고(<표 5-9>의 모형 1, 2), 금융 자산 보유액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부동산 자산(자가 보유)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및 소득 격차 심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덜 하다고 인식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자산의 영향을 고려하면, 가처분 소득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득”의 격차를 직접 질문할 때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득 격차가 덜하다고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 심도에 대해서는 소득보다 자산의 영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산의 세부 형태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같아서, 소득의 영향은 소득 격차에 대한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사람들이 경제적 형편을 판단하는 데 자산의 영향을 고려한다는 지적(황선재, 2023, 2025)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소득과 자산 종류별 영향은 소득 집단에 따라서 상이하다. 자산 저분위, 저소득 집단에서는 유동 자산의 보유가 분배 상태를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처분 소득이나 금융 자산 보유액이 증가하면,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및 소득 격차의 심도를 덜 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를 대상으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과 달리(〈표 5-9〉의 모형 3), 저소득 집단에서 부동산 자산(자가 보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달리 말해, 자가 보유는 상위 중간소득 이상인 사람들에게서만 분배를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자산,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위험 상황에 대응할, 현금화가 쉬운 유동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미래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가늠하는 데 주요하게 작동하여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장의 논의와 일치한다. 한편, 중상층에서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분배 인식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2〉와 같이, 자가를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덜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표 5-12〉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금융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였느냐에 따라서 상이하다.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경우 자가를 보유한 가구가 충분한 여유 자산이 없을 때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가가 아닌 저소득층은 여유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분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중간 소득자들의 경우, 자가가 아닌 중위 중간소득 이상 가구에서 불평등을 더 심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표 5-9〉 분배 인식 자산 모형

변수		소득/자산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1	균등화 가처분 소득(백만 원)	-0.001 (0.002)	-0.001 (0.002)	-0.001 (0.001)	-0.003*** (0.001)
	순자산	-0.012 (0.005)	-0.019*** (0.003)	0.003 (0.003)	-0.006*** (0.001)
모형 2	균등화 가처분 소득(백만 원)	-0.001 (0.002)	-0.002 (0.002)	-0.003* (0.001)	-0.003** (0.001)

변수		소득/자산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고정효과	확률효과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 3	기준: 순자산 10분위				
	1분위	0.232*** (0.056)	0.208*** (0.040)	0.171*** (0.034)	0.158*** (0.022)
	2분위	0.392 (0.396)	0.393 (0.291)	0.025 (0.200)	0.0378 (0.158)
	3분위	0.163* (0.076)	0.146* (0.064)	0.165*** (0.044)	0.157*** (0.035)
	4분위	0.186** (0.067)	0.149** (0.051)	0.0985* (0.044)	0.0832** (0.029)
	5분위	0.232*** (0.064)	0.192*** (0.047)	0.148*** (0.040)	0.139*** (0.027)
	6분위	0.185** (0.067)	0.180*** (0.046)	0.071 (0.038)	0.063* (0.026)
	7분위	0.092 (0.067)	0.0795 (0.046)	0.078* (0.039)	0.072** (0.026)
	8분위	0.098 (0.065)	0.099* (0.045)	0.085* (0.039)	0.0836** (0.025)
	9분위	0.042 (0.061)	0.016 (0.044)	0.067 (0.038)	0.059* (0.025)
	균등화 가처분 소득(백만 원)	-0.001 (0.002)	-0.001 (0.002)	-0.001 (0.001)	-0.003*** (0.001)
모형 3	금융 자산 보유액	-0.002 (0.001)	-0.004*** (0.001)	0.001 (0.001)	-0.001** (0.000)
	부동산 자산 보유 여부(자가 여부)	0.043 (0.056)	-0.087*** (0.024)	-0.073* (0.031)	-0.061*** (0.013)

* $p < 0.05$, ** $p < 0.01$, *** $p < 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속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고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10〉 소득 집단별 분배 인식 자산 모형 (확률효과)

구분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금융자산 보유액		자가 보유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 1분위	-0.047*	(0.019)	-0.014	(0.010)	-0.089	(0.054)
소득 1분위	0.079*	(0.036)	-0.009*	(0.004)	0.023	(0.083)
저소득	-0.083***	(0.023)	-0.007**	(0.002)	-0.042	(0.037)
하위 중간소득	-0.214***	(0.051)	-0.006	(0.004)	-0.077	(0.056)
중위 중간소득	-0.108***	(0.029)	-0.009***	(0.002)	0.027	(0.048)
상위 중간소득	-0.178***	(0.035)	0.000	(0.001)	-0.180*	(0.076)
고소득	-0.000	(0.002)	-0.003*	(0.002)	-0.295**	(0.106)
구분	소득 격차 크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금융자산 보유액		자가 보유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자산1분위	-0.040***	(0.010)	0.012*	(0.005)	-0.055	(0.029)
소득 1분위	0.026	(0.019)	-0.000	(0.002)	-0.072	(0.046)
저소득	-0.083***	(0.023)	-0.007**	(0.002)	-0.042	(0.037)
하위 중간소득	-0.214***	(0.051)	-0.006	(0.004)	-0.077	(0.056)
중위 중간소득	-0.108***	(0.029)	-0.009***	(0.002)	0.027	(0.048)
상위 중간소득	-0.178***	(0.035)	0.000	(0.001)	-0.180*	(0.076)
고소득	-0.000	(0.002)	-0.003*	(0.002)	-0.295**	(0.106)

* p<0.05, ** p<0.01, *** p<0.001

주 1: 인구사회학적 속성, 연령, 성별, 교육 수준, 혼인 상태, 취업 여부, 건강 상태를 통제한 결과이다.

2: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는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7점 척도의 1점, 매우 평등하다 7점 매우 불평등하다로 구성된 값이다. 즉,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3: 소득 격차 크다는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질문의 동의 정도로 원래 응답 값을 역코딩하여 1점 매우 반대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여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11〉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가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자가 보유의 영향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저소득	-0.095	0.016	-0.114	0.000
중간층	-0.081	0.004	-0.023	0.153
하위 중간소득	-0.143	0.004	-0.085	0.003
중위 중간소득	0.012	0.765	0.033	0.151
상위 중간소득	-0.185	0.004	-0.035	0.351

182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자가 보유의 영향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고소득	-0.249	0.002	-0.185	0.000

주: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한계 효과(각 분위의 자가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의 불평등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로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표 5-12〉 소득 집단별 자가 보유 여부에 따른 여유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차이

전체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저소득	0.050	0.511	-0.032	0.442
중간층	0.147	0.000	0.084	0.000
하위 중간소득	-0.059	0.372	-0.013	0.708
중위 중간소득	0.132	0.008	0.054	0.045
상위 중간소득	0.303	0.000	0.167	0.000
고소득	0.059	0.569	0.079	0.197
자가 보유 가구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저소득	0.197	0.046	-0.091	0.096
중간층	0.164	0.000	0.111	0.000
하위 중간소득	-0.013	0.876	0.062	0.170
중위 중간소득	0.109	0.072	0.041	0.226
상위 중간소득	0.313	0.000	0.204	0.000
고소득	-0.021	0.873	0.129	0.094
자가 미보유 가구	소득/자산이 불평등하다		소득 격차 크다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한계효과 차이	유의확률
저소득	-0.166	0.164	0.034	0.593
중간층	0.109	0.056	0.027	0.386
하위 중간소득	-0.150	0.177	-0.150	0.011
중위 중간소득	0.174	0.042	0.077	0.090
상위 중간소득	0.262	0.019	0.069	0.287
고소득	0.088	0.594	-0.055	0.582

* $p<0.05$, ** $p<0.01$, *** $p<0.001$

주 1: 여유자산은 저축 가능액이 연도별 중위소득의 절반 이상인지로 산출하였다. 이때의 저축 가능액은 4장과 같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한 값에 금융 자산을 더한 값이다.

2: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한계 효과(각 집단의 여유 자산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절반 이상인 가구의 불평등 인식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로 과도한 식비 지출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2007(2차), 2010(5차), 2013(8차), 2016(11차), 2019(14차), 2021(17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개인 종단 표본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앞선, 2장부터 4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배 인식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 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인식은 정체되어 있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소득 이외의 다른 경제적 요인, 소비와 임금, 자산이 분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무엇보다 자산의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가처분 소득의 영향은 다른 경제적 요인, 지출이나 노동 소득, 자산의 영향보다 강력하지는 않아 보인다. 다른 경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가처분 소득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 수준 그 자체보다는 소득의 충분성이 분배 인식 결정에 중요하게 작동한다. 소비 지출 후 잔여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처분 소득 기준 소득 하위 1분위에 집중되는데,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다고 느낀다. 또한, 소득 대비 식료품비가 과도한 경우에도 경제적 자원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이 역시, 소득 하위 분위에서 두드러진 경향이다. 식료품 지출의 품목과 수준이 소득 계층에 무관하게 유사한 양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식료품비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저소득층이 분배 개선을 느끼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산과 관련해서도, 저소득층은 위험 상황에 대응할 만한 유동 자산이 없을 때 분배 인식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자가를 보유할 때,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이 덜 하다고 느끼는데, 자산 최하위 분위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가에 거주하더라도 여유 자산이 없으면 오히려 분배 구조를 더욱 불평등하다고 인식한다.

소비 관련한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식료품비를 비롯한 지출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분배 인식이 중간 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하위 중간 소득자 집단에서 역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황수경, 이창근, 2024, pp.7-9), 시장 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이들에게는 공적 소득 이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분배 개선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노동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을 때, 중간층은 고소득자보다 불평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층에서는 앞선 3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는 노동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지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노동 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격차도 완화됨에 따라, 임금 상승이 정체된 집단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 소득이 중간층인 집단에서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들 집단에서 임금 상승이 더딘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 소득의 수준보다 노동 소득의 증가 정도가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자가 보유가 분배 인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자가에 거주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덜 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또한,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불평등을 심각하다고 느낀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면, 중산층이어도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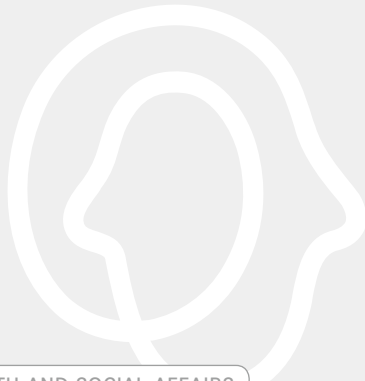
요약하면,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있지만, 생활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더딘 노동 소득 증가, 자산 불평등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 소득 확충은 소득 하위 집단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분배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OECD(2019)에서도 지적되듯이, 중산층에 대한 소득 이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 중간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빈곤층에 집중된 공적 이전 소득 보장 체계로는 분배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기대만큼 노동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가로막힌 자산 축적의 가능성,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택 자산의 보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분배 인식 개선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원인을 탐색한다.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비 부담 증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 하락, 자산 불평등의 심화를 연구 가설로 하여, 각 요인이 체감 분배 정체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찾고, 분배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분배 인식이 악화되는 원인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에서의 함의와 서민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한 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과도한 생활비 부담과 상대적 임금 상승의 정체, 자산 불평등 심화가 그것이다. 분석 결과는 [그림 6-1]과 같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배 구조는 더욱 평등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사람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비와 임금(노동 소득), 자산 등의 다른 경제적 자원의 분배 현실은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각 가설의 검증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무엇보다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인으로 보인다. 생활비 부담과 임금 상승 역시 부분적으로 분배 인식의 정체/악화와 관련되나, 이들도 자산 보유를 경유하여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6-1] 연구 결과 요약

연구 가설	가설 검증 결과	
	실태 및 추이 분석(2장~4장)	영향 분석(5장)
(생활비 부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가?	부분적 영향 -저소득층의 높은 지출 부담으로 소비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높음. -식료품비 이외의 다른 필수 지출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완만하게 완화됨. -소비 평준화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소비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 수준 상향으로 특히 식비를 비롯한 필수적인 소비를 위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늘어났을 가능성 있음.	
	-불충분한 소득 및 과도한 식비 부담이 저소득층과 하위 중간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침.	
(상대적 임금 격차) 특정 집단의 임금 상승이 정체되었는가?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였는가?	부분적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임금 불평등도 완화되는 추세임. -임금 격차 축소의 이면에 임금 상승률이 정체된 집단 존재: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었던 집단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하여 분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 불안정 노동의 확대 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분배 인식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비정규직 여부는 여전히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함. -임금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 임금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중간 노동 소득자들 중 자가 미보유자의 불평등 인식이 높음. -노동 소득 자체보다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높은 것이 사회가 더 평등하다는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였는가? 자산 불평등 심화로 미래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는가?	강한 관련성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의 대응력(금융자산 보유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저자산 가구는 코로나 19국면에서 순자산 크게 감소함. -소득 빈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의 중첩 빈곤 가구의 규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첩 빈곤 가구 중 자가 보유 가구는 공적 이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음. -자가 보유가 중간소득가구의 주관적 계층감을 견인하는데, 점차 자가에 거주하지 않는 중간소득가구의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자산 보유 및 규모 반영시 자산이 분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강건하나, 가처분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저자산 가구는 금융자산 보유액, 중산층 이상에서는 주택 자산 보유가 분배 인식과 강한 관련을 가짐.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항목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비와 관련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한 2010년대 들어서 지출 측면에서의 불평등 역시 대체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면 불평등이 증가한다. 특히, 필수재인 식료품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과 같은 소비 지출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은 소득 하위 분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층에서 식비 부담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일정 부분 체감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식료품 소비의 평준화로, 소득 계층에 따른 지출 수준 차이가 근소하기 때문이다. 신선 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할 때, 식료품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주 소득 원천인 임금의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 불평등 자체가 체감 분배를 낮추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과 같이, 2008년~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임금 불평등 역시 다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시장 이중화, 고용 불안정 심화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물론,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여전히 있지만, 추세적으로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로 분배 인식이 나빠지는 추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적 임금 상승에 주목하였다. 임금 격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분배 인식의 측면과 관련해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임금 격차 축소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정 집단에서의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하락했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졸 이상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임금 상승률이 낮고, 남성, 500인 이상 사업장, 10년 이상 근로 경력을 가진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상대적 임금 지위의 하락 폭이 컸다. 여전히 해당 집단의 특성이 임금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여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종전보다 자신의 형편이 나빠졌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수도권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의 증가율이 더 커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어지는 자산 불평등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경제적 자원의 분배 양상과 달리, 자산 불평등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져,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자산을 적게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대부분 금융 자산으로 구성되는 데, 규모 면에서 그것이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빚을 내 대응하여 저자산 집단의 순자산이 감소하였고, 최근 들어 자산 빈곤층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저자산 집단은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고자산 집단은 부동산 자산, 특히 거주 주택 이외의 추가적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 소득자들도 자산을 보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경제적 자원의 대부분을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절대 다수의 박탈감이 더욱 커졌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지정한 세 가지 요인은 분배 인식의 정체 혹은 악화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지출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이 분배 인식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의 평탄화로 소득 계층에 따른 소비 수준의 차이가 근소해진 가운데, 저소득층은 식료품비를 비롯한 가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공적 이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은 가구의 경제적 형편이 분배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 소득이 적은 하위 중간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나 생활비가 중간 소득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상대적 지위 하락의 가능성이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다. 절대적인 노동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불안정 고용의 속성을 대리하는 고용 형태를 통제 하더라도 노동 소득의 증가율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이 정체된 집단에서 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한, 고소득층과 비교해 노동 소득의 영향은 중간층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동 소득이 많은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중산층의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노동 소득으로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반적인 사회 분배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결되어 자산 분석에서 자가 보유 여부가 중상층의 분배 인식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된다. 자가에 거주할수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덜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만한 여유 자산을 보유하였을 때 불평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보장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적 이전 소득이 적은 중산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분배 개선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저소득,

저자산 가구에 부동산 보유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부동산 보유 때문에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여유 자산 부족으로 위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경제적 자원이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발간된 이후, 불평등 심화의 주요인으로 주목받아 온 자산이 주관적 불평등 역시 좌우한다.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 기제 역시,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되었다(리사 앳킨스, 멀린다 쿠퍼, 마르티즌 코닝스, 2021). 다만, 자산 가격 상승이 소득 하락과 동반된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는 여전히 중산층에서의 소득 하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및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 자산에 대한 의존성은 더 분명한 것 같다. 노동 소득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높은 사회였던 만큼, 자산 보유의 집중과 주택 자산 보유에 따른 자산 격차, 낮아지는 자산 보유 가능성이 그 어느 사회보다도 정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산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소득 분배 지표와 주관적 분배 인식 간의 큰 괴리(Bavetta, Li Donni, & Marino, 2019)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다.

제2절 정책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을 크게 두 집단, 저소득/저자산 집단과 중간 소득자 집단(중산층)으로 나누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래의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정책 제언 요약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저소득/ 저자산 집단	가계 경제 유동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조 현금 급여 상향, 급여 수준 현실화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 지원 제도 확충 -재산 환산을 통한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개편 -필수 재화 소비 지원 바우처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중산층 포함)
중간 소득자 집단	자산 축적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공급 확대(공공 임대 확대)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 국가 보증 저리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 주택 대출시 필요한 계약금 및 대출금 상환에 재정 지원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신용 지원 제도 마련 -취약 근로자 대상 공공 사회보장 확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고용과의 연계성 강화: 거주를 요건으로 조세로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의 개편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먼저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가계 경제의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몇 가지 정책 수단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필수적인 재화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자산층에 대해서는 공적 이전 소득을 확충하여 지출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상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일례로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고

그에 맞춰 생계 급여액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현금 지원 정책은 소득 하위 분위의 유동성 위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김영일, 2020). 긴급 복지 제도와 같이 단기적인 위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 보전 기제의 확충도 중요하겠다.

또한,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재화 소비에 대한 각종 바우처 제도, 농식품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출 부담이 큰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다만, 현금이나 비용 보전 형태의 바우처의 지원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달리 말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양을 소비하기 위해, 지원된 현금이나 바우처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국제 정세 변동, 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촉발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압력을 최근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가파르게 물품이 상승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생활에 필수적인 교육이나 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생긴다. 따라서 최근 비약적으로 공공성이 확대된 보육 서비스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지출 부담이 큰 가구의 안정적인 가계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하위 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인적 자본 축적에도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OECD, 2019, pp.149-150).

나아가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환산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 볼 시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의 경제적 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재산을 환산해 소득에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재산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와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되면서 주거 점유 형태에 따른 형평성 저해의 문제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정은희 외, 2018).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정은희 외, 2018, p.171). 주택 자산을 보유로 사회보장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포괄되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한 저소득 집단의 낮은 유동성 문제를 감안할 때,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중산층 이상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포괄성 확대 및 자산 축적 지원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자산 축적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주택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OECD, 2019, pp.146-148).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을 통제하려면, 적어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빈 집이 문제시 되기도 하는 등, 주택의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있고,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지역에 수요가 밀집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수요가 밀집된 지역의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유용한 정책으로 지적된다(OECD, 2019, pp.146-148). 임대 주택의 공급 확충은 주거비 부담의 완화와 더불어 주택 자산 가격 상승 통제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확충과 더불어, 실 거주용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수가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자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자산 가격이 계속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에서처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채를 많이 진 사람들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실 거주가 전제된 첫 주택 보유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겠다.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여 저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거나(에스토니아의 주택 담보 대출 보증), 이자 보조금을 지원(핀란드의 ASP 저축 대출 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위해 필요한 계약금 및 대출금 상환에 재정을 지원(폴란드의 "젊은이를 위한 주택")하는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OECD, 2019, p.148).

이와 함께 사회보장 제도의 포괄성을 더 넓히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지출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간 소득자 중에서도 확인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공적 사회보장 혜택은 미흡하다(OECD, 2019, pp.63-64). 하위 중간 소득 집단부터 점진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중산층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채를 저 일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이 자칫 장기적인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중산층을 포괄한 단기 금융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산 취약 계층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지원보다 신용 지원의 방식이 유동성 위험을 더 크게 낮출 수 있다(김영일, 2020).

이어서, 중산층의 번영을 위해 OECD(2019)에서 제안한 정책 꾸러미가 우리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제시한 사회보장 제도의 포괄성 확대의 일환으로 사회보장 제도 수급 요건에서 고용과의 연계성을 완화

하는 것이다(OECD, 2019, pp.142-144).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까지를 포괄하는 많은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이 주 기반이다. 고용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제도들로, 이는 근로 기간이 자격 요건이나 급여 수준을 좌우한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급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술 변화로 중간 소득 근로자의 실직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고용 연계성이 강한 사회보장 제도는 중간 소득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차적으로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 기반의 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고용주들은 기업 자체적인 복지를 줄이거나, 관대한 복지를 제공하면서도 일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다(고혜진, 전지현, 손동영, 2024).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보장에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혜진, 전지현, 손동영, 2024). 이에 고혜진 외(2024)는 적어도 공공 복지 영역에서는 취약 근로자들도 사회적 위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 맥락에서 OECD(2019)의 제안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고용 이력이 아니라,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직하다.



- 강석훈, 현진권. (2003).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 정책학회보, 12(4), 201-224.
- 고용노동부. (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원시 자료 [데이터세트, 코드북], 고용노동부.
- 고혜진, 전지현, 손동영. (2024). 기업 특성별 복지 제공 양상 및 복지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데이터처(2025.4.22.), 주택 매매가격 지수(아파트)[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8.1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81>
- 국가데이터처 (2024.12.9.)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ZTITLE&itm_id=&lang_mode=ko
- 국가데이터처. (2024. 12. 26.) 지니계수 [데이터세트]. 지표누리 국가발전지표 2025. 2. 10.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idxCd=4225>.
- 국가데이터처. (2025.4.22.), 주택 매매가격 지수(아파트)[데이터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8.10.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181>
- 국가데이터처. (2025.11.12.), 성별경제활동인구 총괄.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

ZTITLE&itm_id=&lang_mode=ko

국가데이터처. (2025.11.1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국가통계포털. 2025.11.19.,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list_id=B14&obj_var_id=&seqNo=&query=%EB%B9%84%EA%B2%BD%EC%A0%9C%ED%99%9C%EB%8F%99%EC%9D%B8%EA%B5%AC&tblId=DT_1DA7145S&vw_cd=MT_ZTITLE&language=kor&orgId=101&conn_path=MT_ZTITLE&itm_id=&lang_mode=ko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표.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데이터 세트]. MDIS 원격
접근서비스. DOI 번호: 10.23333/RN.50150137.V1.3,
10.23333/RN.50150129.V2.2, 10.23333/RN.50150130.V2.1,
10.23333/RN.50150134.V1.1, 10.23333/PN.50150144.V1.3,
10.23333/PN.50150143.V1.3, 10.23333/PN.50150141.V2.2

국가데이터처.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세트]. 국가통계포털. 2025.
7.23.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E_1_00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HDALF05%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53Bsessionid%253DBFrIhg7wGNhHdzc2ZUKExjY1IAuKFHmBxoF8sK0M.esvwas3_S31%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김교성. (2003).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득원 구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1996-2002. 한국사회복지학, 55, 181-204.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75-114.

-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7(1), 39-61.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30(3), 77-102.
- 김대일. (2015). 소득 및 소비의 불평등과 상호 연계. 노동경제논집, 38(2), 23-58.
- 김도균, 양종민. (2023). 자산경제와 정책태도: 성별·연령집단별·노동시장지위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태도 연구. 경제와사회, 139, 191-231.
- 김동훈, 하상웅. (2020).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신뢰: 주관적 계층 상승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28(1), 49-85.
- 김명희. (2024). 가장 평범한 아픔. 이글루.
- 김상봉, 김시연, 홍종혁. (2023). 금융불평등에 대한 실증 연구. 신용카드리뷰, 17(1), 35-101.
- 김영미, 한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분해, 1998~ 2005: 소득불평등 분해, 1998~ 2005. 한국사회학, 41(5), 35-63.
- 김영일. (2020).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 279호(2020-04).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6658에서 2025년 10월 29일 내려받음.
- 김영준. (2022). 언론 보도 내용의 감성이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시장경제연구, 51(1), 71-102.
- 김용철, 조영호, 신정섭. (2018).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인의 계급의식: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계층인식이 계급의식에 미치는 영향. OUGHTOPIA, 33(1), 99-134.
- 김유선. (2024). [이슈페이퍼 2024-03]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2012~2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주현. (2022).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허구, 지배 그리고 평등—. 법철학연구, 25(1), 27-52.

- 김지범 (2025-04-22.).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23 [누적자료] [데이터 세트].
성균관대학교 서버이리서치센터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https://doi.org/10.22687/KOSSDA-A1-CUM-0062-V3>.
- 김지훈, 강욱모. (2021). < 세대간 연구> 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궤적과 요인분해: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32(1), 39-59.
- 김진아. (2025.02.09.). 물가 오를 일만 남았다는데...고용난에 소득은 제자리
[엄동설한 내수경기②].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7_0003056946에서 2025년 2월 12일 확인.
- 김항기, 권혁용. (2017). 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1(1), 261-285.
- 김현중, 임종호, 이혜영, 이상호. (2019). 온라인 뉴스 기사를 활용한 경제심리
보조지수 개발. 한국은행. <https://dl.bok.or.kr/pyxis-api/1/digital-files/25e14ce1-566d-4fe7-8c41-00cda79fc192>.
- 남상섭. (2005). 1990년대 후반기 소득분배 변화요인 분석. 경제연구, 23(3),
27-53.
- 남찬섭, 김수정, 송유진, 장세훈, 최영준. (2013). 서민(庶民)의 집합적 의미의
시대적 변화에 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39, 44-82.
- 농촌진흥청. (각 연도), 농식품 소비정보 DB 원자료, [미발간 데이터], 농촌진흥청.
- 리사 앳킨스, 멀린다 쿠퍼, 마르티즌 코닝스(2021). 김현정 (역) 이 모든 것은 자산
에서 시작되었다 : 자산의 격차는 어떻게 개인의 삶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었는가. 사이.
- 문병곤. (2018.01.26.). 가상화폐 광풍, 중고생·2030 “일해서 뭘해”,
<https://www.hyundaenews.com/29259>에서 2025년 8월 1일 확인.
- 박기묵. (2015). 언론의 공공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 과정과 사례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4(3), 29-60.
- 박재수, 이재수. (2021). 부동산 감성지수의 주택가격 예측 유용성: 뉴스기사와
방송뉴스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국토계획, 56(4), 99-111.

- 박재현. (2025.01.30.). 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8001200002?input=1195>에서 2025년 2월 12일 확인.
- 버트런드 러셀, (2005). 이순희 (역), 행복의 정복. 사회평론.
- 손병돈. (2000). 외환위기 전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상황과 복지, 7, 171-193.
- 손승우. (2023). 한국시장에서 뉴스 사진에 담긴 부정적 심리와 주식 수익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신민정, 정남구. (2025.09.16.). 소비자물가 30년새 2배 오를 때, 오징어·사과 5배 뛰었다. 한겨레신문 1-2면.
- 안국신. (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경제발전연구. 1 : 53 ~76.
- 양종민. (2022). 사적 자산축적 수준은 복지인식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험 기능, 재분배, 증세에 대한 태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2(2), 65-84.
- 양종민, 김도균. (2022). 가계자산과 복지태도: 자가소유와 자산규모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6(3), 43-80.
- 여유진. (2021).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1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명숙, 남은영. (2023).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 국정관리연구, 18(2), 1-29.
- 이강진, 최성환, 김민경. (2022).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지역경기지수 개발 연구. 전북연구원.
- 이병희, 황덕순, 홍민기, 오상봉, 전병유, 이상현. (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 신희주, 김창환. (2020). 한국 사회 가구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연구 성과와 과제. 경제와사회, 127, 60-94.
- 이성재, 이우진. (2017). 샤플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

- 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57-109.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 이원진, 김현경, 함선유, 하은솔. (2021). 한국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원진, 정해식, 전지현. (2019).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 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79-109.
- 이충환. (2015). 빈곤 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373-401.
- 이한진. (2024).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 순자산 5분위 재무·자산 유형별 변화를 중심으로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위킹페이퍼, 13, 1-27.
- 이현주. (2017).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김진, John Hudson, Stefan Kühner, 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금 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2019).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 소득의 의미.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8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경, 김진욱. (2001). 한국의 소득분배와 빈곤: 1992-1998년. 연세사회복지연구. 6(7), 212-243.
- 임성빈, (2021.05.25.). '20대 '코인 광풍' 이유 있었네...순자산, 20대만 쪼그라 들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6066>.에 서 2025년 8월 1일 확인.
- 전병유. (201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건복지포럼, 270, 43-55.
- 정세정, 이다미, 신영규, 김지원, 한수진, 김영미, 김수완, 조영민. (2024).

-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희, 강신욱, 김태완, 정해식, 임완섭, 오욱찬, 김근혜. (2018).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준호, 전병유. (2016). 다중격차지수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동향과 전망, 45-80.
- 정준호, 전병유. (2020).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 분석」. 정해식 외.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3』(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9~174쪽.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돈문. (2023). 평등과 공정에 대한 시민의식. 제1차 발표회 불평등 사회, 국민 인식 조사결과 자료집. 노회찬재단·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조두연, 황보현. (2023). 머신러닝을 이용한 설비투자 예측 및 분석: 뉴스심리 지수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업연구 (JIET), 7(2), 93-123.
- 조정인. (2014).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 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정보연구, 17(2), 173-196.
- 클라이브 해밀턴, 마이라 해밀턴. (2025). 유강은(역). 특권계급론. 오월의 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7). 한국복지패널 2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복지패널 5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복지패널 11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한국복지패널 14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2). 한국복지패널 17차 웨이브 [데이터세트, 설문지, 코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
-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각 월). (월) 매매가격지수_아파트 [데이터세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2025.6.5. 검색. (<https://www.reb.or.kr/r-one/portal/stat/easyStatPage.do>)와
- 한국언론진흥재단. (n.a.) 서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하는 기사 검색 결과, 빅카인즈. 2025. 5.14. 검색,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 한덕희, 강현주. (2023). 경제심리가 부동산 직·간접투자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도시금융연구, 8(1), 19-31.
- 한정연. (2025.09.15.). 불평등은 어떻게 극우-극좌 폭력시위의 공통분모 됐나. 더스coop.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303>에서 2025년 9월 29일 확인.
- 황선재. (2023). 경제적 불평등 인식 추이 및 원인 분석, 2016~2020. 한국사회학, 57(3), 1-32.
- 황선재. (2025). 한국 사회 주관적 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집.
- 황수경, 이창근. (2024).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 Aalbers, M. B. (2008). The Financialization of Home and the Mortgage Market Crisis. *Competition & Change*, 12(2), 148-166.
- Aalbers, M. B. (2016). The financialization of home and the mortgage market crisis. I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pp. 40-63). Routledge.

- Alderson, A. S., & Katz-Gerro, T. (2016). Compared to whom? Inequality, social comparison,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95(1), 25-54.
- Arundel, R., & Ronald, R. (2021). The false promise of homeownership: Homeowner societies in an era of declining access and rising inequality. *Urban Studies*, 58(6), 1120-1140.
- Bavetta, S., Li Donni, P., & Marino, M. (201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5(2), 264-292.
- Bavetta, S., Li Donni, P., & Marino, M. (2019).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perceived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5(2), 264-292.
- Bottero, W.(2020). *A Sense of Inequality*, London and New York: ROMAN & LITTLEFILED.
- Boyce, C. J., Brown, G. D., & Moore, S. C. (2010). Money and happiness: Rank of income, not income, affects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21(4), 471-475.
- Brooks, C., & Manza, J. (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The journal of politics*, 68(4), 816-827.
- Choi, G. (2019). Revisiting the redistribution hypothesis with perceived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8, 220-244.
- Clark, A. E., & Oswald, A. J. (1996). Satisfaction and comparison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3), 359-381.
- Clark, A. E., & Senik, C. (2010). Who compares to whom? The anatomy of income comparisons in Europe. *The Economic Journal*, 120(544), 573-594.
- Cohen Raviv, O., & Lewin-Epstein, N. (2021). Homeownership regimes

- and class inequality among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62(5), 404-434.
- Cramer, C. (2003). Does inequality cause conflict?.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the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 15(4), 397-412.
- Davies, J. B., & Shorrocks, A. F. (2000). The distribution of wealth.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1, 605-675.
- Du, H., & King, R. B. (2022). What predicts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The roles of actual inequality, system justification, and fairness consider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1), 19-36.
- Duru-Bellat, M., & Tenret, E. (2012). Who's for meritocracy?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tions in the faith.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56(2), 223-247.
- Duvoux, N. (2025). *Class and Time-Based Subjective Inequa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Evans, M. D., & Kelley, J. (2004). Subjective social location: Data from 21 n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3-38.
- Forrest, R., & Hirayama, Y. (2015). The financialisation of the social project: Embedded liberalism, neoliberalism and home ownership. *Urban studies*, 52(2), 233-244.
- Garcia-Castro, J. D., Garcia-Sanchez, E., Willis, G. B., Castillo, J. C., & Rodriguez-Bailon, R. (2022).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measur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objectiv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preferences. *Social Psychology*, 53(5), 277-291. <https://doi.org/10.1027/1864-9335/a000498>
- Gimpelson, V., & Treisman, D. (2018). Misperceiving inequality.

- Economics & Politics, 30(1), 27-54.
- Hauser, O. P., & Norton, M. I. (2017). (Mis) perceptions of inequality.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8, 21-25.
- Hauret, L., & Williams, D. R. (2019). Relative income and pay satisfaction: further evidence on the role of the reference grou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1), 307-329.
- Haerpfer, C., Inglehart, R.,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ds.). (2022).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6.0.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VSA Secretariat. doi:10.14281/18241.24
- Headey, B. W., Muffels, R. J., & Wagner, G. G. (2010). Long-running German panel survey shows that personal and economic choices, not just genes, matter for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 of the United States (PNAS)*, 107, 17922-17926
- Hirschman, A. O., & Rothschild, M. (1973).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a mathematical appendix.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544-566.
- Hwang, S. J. (2024). Subjective inequality in South Korea: Perception, belief, and discontent.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89, 100875.
- Hyman, H. H. (1942). The psychology of status. *Archives of Psychology (Columbia University)*, 269, 94.
- Jachimowicz, J. M., Davidai, S., Goya-Tocchetto, D., Szaszi, B., Day, M. V., Tepper, S. J. Phillips, L.T., Mirza, M. U., Ordabayeva, N.,

- & Hauser, O. P. (2023). Inequality in researchers' minds: Four guiding questions for study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7(5), 1534-1561.
- Janmaat, J. G. (2013). Subjective inequality: A review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on people's views about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Archives Europeennes de Sociologie*, 54(3), 357-389.
- Kim, H., & Lee, Y. (2018). Socioeconomic status, perceived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attitudes toward redistribu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55(3), 300-312.
- Knell, M., & Stix, H. (2020). Perceptions of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 101927.
- Kanbur, R. (2007). Poverty and Inequality: Concepts and Trends. In *Poverty and Conflict: The Inequality Link* (pp. 1-3).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http://www.jstor.org/stable/re-srep09599.5>
- Kuhn, A. (2019). The subversive nature of inequality: Subjective inequality perceptions and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9, 331-344.
- Kurz, K. & Blossfeld, H-P. (2004). Home ownership and social inequa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Stan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D., & Perri, F. (2006).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and theory. *Review of Economic Studies*, 73, 163-193.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 Melli, G., & Azzollini, L. (2025). Where I stand and what I stand for:

- Subjective status, class, and redistribution. *Social Science Research*, 130, 103210.
- Meyer, B. D., & Sullivan, J. X. (2023).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60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1(2), 247-284.
- Mijs, J. J. (2021). The paradox of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and belief in meritocracy go hand in hand. *Socio-Economic Review*, 19(1), 7-35.
- Muffels, R., Dingemans, E., & Skugor, D. (2012). Money does not buy much happiness - But what have income inequality, modernization and personal values got to do with it? (Reflect Working Paper Series, 12/001, p. 32). Tilburg: Tilburg University.
- Newman, B. J., Shah, S., & Lauterbach, E. (2018). Who sees an hourglass? Assessing citizens' perception of local economic inequality. *Research & Politics*, 5(3), 2053168018793974.
-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89afed1-en>
- OECD (2021), *Does Inequality Matter?: How People Perceive Economic Disparities and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023ed40-en>, p.49.
- OECD (2024),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 March 2024*.
- OECD(2025.6.16.). Income inequality [데이터세트],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2025. 7. 1.검색..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income-inequality.html>
- OECD. (n.a). *TERMS OF REFERENCE OECD PROJECT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S* .

- Oesch, D., & Vigna, N. (2023). Subjective social class has a bad name, but predicts life chances well.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83, 100759.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data/datasets/income-and-wealth-distribution-databases/idd-tor-2012-onwards.pdf>
- Parkhomenko, A. (2022). Homeownership,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 *Homeownership, Polarization, and Inequality*: Parkhomenko, Andrii. [SI]: SSRN.
- Pettigrew, T. F. (1967). Social evaluation theory: Convergences and applications.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Phillips, L. T., Tepper, S. J., Goya-Tocchetto, D., Davidai, S., Ordabayeva, N., Mirza, M. U., Szaszi, B., Day, M. V., Hauser, O. P. & Jachimowicz, J. M. (2025). Inequality in People’s Minds: An Integrative Psychological Framework of Perceptions of Economic Inequ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888683251352048.
- Roberts, C. (2022). Wealth Inequality in the UK. In *The Media and Inequality* (pp. 29-41). Routledge.
- Shibutani, T. (1955). Reference groups as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0(6), 562-569.
- Stewart, F. (2000). Crisis prevention: Tackling horizontal inequalities. *Oxford development studies*, 28(3), 245-262.
- Tejero-Peregrina, L., Willis, G., Sánchez-Rodríguez, Á., & Rodríguez-Bailón, R. (2025). From Perceived Economic Inequality to Support for Redistribution: The Role of Meritocracy Percep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Psychology*, 38(1).

- Trump, K.-S. (2018). Income inequality influences perceptions of legitimate inc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8, 929-952. <https://doi.org/10.1017/S0007123416000326>
- Trump, K. S. (2023). Income inequality is unrelated to perceived inequal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104(2), 180-188.
- Western, B., Bloome, D., Sosnaud, B., & Tach, L. (2012). Economic insecurity and social stratifi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8(1), 341-359.
- Willis, G. B., García-Sánchez, E., Sánchez-Rodríguez, Á., García-Castro, J. D., & Rodríguez-Bailón, R. (2022). The psychosocial effects of economic inequality depend on its perception. *Nature Reviews Psychology*, 1(5), 301-309.
- Whyte, M. K. (2011). Myth of the Social Volcano:: Popular Responses to Rising Inequality in China.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60* (pp. 273-290). Brill.
- Xu, P. and Garand J. C. (2010) Economic context and Americans' perceptions of income inequality. *Social Science Quarterly*, 91(5): 1220-1241



[부록 1] 연구 가설 도출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이유 및 방법

1. 서민과 중산층을 주제로 언론을 분석하는 이유

이 연구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언론 담론 분석을 통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가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서민과 중산층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득의 객관적 분배 상태가 보여주지 못하는 분배의 흐름을 포착하는 하나의 방법은 주관적 차원을 조명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계층 인식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서민과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주관적 계층 인식을 응축하는 용어로, 이를 둘러싼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분배 인식과 관련되는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용어를 둘러싼 담론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배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분배 인식 정체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서민은 벼슬이나 특권이 없는 보통의 사람(ordinary people)을 뜻하는 말로 사전적으로 중산층은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the social class whose members are neither very rich nor very poor)¹⁴⁾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사용될 때 중산층은

14) 위 정의가 사전적으로 유사하게 지적되나, 각 사전의 정의에서는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재산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재산의 소유 정도가 중간 정도인 사람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을 중산층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영어권에서는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해당 범주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먹고살 걱정은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황수경, 이창근, 2024, p.3). 서민은 중산층보다 경제적 자원을 덜 가진 사람, (경제적) 취약 집단을 호명하는 용어로 이해된다(남찬섭 외, 2013). 서민은 중산층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남찬섭 외, 2013).

특히, 남찬섭 외(2013)는¹⁵⁾ 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1990년대 이래 증가하면서 2000년대 들어 급증했는데, 이는 “분배 구조의 악화 내지 양극화”와 연관된다고 지적한다(남찬섭 외, 2013). 직접적으로 서민 기사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서민에 대한 호명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했다(남찬섭 외, 2013, pp. 57-58). 따라서 서민을 둘러싼 담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분배가 어떻게, 어떤 문제와 주로 연결되어 이해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더구나 소득 하위 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을 심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점(Chambers et al., 2014; Newman, Shah, & Lauterbach, 2018; Xu & Garand, 2010)에서 짐작해 볼 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면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느끼질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중산층과 구별되는 서민을 둘러싼 담론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분배가 악화되었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론의 담론을 분석하는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언론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론은 여전히

있다. 예컨대,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잘 교육받은 의사 혹은 변호사(<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middle-class>)를,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전문직과 사업가(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middle-class_1?q=middle+class)를 포함한다.

15) 서민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용어, 대중이나 평민, 민중, 양세민, 중산층, 중간계급 등을 다룬 신문 기사와 대통령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신문 기사는 창간된 지 오래되었으면서 기사 접근성이 높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두 신문 및 대통령 연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창구이다. 특히, 언론은 공적 담론의 장으로 사회 문제를 규정하고 정책화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미디어에서 다뤄지지 않는 사회 문제들은 공공 의제화되지 못하고 대개 사장되기 때문이다(박기묵, 2015). 분배와 관련해서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담론의 장에서 부와 관련된 언급이 확대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바 있다(Peters et al., 2022).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언론의 보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일정 부분의 편향을 내재하더라도) 대중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박기묵, 2015).

또한, 언론 기사가 사람들의 경제 관련 심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데 이미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대 초부터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에 대한 언론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뉴스심리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경제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보조 지수로 온라인 경제 뉴스 기사에서의 경제 보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김현중, 임종호, 이혜영, 이상호, 2019). 이는 경기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유사한 방식으로 뉴스 기사에서 나타난 심리를 바탕으로 소비나 투자 활동 등을 예측하는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다(박재수, 이재수, 2021; 김영준, 2022; 이강진, 최성환, 김민경, 2022; 손승우, 2023; 조두연, 황보현, 2023; 한덕희, 강현주, 2023). 이처럼 사람들의 경제 관련 주관적 판단을 살펴보는 데 언론을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최근에는 신문 기사와 같은 기성 매체보다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사용이 더 빈번하고, 의견을 더 적극

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서민이나 중산층과 관련해 표출하는 언어들을 분석하는 것이 실제 사람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분배의 개선 추이와 인식의 변화가 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출발한 이 연구의 맥락에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신문 매체 정보가 적합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KINDS)¹⁶⁾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에서의 답론은 시계열적으로 사회 현상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가늠자가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산층을 핵심어로 확보한 주요 일간지의 답론을 분석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분배 악화 요인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일간지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의 다른 미디어 도구보다 상세하게 의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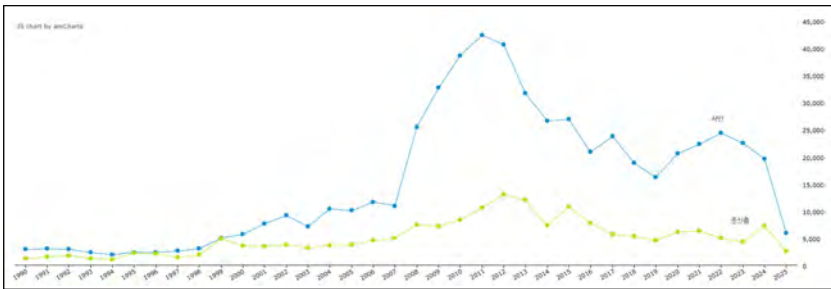
최근의 분배 개선이 사람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이유를 살피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이 절에서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서민”과 “중산층”을

16)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뉴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생산된 방대한 양의 뉴스 기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여 연구자와 일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KINDS는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포괄하며, 키워드, 언론사, 발행 날짜 등 여러 조건을 조합하여 원하는 뉴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명사 중심으로 형태소 분석을 거쳐 전처리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함하는 기사를 분석하였다. [부록 그림 1-1]에서 보면, 2008년 위기 국면에서 특히, 서민과 관련한 기사가 크게 늘어났고, 분배가 개선되는 국면에서 줄어들긴 하지만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중산층 관련 기사는 오히려 2012년에 정점을 보이고 역시 일정 수준의 기사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불평등이 심화되기 이전 시기보다 분배 개선이 된 이후에도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범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부록 그림 1-1] 서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하는 기사 추이

(단위: 개)



출처: “서민, 중산층을 핵심어로 하는 기사 검색”, 한국언론진흥재단 (n.a.) 빅카인즈. 2025. 5.14. 검색,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에서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일간지 12종, 경제일간지 13종, 지역일간지 45종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임.

이 절에서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 2010년부터 최근까지 총 56,817건(서민 관련 기사 50,888건, 중산층 관련 기사 5,929건)으로 기사 제목에 ‘중산층’, ‘서민’을 각 최소 1회 이상 포함한 기사만을 포함하여 이들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 낮은 주관적 분배 인식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카인즈(KINDS)를 통해서 전국일간지 12종, 경제일간지 13종, 지역일간지 45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카인즈

자체의 형태소 분석 방식¹⁷⁾을 통해 제목과 본문의 수집 핵심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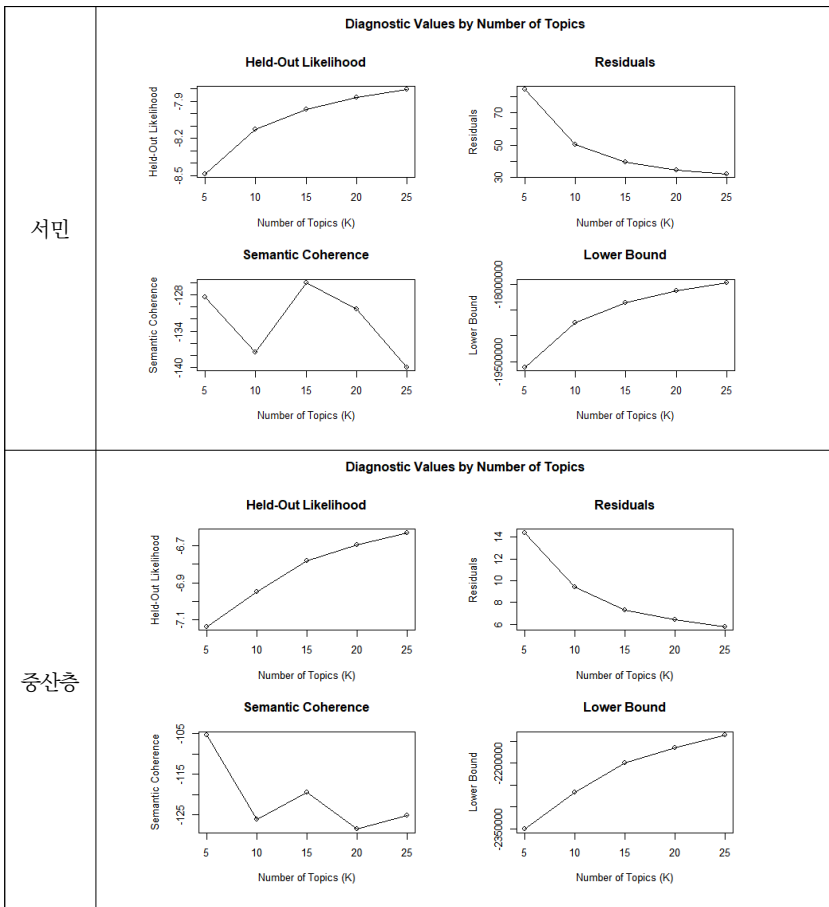
수집한 텍스트 자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구조적 토픽 모델(Structured Topic Model, STM)을 적용하여 주요 주제(topic)를 추출하고, 시간에 따른 주제의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Structural Topic Modeling)을 활용하였다. 이는 텍스트 자료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계적 접근 중 하나이다.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 주제 수 산출은 각 주제들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배타적인지(상호 배타성)와 주제 내 용어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지(응집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주제 수가 늘어남에 따른 설명력 증가와 잔차 감소를 비교하여 설명력 증가를 극대화하면서도 잔차를 최소화하는 조합에서의 주제 수를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잔차를 더 줄일 수 있는 집단의 수가 있더라도, 상호배타성과 응집성, 설명력 그리고 각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최종적인 주제 수를 판단한다. “서민”, “중산층” 관련 기사에 대한 최적 주제 수 산출을 위한 모형은 이어지는 [부록 그림 1-2]과 같고, 최적 주제 수는 15개로 하였다.

또한, 단어 임베딩(Word Embeddig) 방법인 word2vec 분석을 적용하여 서민, 중산층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판별하기 위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Word2Vec은 단어의 의미를 벡터 공간에 표현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공간상에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단어는 비슷한

17) 형태소 분석은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해하는 반면, 바이그램은 단어나 문자의 연속된 쌍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형태소 분석은 언어학적 규칙에 기반해 정확한 분류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자연어 처리의 핵심 절차이다. 이 분석에서는 KINDS에서 자체적으로 탑재한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다.

의미를 가진다라는 가설에 기반하는 모형으로, 이는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하고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데 유용하다. 예를 들어, ‘개’ 벡터와 ‘고양이’ 벡터는 ‘개’ 벡터와 ‘자동차’ 벡터보다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측 방법으로는 문맥 정보를 더 잘 포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Skip-gram을 활용하였다.

[부록 그림 1-2] 최적 주제 수 산출을 위한 모형 비교



출처: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부록 2]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사례 수

구분	복지 부문 표본								전체 표본								(단위: 명)
	시계열1								시계열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2020	2021	2022	
전체	28,207	26,672	25,653	25,273	25,130	24,426	24,426	24,027	46,847	45,095	44,034	42,464	44,034	42,464	42,464	41,776	41,293
	5,944	5,375	5,026	4,749	4,546	4,300	4,300	4,176	7,588	7,086	6,671	6,149	6,671	6,149	5,857	5,553	
	18,541	17,507	16,736	16,526	16,432	15,845	15,845	15,359	29,990	28,417	27,324	26,108	27,324	26,108	25,422	24,844	
	3,722	3,790	3,891	3,998	4,152	4,281	4,281	4,492	9,269	9,592	10,039	10,207	10,039	10,207	10,497	10,896	
경상소득 1분위	5,756	5,766	5,652	5,497	5,565	5,550	5,386	5,437	10,641	10,196	10,430	10,245	10,434	10,247	10,311	10,421	
경상소득 3분위	5,569	5,281	4,848	5,000	4,917	4,779	4,885	4,842	9,379	9,113	9,001	8,614	8,974	8,623	8,477	8,345	
경상소득 4분위	5,454	5,042	5,017	4,819	4,818	4,695	4,760	4,671	9,041	8,713	8,396	8,246	8,479	8,202	7,912	7,736	
경상소득 5분위	5,582	5,173	4,979	4,951	4,799	4,656	4,639	4,614	9,051	8,667	8,225	7,815	8,163	7,855	7,518	7,300	
경상소득 6분위	5,846	5,410	5,157	5,006	5,031	4,746	4,756	4,463	8,735	8,406	7,982	7,544	7,984	7,537	7,558	7,491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Gap Between Income Distribution and Subjective Inequality

Project Head: Ko, Hyejin

We investigate the reasons for negative perceptions of inequality despite recent improvements in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household income is becoming more equal, deepening inequality in other economic resources, such as consumption, wages, and assets, contributes to negative perceptions of distribution. Above all, the deepening of asset inequality appears to be a powerful driver of these negative percep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vide the policy targets into two groups: a low-income/low-asset group and a middle-income group. For the former, we propose several policies with the goal of securing household economic liquidity; for the latter, we suggest policy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asset accumulation.

Key words: Subjective Inequality, Perception, Consumption, Wage, Asset

Co-Researchers: Kang, Shin-Wook · Lee, Wonjin · Ryoo, Jina · Kim, Jong-Woo